

중소기업 지원 재정사업 성과평가

2016. 12.

박노욱 · 강희우 · 이상현 · 표한형

서 언

국제화에 따라 개방경제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기업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감소하고, 혁신보다는 독과점적 위치를 이용한 비생산적인 활동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불평등의 심화라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의 육성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과 고용 성장의 둔화도 이러한 추세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 속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사업은 각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그 효과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재정사업 지원금액은 연간 14조원을 넘어서고, 한 기업당 수혜금액은 2014년도 기준 평균 4,190만원으로(중앙부처 사업 기준, 수혜기업당 평균 수혜액 기준),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 수준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재정지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진단과 향후 추진 방향의 설정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성과평가 정보의 생산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자체의 한계와 사업의 효과성 자체에 대한 의문 등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시도를 하였다. 보다 포괄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혜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가장 최근의 연구결과도, 보다 엄밀한 방식으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성과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두 시점 간에서 중소기업 지원금융 수혜기업의 변화를 측정할 것이다. 실제 수혜기업이나 비수혜기업이 두 시점 사이에 어떤 다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두 시점 간의 정보를 활용하여 평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혜 현황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수혜기업의 변화를 성향점수매칭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형분류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새로운 분류체계를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와 성과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업의 목적과 사업수단 및 사업대상에 따른 분류체계를 제대로 활용하면 분절화, 중복 및 중첩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관리와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의 총괄 연구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본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진을 주축으로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시스템의 데이터의 활용과 자문을 제공한 중소기업연구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후속 연구가 중소기업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과정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김사랑 연구원 및 장민혜 연구원과 본 보고서의 편집과 출판에 기여한 담당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6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현황 및 기존 연구에서의 쟁점 정리를 출발점으로 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새로운 분류체계 개발과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거 연구에 비해 포괄적인 효과성 분석을 시도했다는 것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사업관리와 성과평가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새로운 분류체계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시도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는, 과거 연구에 비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업유형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매출액, 고용인원 수, 부가가치에 대해 지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유형별로 지원금액에 비해 기업의 매출액 증가분이 더 커서, 비용 대비 효과성이 양호한 것으로 일차적으로 나타났다. 중기 사업의 효과성도 지원시점에서 3년이 경과해도 대체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사업유형 간 중복수혜로 인한 효과도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사업유형 간 중복수혜가 긍정적이라는 것은,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다른 필요를 종합 사업의 형태로 지원할 경우, 사업의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다만 동일 사업유형 내의 중복수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동일 유형의 중복수혜 효과는 다음 연구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복수혜의 부정적인 측면은 기업의 실제 수요와 성과와 관계없이 동일 기업이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고 연명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은 동일 사업유형 내의 중복수혜의 효과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성 분석 결과, 다른 연구에 비해 양호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본 연구

가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수혜기업을 보다 완벽히 선별할 수 있었다. 반면에 기존 연구들은, 특정 사업유형에만 집중하여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비수혜기업 중에도 다른 유형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수혜 기업과 비수혜기업이 보다 완벽하게 식별하여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가 보다 극대화되어 식별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런 결과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가능하다고 보인다. 첫째,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수혜기업의 매출액 고용인원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보다 분명히 밝혀졌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시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매칭을 통해 유사한 속성을 가진 수혜 및 비수혜 기업을 비교분석하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최대한 이러한 선택 편이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통상적인 기업 특성 변수로 잡히지 않는 무형의 선택편이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다.

연구기간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체로도 과거 연구와 차별화되는 의미는 있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분류체계에 기반하여 사업유형별 지원 효과와 중복 유형별 효과를 식별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존 분류체계에서는 금융지원 내에 다양한 성격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수단인 금융을 지원 영역으로 간주하여 분류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로 인해 실제 어떤 사업수단으로 어떤 영역에 대한 지원을 어떤 전달체계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보다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활용한다면, 실증분석을 기반으로 보다 구체화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새로운 분류체계의 개발과 포괄적인 중소기업 수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각도의 효과성 분석이라는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일반적인 사업 정보와 더불어, 지원 목적(투입 요소지원, 시장매칭 지원, 컨설팅 및 정보 제공), 지원대상(규모, 업종, 기술 기준, 신용 기준 등), 지원수단(활동 및 수행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면, 지원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기반하여 자원배분과 신규 사업을 개발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목적은 수혜기업에 대한 정보 생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어떤 관점에서 유형화해서 분석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류체계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사업 목적의 명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사업들 중에는 사업의 목적이 추상적으로 설정되었던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본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사업의 목적과 초점을 명확히 하고 성과관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업 목적에 따라 어떠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중앙부처나 사업 수행기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분석이 가능하게 되므로,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사업수단이 무엇인지도 평가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존 사업을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면, 기존 사업의 분절화, 중복 및 중첩문제 해소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 생산도 가능하다. 그리고 서비스 수행기관과 사업 정보의 연계를 통해, 실제 전달체계 분석을 위한 기본 정보 생산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필요에 따라 중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효과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자체의 효과성은 지원 이후 3년까지의 중단기적 시계에서는 존재한다고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조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면, 보다 세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왜곡현상의 발생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한다. 수혜기업의 성과는 개선된다는 일차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자체를 제대로 논하기 위해서는,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차이만을 분석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의 사증손실, 대체효과 그리고 기타 시장 왜곡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차이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존재하였으나, 본 연구는 3년 시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성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지원사업의 종합적 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향후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와 결합하여 보다 완결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 | |
|--------------------------------|----|
| I. 서론 | 21 |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1 |
| 가. 연구의 배경 | 21 |
| 나.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24 |
| 다. 연구의 차별성 | 25 |
| 2. 데이터 및 분석 범위 | 26 |
| 가. 통합관리시스템의 배경 및 특성 | 26 |
| 나. 분석대상 및 범위 | 27 |
| II.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지원사업 현황 | 30 |
| 1. 중소기업 생태계 현황 | 30 |
| 가. 중소기업 정의 | 30 |
| 나. 구성 | 33 |
| 2.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현황 | 38 |
| 가. 정의 | 38 |
| 나. 예산 | 39 |
| 다. 부처별 사업 규모 | 41 |
| 라. 서비스 전달체계 | 44 |
| 3. 중소기업 관련 이슈 | 45 |
| 가. 중소기업 현황과 문제점 | 45 |
| 나.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운영방식의 문제점 | 47 |
| III.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혜 분석 | 49 |
| 1. 수혜 현황 | 49 |
| 가. 지원주체별 지원현황 분석 | 49 |

| | |
|---|-----------|
| 나. 단년도 수혜금액 분석 | 52 |
| 2. 중복수혜 현황 분석 | 53 |
| 가. 사업 중복수혜 현황 | 53 |
| 나. 사업군 중복수혜 현황 | 56 |
| 다. 사업군 내 중복수혜 현황 | 57 |
| 라. 지속 및 반복수혜 현황 | 59 |
| 마. 중복수혜에 대한 조치 및 방지 | 61 |
| 3. 효과성 분석을 위한 중복 유형의 정의 | 62 |
| IV.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쟁점 | 64 |
| 1.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4 |
| 2.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 | 66 |
| 가. 금융부문 | 67 |
| 나. 수출 및 기술부문 | 76 |
| 3.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체계 개선 | 76 |
| 4. 중복수혜의 정의와 이슈 | 77 |
| 가. 개념적 정의 | 77 |
| 나. 중복판단의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 78 |
| V.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류체계 | 81 |
| 1.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의 틀 | 81 |
| 가. 기존 분류체계 검토 | 82 |
|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류체계의 구성 | 91 |
| 2. 분류체계 개발안 | 102 |
| 가. 목적 | 102 |
| 나. 대상 | 104 |
| 다. 수단 | 109 |

| | |
|------------------------------------|------------|
| 3. 분류체계(안)을 활용한 사업구성 검토 | 115 |
| 가. 분류체계(안)을 활용한 사업 수 기초통계 | 115 |
| 나. 분류체계(안)을 활용한 사업예산 기초통계 | 125 |
| VI.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 128 |
| 1. 분석 전략 | 128 |
| 가. 기본 개념 | 128 |
| 나. 매칭 | 130 |
| 다. 성향점수 가중 최소자승추정법 | 132 |
| 라. 회귀조정 | 133 |
| 마. 분석 절차 | 134 |
| 바. 재정지원 평가 | 136 |
| 2. 데이터 및 분석대상 기초통계 | 137 |
| 3. 사업군별 분석 결과 | 139 |
| 가. 창업 | 140 |
| 나. 금융 | 144 |
| 다. 기술 | 146 |
| 라. 수출 | 148 |
| 마. 내수 | 151 |
| 바. 경영 | 152 |
| 4. 사업군별 중장기 효과 분석 | 154 |
| 가. 창업 | 155 |
| 나. 금융 | 156 |
| 다. 기술 | 157 |
| 라. 수출 | 158 |
| 마. 내수 | 159 |
| 바. 경영 | 160 |

| | |
|---|-----|
| 5. 사업군별 B/C 분석 | 161 |
| 6. 부가가치 분석 | 162 |
| 가. 분석방법 | 163 |
| 나. 분석결과 | 163 |
| 7. 사업군 간 중복수혜 효과 분석 | 165 |
| 가. 분석방법 | 166 |
| 나. 분석결과 | 167 |
| 8. 분석의 한계 | 174 |
| | |
| Ⅶ.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75 |
| 1. 연구 결과 요약 및 한계 | 175 |
| 2. 정책적 시사점 | 177 |
| | |
| 참고문헌 | 179 |
| | |
| 〈부 록 1〉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류체계 및 정보 입력 방법 | 184 |
| 〈부 록 2〉 사업군 중복수혜의 조합 | 188 |
| 〈부 록 3〉 성장단계 객관적 기준 설정을 위한 문헌조사 | 191 |

표목차

| | |
|--|----|
| 〈표 Ⅰ- 1〉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내용 | 26 |
| 〈표 Ⅰ- 2〉 소관기관 유형별 수혜기업 수 | 28 |
| 〈표 Ⅰ- 3〉 소관기관 유형별 수혜 금액 | 29 |
| 〈표 Ⅱ- 1〉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 기준 | 30 |
| 〈표 Ⅱ- 2〉 중소기업 상한 기준 개정 내용 | 32 |
| 〈표 Ⅱ- 3〉 소기업 업종별 규모 기준 | 32 |
| 〈표 Ⅱ- 4〉 기업규모별 사업체 추이 | 35 |
| 〈표 Ⅱ- 5〉 기업규모별 사업체 비율 추이 | 36 |
| 〈표 Ⅱ- 6〉 기업규모별 종사자 비율 추이 | 37 |
| 〈표 Ⅱ- 7〉 중소기업 지원비중에 따른 사업개요(2011년도 기준) | 38 |
| 〈표 Ⅱ- 8〉 연도별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 | 39 |
| 〈표 Ⅱ- 9〉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부문별 사업 수 현황 | 39 |
| 〈표 Ⅱ-10〉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부문별 지원금(집행금액) 현황 | 40 |
| 〈표 Ⅱ-11〉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부문별 수혜기업 수 현황 | 40 |
| 〈표 Ⅱ-12〉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부문별 사업당 집행금액 | 40 |
| 〈표 Ⅱ-13〉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부문별 수혜기업당 지원금액 | 41 |
| 〈표 Ⅱ-14〉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규모 | 41 |
| 〈표 Ⅱ-15〉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부문별 사업 수 현황(2014년 기준) | 42 |
| 〈표 Ⅱ-16〉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부문별 예산 현황(2014년 기준) | 43 |
| 〈표 Ⅱ-17〉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 이용 현황(2010~2015년) | 44 |
| 〈표 Ⅱ-18〉 중소기업 자금공급 추이 | 46 |
| 〈표 Ⅲ- 1〉 정책 제공 주체별 수혜기업 현황: 수혜기업 수 | 50 |
| 〈표 Ⅲ- 2〉 정책 제공 주체별 수혜기업 현황: 기업당 수혜금액 평균 | 50 |

| | |
|--|----|
| 〈표 III-3〉 정책 제공 주체별 수혜기업 현황: 기업당 평균 수혜사업 수 | 51 |
| 〈표 III-4〉 정책 제공 주체별 수혜기업 현황: 사업당 1기업 평균 지원금액 | 52 |
| 〈표 III-5〉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혜 현황 | 53 |
| 〈표 III-6〉 기업 중복수혜 사업 수별 기업 분포 | 54 |
| 〈표 III-7〉 기업 중복수혜 사업 수별 수혜금액(총액) | 54 |
| 〈표 III-8〉 기업 중복수혜 사업 수별 수혜금액(사업당 평균) | 55 |
| 〈표 III-9〉 중복 사업 수별 수혜기업의 평균 정보 | 55 |
| 〈표 III-10〉 기업 중복수혜 사업군 수별 기업 분포 | 56 |
| 〈표 III-11〉 기업 중복수혜 사업군 수별 평균 수혜금액(총액) | 56 |
| 〈표 III-12〉 기업 중복수혜 사업 수별 수혜금액(사업당 평균) | 57 |
| 〈표 III-13〉 단일 사업군 내 중복수혜 기업 수 | 58 |
| 〈표 III-14〉 단일 사업군 내 중복수혜 기업 비중 | 58 |
| 〈표 III-15〉 사업군별 단일사업 지속수혜 현황(사업 수) | 59 |
| 〈표 III-16〉 사업군별 단일사업 지속수혜 현황(사업 수 비중) | 59 |
| 〈표 III-17〉 사업군별 단일사업 지속수혜 현황(누적 수혜금액) | 60 |
| 〈표 III-18〉 사업군별 단일사업 지속수혜 현황(연평균 수혜금액) | 61 |
| 〈표 III-19〉 최고액 수혜기업 지원금액(1기업당 총액 기준) | 62 |
| 〈표 III-20〉 기업 수혜의 중복 타입 | 63 |
| 〈표 IV-1〉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 66 |
| 〈표 IV-2〉 기존연구에서의 금융지원사업 효과: 수익성 | 72 |
| 〈표 IV-3〉 기존연구에서의 금융지원사업 효과: 고용효과 | 73 |
| 〈표 IV-4〉 기존연구에서의 수출지원사업 효과 | 74 |
| 〈표 IV-5〉 기존연구에서의 기술지원사업 효과 | 75 |
| 〈표 IV-6〉 기존연구에서의 성과관리체계 관련 연구 | 75 |
| 〈표 IV-7〉 정부사업 중복 관련 용어의 정의 | 78 |

| | |
|---|-----|
| 〈표 IV-8〉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유사·중복 식별 기준 | 79 |
| 〈표 IV-9〉 정부사업 중복의 범주 | 80 |
| 〈표 V-1〉 중소기업청 정책디렉토리 코드체계 | 83 |
| 〈표 V-2〉 중소기업청 정책디렉토리 코드분류 - 지원대상 | 83 |
| 〈표 V-3〉 중소기업청 정책디렉토리 코드분류 - 지원사업 | 84 |
| 〈표 V-4〉 중소기업청 정책디렉토리 분류체계 - 지원분야 | 85 |
| 〈표 V-5〉 분류체계안(KD): 지원대상 | 86 |
| 〈표 V-6〉 분류체계안(KD): 지원 목적 | 88 |
| 〈표 V-7〉 분류체계안(KD): 지원 수단 | 89 |
| 〈표 V-8〉 사업 분석 시에 고려되어야 할 항목 | 90 |
| 〈표 V-9〉 분류체계 프레임(안) | 91 |
| 〈표 V-10〉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목표 및 목적(투자적 관점) 93 | |
| 〈표 V-11〉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목적(복지적 관점) | 93 |
| 〈표 V-12〉 「중소기업진흥법」상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체계(1) | 95 |
| 〈표 V-13〉 「중소기업진흥법」상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체계(2) | 96 |
| 〈표 V-14〉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한 공고조건(정량기준) | 98 |
| 〈표 V-15〉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한 공고조건(비정량기준) | 99 |
| 〈표 V-16〉 재정속성정보 분류체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수단 | 101 |
| 〈표 V-17〉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기초(참고용) | 102 |
| 〈표 V-18〉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목적 분류 항목 | 104 |
| 〈표 V-19〉 대상 분류 항목(기업규모) | 105 |
| 〈표 V-20〉 대상 분류 항목(업력 및 성장단계) | 106 |
| 〈표 V-21〉 대상 분류 항목(산업 및 업종) | 107 |
| 〈표 V-22〉 대상 분류 항목(기업특화 특성) | 108 |
| 〈표 V-23〉 대상 분류 항목(기술기준, 신용 및 사업자 기준) | 109 |
| 〈표 V-24〉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류체계: 수단(활동 + 수행방식) 분류 항목 | 110 |

| | |
|---|-----|
| 〈표 V-25〉 분류체계 안(전체 - 목적) | 111 |
| 〈표 V-26〉 분류체계 안(전체 - 대상) | 112 |
| 〈표 V-27〉 분류체계 안(전체 - 수단) | 115 |
| 〈표 V-28〉 분류체계 분석대상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부처별 통계 | 116 |
| 〈표 V-29〉 목적(GOAL): 지원 목적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 | 117 |
| 〈표 V-30〉 대상(TARGET): 지원대상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 | 118 |
| 〈표 V-31〉 수단(ACTIVITY): 활동 및 상위 수행방식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 .. | 119 |
| 〈표 V-32〉 수단(ACTIVITY): 세부 수행방식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 | 120 |
| 〈표 V-33〉 목적·수단 교차분석: 운영자금분야의 수단별 사업 수 | 121 |
| 〈표 V-34〉 목적·수단 교차분석: 자재분야의 수단별 사업 수 | 122 |
| 〈표 V-35〉 목적·수단 교차분석: 인력분야의 수단별 사업 수 | 122 |
| 〈표 V-36〉 목적·수단 교차분석: 기술분야의 수단별 사업 수 | 123 |
| 〈표 V-37〉 목적·수단 교차분석: 장비/시설분야의 수단별 사업 수 | 123 |
| 〈표 V-38〉 목적·수단 교차분석: 공간/입지분야의 수단별 사업 수 | 124 |
| 〈표 V-39〉 사업 수 및 예산 기초통계 운영자금분야 | 125 |
| 〈표 V-40〉 사업 수 및 예산 기초통계 자재분야 | 126 |
| 〈표 V-41〉 사업 수 및 예산 기초통계 인력분야 | 126 |
| 〈표 V-42〉 사업 수 및 예산 기초통계 기술분야 | 126 |
| 〈표 V-43〉 사업 수 및 예산 기초통계 장비/시설분야 | 126 |
| 〈표 V-44〉 사업 수 및 예산 기초통계 공간/입지분야 | 127 |
| 〈표 V-45〉 종합적 성격을 가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 127 |
| 〈표 VI- 1〉 변수 정의 | 136 |
| 〈표 VI- 2〉 각 사업군의 연도별 표본 수 | 138 |
| 〈표 VI- 3〉 창업부문 성향점수 추정결과 | 141 |
| 〈표 VI- 4〉 창업부문 성향점수의 질 평가 | 141 |

| | |
|---|-----|
| 〈표 VI- 5〉 매칭 전·후 공변량 차이에 대한 편익 및 t-검정 결과: 2011년 창업부문 .. | 142 |
| 〈표 VI- 6〉 창업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매출액 | 143 |
| 〈표 VI- 7〉 창업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고용 | 143 |
| 〈표 VI- 8〉 금융부문 성향점수 추정결과 | 144 |
| 〈표 VI- 9〉 금융부문 성향점수의 질 평가 | 145 |
| 〈표 VI-10〉 금융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매출액 | 146 |
| 〈표 VI-11〉 금융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고용 | 146 |
| 〈표 VI-12〉 기술부문 성향점수 추정결과 | 147 |
| 〈표 VI-13〉 기술부문 성향점수의 질 평가 | 147 |
| 〈표 VI-14〉 기술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매출액 | 148 |
| 〈표 VI-15〉 기술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고용 | 148 |
| 〈표 VI-16〉 수출부문 성향점수 추정결과 | 149 |
| 〈표 VI-17〉 수출부문 성향점수의 질 평가 | 149 |
| 〈표 VI-18〉 수출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매출액 | 150 |
| 〈표 VI-19〉 수출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고용 | 150 |
| 〈표 VI-20〉 내수부문 성향점수 추정결과 | 151 |
| 〈표 VI-21〉 내수부문 성향점수의 질 평가 | 151 |
| 〈표 VI-22〉 내수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매출액 | 152 |
| 〈표 VI-23〉 내수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고용 | 152 |
| 〈표 VI-24〉 경영부문 성향점수 추정결과 | 153 |
| 〈표 VI-25〉 경영부문 성향점수의 질 평가 | 153 |
| 〈표 VI-26〉 경영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매출액 | 154 |
| 〈표 VI-27〉 경영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고용 | 154 |
| 〈표 VI-28〉 각 사업군별 B/C 분석 결과 | 162 |
| 〈표 VI-29〉 창업, 금융, 기술부문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부가가치 | 164 |
| 〈표 VI-30〉 수출, 내수, 경영부문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부가가치 | 165 |

그림목차

| | |
|---|-----|
| [그림 I- 1] 분석대상 사업의 개요 | 28 |
| [그림 II- 1] 국내총생산 대비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대출보증의 비중 | 47 |
| [그림 III- 1] 중복 타입의 정의(시간 프레임을 기준으로) | 63 |
| [그림 VI- 1] 각 사업군별 매출액 증가 추이 | 138 |
| [그림 VI- 2] 창업부문 지원정책의 중장기 효과 분석 | 155 |
| [그림 VI- 3] 금융부문 지원정책의 중장기 효과 분석 | 156 |
| [그림 VI- 4] 기술부문 지원정책의 중장기 효과 분석 | 157 |
| [그림 VI- 5] 수출부문 지원정책의 중장기 효과 분석 | 158 |
| [그림 VI- 6] 내수부문 지원정책의 중장기 효과 분석 | 159 |
| [그림 VI- 7] 사업부문 지원정책의 중장기 효과 분석 | 160 |
| [그림 VI- 8] 사업군 간 중복수혜에 따른 성과분석: 매출액 | 167 |
| [그림 VI- 9] 사업군 간 중복수혜에 따른 성과분석: 고용 | 169 |
| [그림 VI-10] 사업군 간 중복수혜에 따른 성과분석: 부가가치 | 171 |
| [그림 VI-11] 사업군 간 중복수혜에 따른 성과분석: 통합분석(2011~2014) | 173 |

부록 표목차

| | |
|---|-----|
| 〈부록 표-1〉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류체계의 구성 항목 | 186 |
| 〈부록 표-2〉 중복수혜 부문별 조합 및 비중: 단일사업군 수혜 | 188 |
| 〈부록 표-3〉 중복수혜 부문별 조합 및 비중: 2사업군 수혜 | 188 |
| 〈부록 표-4〉 중복수혜 부문별 조합 및 비중: 3사업군 수혜(2014년) | 189 |
| 〈부록 표-5〉 중복수혜 부문별 조합 및 비중: 4사업군 수혜(2014년) | 189 |
| 〈부록 표-6〉 중복수혜 부문별 조합 및 비중: 5사업군 수혜(2014년) | 190 |
| 〈부록 표-7〉 성장단계 관련 연구 요약 | 194 |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국제화에 따라 개방경제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기업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감소하고, 혁신보다는 독과점적 위치를 이용한 비생산적인 활동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불평등의 심화라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의 육성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과 고용 성장의 둔화도 이러한 추세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 속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사업은 각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그 효과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의 성과를 제대로 보여준 평가 결과는 거의 없으며, 어떤 유형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고 Gu et al.(2008: table 2)은 보고 있다. UNESCAP (2012: 190-192)는 중소기업 사업평가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이나 정책이 정책목표와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수준이라고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재정사업 지원금액은 연간 14조원을 넘어서고, 한 기업당 수혜금액은 2014년도 기준 평균 4,190만원으로(중앙부처 사업 기준, 수혜기업당 평균 수혜액 기준),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 수준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재정지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중소기업 지원사

업의 효과성 진단과 향후 추진 방향의 설정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성과평가 정보의 생산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파악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내재적인 어려움이 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혜 중소기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분권화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졌을 경우, 서비스 전달기관으로부터 수혜기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는 수혜기업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취합되고 있지 않으며,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 실적 중심의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다.¹⁾ 우리나라의 연구들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수혜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확보하여 성과평가 분석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해, 금융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의 수혜 현황까지 파악이 가능한 여건은 마련되었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미치는 전체적 영향 파악이 어렵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는 직접 수혜기업의 변화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변화에 대한 분석도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지원사업으로 인해 사중손실이나 시장왜곡의 부작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범위 설정에 따른 부작용인 피터팬 효과(lock-in effect),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을 대체하는 효과(displacement effect),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좀비기업 양산 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사업평가를 위해서는 수혜기업의 성장 변화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장의 정체 현상, 비수혜기업의 역차별 현상 등 부작용의 발생 여부를 포함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정책의 영향까지는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장 전반에 미치는 정책의 영향에 대한 분석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혜기업 자체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주로 수혜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실적의 개선이 있지만 중장기적인 성과는 불

1) 미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담당자 면담 내용, 2016. 10. 11.

확실하다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 동향은, 수혜기업과 비수혜, 기업을 성향점수매칭(PSM) 방식으로 매칭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수혜기업의 정보를 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확보하고, 일반적인 개별 기업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여, 양자를 유사한 속성을 가진 기업끼리 매칭시켜서 분석한 것이다. 최근의 결과인 장우현 외(KDI, 2014)에 따르면, 수혜기업들이 비수혜기업보다 생존율은 높지만 성장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열위에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시장 전반에 미치는 거시적 효과성을 논할 필요도 없이, 수혜기업조차도 성과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관적인 결과인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자체의 한계와 사업의 효과성 자체에 대한 의문 등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시도를 하고자 한다.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보다 포괄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혜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가장 최근의 연구결과도, 보다 엄밀한 방식으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성과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두 시점 간에서 중소기업 지원금융 수혜기업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실제 수혜기업이나 비수혜기업이 두 시점 사이에 어떤 다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두 시점의 정보를 활용하여 평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혜 현황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수혜기업의 변화를 성향점수매칭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형분류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새로운 분류체계를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와 성과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사업 분류는 사업의 속성을 반영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실제 사업관리와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보다 세분화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나. 연구의 내용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차년도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중소기업 현황 및 사업 현황을 배경 정보로 제공한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정책 관련 기존의 연구를 리뷰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한다. 셋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책목표, 사업수단, 사업활동, 산출물, 수혜 대상 등을 기준으로 지원사업을 분류하여, 일차적인 사업의 유사·중복·분절화의 진단을 시도한다.

넷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혜 현황을 분석한다.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업 중복수혜 현황을 분석한다. 사업의 중복수혜가 기계적으로 예산의 낭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절하게 다양한 사업의 조합이 이루어지면, 시너지를 창출하여 지원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도출된 중복수혜 유형을 바탕으로, 중복수혜 기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1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지는 못했다. 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사업정보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1년이라는 연구기간 내에 실증분석에 반영하기는 어려웠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의 성과를 분석한다. 1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지원금액 대비 매출액의 증가, 부가가치 증가, 고용 증가 등을 점검하고자 한다. 일종의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을 시도한다.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있는 수혜기업과 KED에 있는 기업과의 PSM을 통해, 준 실험적 방식의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복수혜의 유형에 따른 성과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원사업이 적절하게 조합되면 성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지원금액 대비 성과 분석과 수혜의 중복 정도에 따른 성과개선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는 기존에는 없었

으므로, 본 연구의 기여라고 볼 수 있다.

다.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크게 두 영역에 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것과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정부예산서에 있는 모든 세부사업 자료이다. 중복수혜와 사업의 효과성 분석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있는 사업과 수혜기업의 데이터이다. 통합관리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는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관된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통합관리시스템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면, 순수하게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구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금융 지원사업 중심으로 두 시점 간의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동일 시점에서 금융사업 이외 사업의 수혜 여부도 알 수 없었고, 두 시점 간에 발생한 수혜 여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비교 분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 지원사업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사업에 대한 시계열 정보를 활용하여,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 유형의 사업 수혜를 통제할 수 있다.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도, 기존 연구에서 논의가 미흡했던 것이다. 지원금액 대비 효과성과 중복수혜의 유형에 따른 효과성의 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다. 다양한 부문의 사업을 동시에 수혜받는 경우에 대한 분석은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사업 현황 분석과 수혜 현황 분석을 위해 사업 목적, 수단, 활용, 산출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한다는 점도 기존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관점이다. 1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일차적인 수혜기업에의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도 수행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수혜유형이 실제 사업의 성과창출에 기여하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2. 데이터 및 분석 범위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사업과 수혜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므로, 통합관리시스템의 특성과 분석대상 사업의 범위를 기술하고자 한다.

가. 통합관리시스템²⁾의 배경 및 특성

1) 배경 및 필요성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유사중복 논란이 많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부처 간의 조율을 위해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이 개발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보를 모으는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사업, 조세 등 비예산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총망라하는 디렉토리 구축을 추진하였다. 정책디렉토리는 세부/내역/공고사업을 구조화(코드화)하여 관리하는 체계이며, 지원사업을 대상별, 분야별, 부처/기관별로 조회·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서비스 내용

〈표 1-1〉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내용

| 구분 | 이용관점 | 시스템 사용자 | 활용 서비스 |
|----------------|--|---------------------|--|
| 정책 수립 및 집행 담당자 | 중소기업 지원정책 기본방향 수립 및 조정 목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 정책의 수립, 집행 점검, 성과평가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집행결과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산하기관) | - 통합이력조회 - Sollim검증관리 - 경영실적관리 - 정책의사결정 - 중소기업 대외 포털 |
| 정책 수혜 대상자 | 공고사업 조회/선정 신청 및 결과 확인 등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사용 목적으로 활용 | 대국민, 중소기업 | - 사업관리 서비스 - 중소기업 대외 포털 (모바일 서비스 포함) |

자료: 중소기업청(2015), p. 3.

2) 중소기업청(2015), 일부 저자 요약

3) 시스템의 내용

통합관리시스템에는 사업지원 3년 전부터 지원 후 20년까지의 정보를 포함 또는 포함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158개 세부사업, 지자체 401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담겨 있는 지원이력, 사업 및 기업정보는 아래와 같다.

- ① 지원이력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정보, 대표자명, 신청일, 선정일, 선정금액, 지원일, 지원금액, 취급은행, 과제명, 과제번호 등
- ② 사업정보: 세부사업 정보, 소관부처, 수행기관, 사업내용, 지원대상, 예산정보
- ③ 기업정보: 매출액, 설립일, 휴폐업일, 수출액,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특허출원건수, 지식재산건수, 산업재산건수, 특허등록건수, 주소, 업종 코드, 유동·비유동 자산액, 유동·비유동 부채액, 자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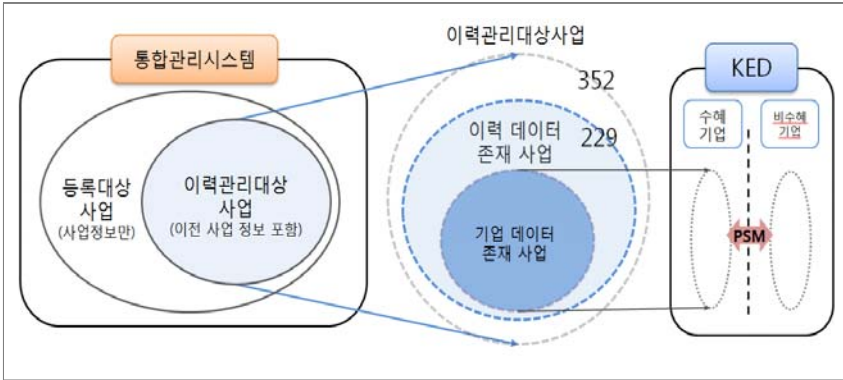
나. 분석대상 및 범위

1) 분석대상 사업의 범위

통합관리시스템상의 사업의 목록은 크게 등록대상 사업과 이력관리대상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의 차별성이 기업별 중복수혜의 효과성 여부를 식별하고 시계열 변화에 따른 중복의 효과를, 순수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와 분리해내는 데 있기 때문에, 수혜기업의 지원이력이 중요하다.

한편, 사업별로 수혜대상을 파악하고, 효과성 분별의 기반이 되는 매출액, 기업재무재표 등의 자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등의 연계기관 데이터가 사업의 수혜기업별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이력관리대상 사업 중 수혜기업 데이터와 매출액 등 기업정보 데이터가 존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1-1] 분석대상 사업의 개요



주: 사업 수는 2016년 예시
 자료: 저자 작성

2) 분석대상사업 소관기관

또한 본 연구는 중앙부처의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으므로, 지자체 사업만을 수혜받거나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사업을 중복으로 수혜받은 기업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1-2〉 소관기관 유형별 수혜기업 수

(단위: 개, %)

| 기간 | 중앙부처 | 지자체 | 중앙부처· 지자체 | 수혜기업 계 | 총사업체 수 | 수혜비율 |
|------------|----------------------|------------------|--------------------|--------------------|-----------|------|
| 2010 | 241,801 | 5,348 | 34,966 | 282,115 | 3,355,470 | 8.4 |
| 2011 | 190,997 | 8,882 | 35,864 | 235,743 | 3,470,034 | 6.8 |
| 2012 | 217,999 | 10,804 | 43,522 | 272,325 | 3,602,476 | 7.6 |
| 2013 | 290,230 | 11,511 | 59,731 | 361,472 | 3,676,876 | 9.8 |
| 2014 | 307,928 | 14,334 | 68,597 | 390,859 | 3,812,820 | 10.3 |
| 2015 | 362,390 | 14,433 | 79,014 | 455,837 | | |
| 전기 (비중) | 1,100,132 (84.34) | 52,554 (4.03) | 262,536 (20.13) | 1,304,427 (100) | |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표 1-3〉 소관기관 유형별 수혜 금액

(단위: 천원)

| 기간 | 중앙부처 사업 수혜 | 지자체 사업 수혜 | 중앙부처·지자체 중복 | 전체 |
|------|------------|-----------|-------------|---------|
| 2010 | 119,507 | 187,734 | 200,606 | 130,852 |
| 2011 | 152,646 | 148,322 | 232,063 | 164,565 |
| 2012 | 144,858 | 133,349 | 214,390 | 155,514 |
| 2013 | 147,648 | 118,104 | 223,017 | 159,162 |
| 2014 | 139,991 | 115,174 | 214,937 | 152,234 |
| 2015 | 126,770 | 132,731 | 219,113 | 142,965 |
| 전기간 | 201,367 | 165,319 | 266,805 | 230,189 |

주: 주관기관별 사업 총액을 수혜기업 수로 나눈 금액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3) 분석대상 기간

본 연구의 연구대상기간은 사업 분석과 효과성 분석의 대상 기간이 다르다.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은 2010년도부터 자료가 있으며, 통합관리시스템의 2015년 국세청 매출액 정보는 10월에, 비교대상 기업을 뽑아낼 KED의 2015년 기업 데이터는 8월에 입수된다. 그러므로 가용한 데이터의 시계는, 사업 분석을 위해서는 2010~2015년이고, 기업수혜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2010~2014년이다.

Ⅱ.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지원사업 현황

1. 중소기업 생태계 현황

가. 중소기업 정의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정의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은 크게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모 기준은 업종별 규모 기준과 업종에 관계없이 만족해야 하는 상한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14년까지는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업종별 규모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지표를 사용했다(〈표 II-1〉의 왼쪽 열). 또한 상한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자산총액, 자기자본, 평균 매출액을 지표로 사용했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으로 판정받지 못했다.

〈표 II-1〉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 기준

| 2015년 이전 | 업종 | 2015년 개정 이후 |
|-------------------------------------|------------------------|------------------------|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제조업(6개) ¹⁾ | 평균 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
| | 제조업(12개) ²⁾ | |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 평균 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
| | 도매 및 소매업 | |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광업 | |
| | 건설업 | |

〈표 II-1〉의 계속

| 2015년 이전 | 업종 | 2015년 개정 이후 |
|-------------------------------------|----------------------------|----------------------|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제조업(6개) ³⁾ | 평균 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운수업 | |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평균 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평균 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
| | 숙박 및 음식점업 | |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 |
| | 교육 서비스업 | |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주: 1)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 금속, 가구

2) 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식품품,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고무·플라스틱, 전자·컴퓨터·영상·통신, 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

3) 음료, 인쇄·복제기, 의료물질·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기타 제품 제조

자료: 장우현 외(2013) p.21, 〈표 I-2〉

하지만 2015년부터 업종별 규모 기준에서는 이전의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또는 자본금 지표를 평균 매출액 등으로 통일했다(〈표 II-1〉의 오른쪽 열).³⁾ 또한 상한 기준을 개정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경우만 중소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평균매출액 등이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을 의미한다.

기업으로 판정하지 않고 있다.

〈표 II-2〉 중소기업 상한 기준 개정 내용

| | ~2014년 | 2015년~ |
|------------|---|--------------|
| 중소기업 상한 기준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상시 근로자 수 1천명 미만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1,500억원 미만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저자 정리

중소기업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독립성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한 기업, 자산총액이 54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 최대출자자인 기업 등은 규모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2015년까지 소기업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정했는데, 2016년부터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만을 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소기업 판정의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 II-3〉에 정리했다. 중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한다.

〈표 II-3〉 소기업 업종별 규모 기준

| ~2015년 | 업종 | 2016년~ |
|-----------------|------------------------|-------------------|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평균 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
| | 제조업(15개) ¹⁾ | |
| | 제조업(9개) ²⁾ | |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 광업 | 평균 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
| | 운수업 | |
| | 건설업 | |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농업, 임업 및 어업 | |
| | 금융 및 보험업 | |

〈표 II-3〉의 계속

| ~2015년 | 업종 | 2016년~ |
|-----------------|-------------------------|------------------|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평균 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도매 및 소매업 | |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평균 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평균 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교육 서비스업 | |
| | 숙박 및 음식점업 | |
|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주: 1) 식료품, 음료, 의복, 가방·신발, 석유정제품, 화학, 의료물질·의약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 가공, 전자·컴퓨터·영상·통신·전기장비, 기계·장비, 자동차, 가구
 2) 담배, 섬유, 목재, 펄프·종이, 인쇄·복제기, 고무·플라스틱, 의료·정밀, 기타 운송장비, 기타 제품 제조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저자 정리

한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그 외의 업종의 경우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구성

위의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소상공인, 소기업 및 중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정의를 이용해 우리나라 경제

에서 중소기업 및 소기업,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위의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에 따라 판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만을 이용해 중소기업을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해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각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가늠한 후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결과가 아니고 상시 근로자 수와 종사자 수 사이의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간 오차가 있음을 미리 알려둔다.

아래 <표 II-4>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약 380만개의 사업체 중 약 350만개의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10명 미만인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10인 또는 5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 중 대부분은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자 수 10인 미만 사업체의 비중은 <표 II-5>에서 정확히 알 수 있다. 종사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체 비중이 최근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 중 다소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종사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체는 2000년대 중반부터 그 비중이 조금씩 상승해 현재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종사자 수 300인 미만의 사업체는 전체의 약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

4) 장우현 외(2013)는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사업체가 아닌 기업체 기준의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중소기업을 소상공인과 그 외의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상식적인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이보다 작음을 보였다.

〈표 II-4〉 기업규모별 사업체 추이

(단위: 개)

| 연도 | 합계 | 1~4인 | 5~9인 | 10~19인 | 20~49인 | 50~99인 | 100~299인 | 300~999인 | 1000인 이상 |
|------|-----------|-----------|---------|---------|--------|--------|----------|----------|----------|
| 1993 | 2,304,250 | 1,972,055 | 176,337 | 77,500 | 52,295 | 15,335 | 7,922 | 2,201 | 605 |
| 1994 | 2,518,454 | 2,157,970 | 192,424 | 84,542 | 55,853 | 16,247 | 8,487 | 2,411 | 520 |
| 1995 | 2,771,068 | 2,377,175 | 210,512 | 94,085 | 59,895 | 17,375 | 8,952 | 2,515 | 559 |
| 1996 | 2,807,802 | 2,400,242 | 222,765 | 96,336 | 59,434 | 17,091 | 8,864 | 2,452 | 618 |
| 1997 | 2,853,673 | 2,461,751 | 217,736 | 89,623 | 56,739 | 16,367 | 8,603 | 2,308 | 546 |
| 1998 | 2,785,659 | 2,438,466 | 188,802 | 82,269 | 50,766 | 15,048 | 7,821 | 2,006 | 481 |
| 1999 | 2,927,330 | 2,538,389 | 217,784 | 90,692 | 54,151 | 16,157 | 7,767 | 1,990 | 400 |
| 2000 | 3,013,417 | 2,570,762 | 246,124 | 107,399 | 60,858 | 17,935 | 8,143 | 1,885 | 311 |
| 2001 | 3,046,554 | 2,576,681 | 264,706 | 112,664 | 62,668 | 18,502 | 8,859 | 2,133 | 341 |
| 2002 | 3,131,963 | 2,635,372 | 281,309 | 119,272 | 65,799 | 18,926 | 8,811 | 2,104 | 370 |
| 2003 | 3,187,916 | 2,680,171 | 293,350 | 117,426 | 66,213 | 19,378 | 8,909 | 2,110 | 359 |
| 2004 | 3,189,890 | 2,694,469 | 282,485 | 115,707 | 65,115 | 20,406 | 9,154 | 2,186 | 368 |
| 2005 | 3,204,809 | 2,678,656 | 299,104 | 124,705 | 68,794 | 21,737 | 9,441 | 2,022 | 350 |
| 2006 | 3,226,569 | 2,697,593 | 296,994 | 127,288 | 70,543 | 21,874 | 9,820 | 2,084 | 373 |
| 2007 | 3,262,925 | 2,711,913 | 310,172 | 133,321 | 72,007 | 22,683 | 10,135 | 2,287 | 407 |
| 2008 | 3,264,782 | 2,712,483 | 309,810 | 131,797 | 72,807 | 24,208 | 10,748 | 2,486 | 443 |
| 2009 | 3,293,558 | 2,723,977 | 318,883 | 135,434 | 75,498 | 25,022 | 11,692 | 2,588 | 464 |
| 2010 | 3,355,470 | 2,804,620 | 283,154 | 142,500 | 82,251 | 27,102 | 12,552 | 2,727 | 564 |
| 2011 | 3,470,034 | 2,879,676 | 316,659 | 148,973 | 82,538 | 26,179 | 12,675 | 2,796 | 538 |
| 2012 | 3,602,476 | 2,963,377 | 366,259 | 146,803 | 82,543 | 27,164 | 12,987 | 2,800 | 543 |
| 2013 | 3,676,876 | 3,005,251 | 384,598 | 155,266 | 86,942 | 27,976 | 13,395 | 2,888 | 560 |
| 2014 | 3,812,820 | 3,099,823 | 414,516 | 161,661 | 90,939 | 28,773 | 13,652 | 2,899 | 557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접속일: 2016. 7. 29).

〈표 II-5〉 기업규모별 사업체 비율 추이

(단위: %)

| 연도 | 합계 | 1~4인 | 5~9인 | 10~19인 | 20~49인 | 50~99인 | 100~299인 | 300~999인 | 1000인 이상 |
|------|-----|------|------|--------|--------|--------|----------|----------|----------|
| 1993 | 100 | 85.6 | 7.7 | 3.4 | 2.3 | 0.67 | 0.34 | 0.10 | 0.03 |
| 1994 | 100 | 85.7 | 7.6 | 3.4 | 2.2 | 0.65 | 0.34 | 0.10 | 0.02 |
| 1995 | 100 | 85.8 | 7.6 | 3.4 | 2.2 | 0.63 | 0.32 | 0.09 | 0.02 |
| 1996 | 100 | 85.5 | 7.9 | 3.4 | 2.1 | 0.61 | 0.32 | 0.09 | 0.02 |
| 1997 | 100 | 86.3 | 7.6 | 3.1 | 2.0 | 0.57 | 0.30 | 0.08 | 0.02 |
| 1998 | 100 | 87.5 | 6.8 | 3.0 | 1.8 | 0.54 | 0.28 | 0.07 | 0.02 |
| 1999 | 100 | 86.7 | 7.4 | 3.1 | 1.8 | 0.55 | 0.27 | 0.07 | 0.01 |
| 2000 | 100 | 85.3 | 8.2 | 3.6 | 2.0 | 0.60 | 0.27 | 0.06 | 0.01 |
| 2001 | 100 | 84.6 | 8.7 | 3.7 | 2.1 | 0.61 | 0.29 | 0.07 | 0.01 |
| 2002 | 100 | 84.1 | 9.0 | 3.8 | 2.1 | 0.60 | 0.28 | 0.07 | 0.01 |
| 2003 | 100 | 84.1 | 9.2 | 3.7 | 2.1 | 0.61 | 0.28 | 0.07 | 0.01 |
| 2004 | 100 | 84.5 | 8.9 | 3.6 | 2.0 | 0.64 | 0.29 | 0.07 | 0.01 |
| 2005 | 100 | 83.6 | 9.3 | 3.9 | 2.1 | 0.68 | 0.29 | 0.06 | 0.01 |
| 2006 | 100 | 83.6 | 9.2 | 3.9 | 2.2 | 0.68 | 0.30 | 0.06 | 0.01 |
| 2007 | 100 | 83.1 | 9.5 | 4.1 | 2.2 | 0.70 | 0.31 | 0.07 | 0.01 |
| 2008 | 100 | 83.1 | 9.5 | 4.0 | 2.2 | 0.74 | 0.33 | 0.08 | 0.01 |
| 2009 | 100 | 82.7 | 9.7 | 4.1 | 2.3 | 0.76 | 0.35 | 0.08 | 0.01 |
| 2010 | 100 | 83.6 | 8.4 | 4.2 | 2.5 | 0.81 | 0.37 | 0.08 | 0.02 |
| 2011 | 100 | 83.0 | 9.1 | 4.3 | 2.4 | 0.75 | 0.37 | 0.08 | 0.02 |
| 2012 | 100 | 82.3 | 10.2 | 4.1 | 2.3 | 0.75 | 0.36 | 0.08 | 0.02 |
| 2013 | 100 | 81.7 | 10.5 | 4.2 | 2.4 | 0.76 | 0.36 | 0.08 | 0.02 |
| 2014 | 100 | 81.3 | 10.9 | 4.2 | 2.4 | 0.75 | 0.36 | 0.08 | 0.01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접속일: 2016. 7. 29).

〈표 II-6〉은 기업규모별로 종사자 수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는 종사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전체 종사자 수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300인 미만의 사업체에

서 약 90%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비중이 1993년 약 20%에서 2014년 약 10%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략적으로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종사자 수 30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표 II-6〉 기업규모별 종사자 비율 추이

(단위 : %)

| 연도 | 합계 | 1~4인 | 5~9인 | 10~19인 | 20~49인 | 50~99인 | 100~299인 | 300~999인 | 1000인 이상 |
|------|-----|------|------|--------|--------|--------|----------|----------|----------|
| 1993 | 100 | 28.9 | 10.1 | 8.8 | 12.9 | 8.35 | 10.00 | 8.56 | 12.40 |
| 1994 | 100 | 30.2 | 9.6 | 8.9 | 13.1 | 8.74 | 10.96 | 9.54 | 8.89 |
| 1995 | 100 | 30.6 | 9.7 | 9.2 | 12.9 | 8.60 | 10.64 | 9.23 | 9.19 |
| 1996 | 100 | 30.4 | 10.0 | 9.2 | 12.6 | 8.26 | 10.28 | 8.89 | 10.37 |
| 1997 | 100 | 32.5 | 10.1 | 9.0 | 12.5 | 8.24 | 10.40 | 8.59 | 8.67 |
| 1998 | 100 | 34.4 | 9.5 | 8.9 | 12.2 | 8.22 | 10.27 | 8.11 | 8.33 |
| 1999 | 100 | 34.9 | 10.6 | 9.4 | 12.5 | 8.45 | 9.73 | 7.76 | 6.68 |
| 2000 | 100 | 34.2 | 11.4 | 10.5 | 13.3 | 8.92 | 9.67 | 6.84 | 5.19 |
| 2001 | 100 | 32.9 | 11.9 | 10.6 | 13.3 | 8.91 | 10.12 | 7.43 | 4.89 |
| 2002 | 100 | 32.9 | 12.2 | 10.8 | 13.4 | 8.80 | 9.71 | 6.95 | 5.27 |
| 2003 | 100 | 32.8 | 12.5 | 10.6 | 13.4 | 8.92 | 9.59 | 6.93 | 5.26 |
| 2004 | 100 | 32.7 | 12.0 | 10.3 | 13.1 | 9.35 | 9.87 | 7.22 | 5.40 |
| 2005 | 100 | 31.5 | 12.5 | 10.9 | 13.5 | 9.78 | 9.96 | 6.62 | 5.23 |
| 2006 | 100 | 31.1 | 12.2 | 10.9 | 13.7 | 9.65 | 10.10 | 6.76 | 5.66 |
| 2007 | 100 | 30.6 | 12.3 | 11.1 | 13.5 | 9.68 | 10.06 | 7.08 | 5.75 |
| 2008 | 100 | 29.9 | 12.1 | 10.7 | 13.4 | 10.11 | 10.46 | 7.41 | 5.97 |
| 2009 | 100 | 29.0 | 12.1 | 10.7 | 13.4 | 10.15 | 10.95 | 7.59 | 6.11 |
| 2010 | 100 | 28.8 | 10.4 | 10.7 | 14.0 | 10.52 | 11.11 | 3.63 | 6.86 |
| 2011 | 100 | 28.8 | 11.4 | 10.9 | 13.6 | 9.94 | 10.92 | 3.51 | 6.70 |
| 2012 | 100 | 28.5 | 12.6 | 10.5 | 13.4 | 10.11 | 10.87 | 3.48 | 6.50 |
| 2013 | 100 | 28.0 | 12.7 | 10.7 | 13.6 | 10.05 | 10.91 | 3.59 | 6.59 |
| 2014 | 100 | 28.1 | 13.3 | 10.7 | 13.7 | 9.91 | 10.70 | 3.37 | 6.43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접속일: 2016. 7. 29)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물론 장우현 외(2013)에서 지적하였듯이 현재 중소기업의 정의는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상 분류체계를 차치하고 사업체의 규모만을 보았을 때 현재 중소기업의 범주 안에 있는 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2.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현황

이 절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현황을 소개한다.

가. 정의

여기서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이란⁵⁾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그 비중이 30% 이하더라도 중소기업지원이 주목적인 사업이다. 사업은 예산과목 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내역사업이 명백히 중소기업 지원인 경우에는 고려대상에 포함시켰다. 홍운선 외(2013)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대부분 70% 이상이지만, 30% 미만인 사업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I-7〉 중소기업 지원비중에 따른 사업개요(2011년도 기준)

(단위: 개, 백만원 %)

| 중소기업 지원 비율 | 지원사업 수 | 지원금액(비중) |
|-------------------------|--------|------------------|
|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30% 미만 사업 | 40 | 230,427 (2.3) |
|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30~50% 미만 사업 | 23 | 441,960 (4.3) |
|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50~70% 미만 사업 | 16 | 678,684 (6.7) |
|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70% 이상 사업 | 164 | 8,748,929 (86.7) |

자료: 홍운선 외, 2013, p. 33.

5) 「중소기업 지원예산 기준 작성 매뉴얼」(중소기업청·중소기업연구원 내부자료), 홍운선 외(2013)에서 재인용

나. 예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국가 전체의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6.5% 증가했다.

〈표 II-8〉 연도별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

(단위 : 억원, 개, %)

| 구분 | 2014 | | 2015 | | 2016 | | 전년 대비 증가율 (2015~2016) | |
|-----|---------|-------|---------|-------|---------|-------|--------------------------|-------|
| | 중기예산 | 사업수 | 중기예산 | 사업수 | 중기예산 | 사업수 | 중기예산 | 사업수 |
| 합계 | 136,491 | 1,332 | 152,832 | 1,287 | 162,732 | 1,294 | 6.48 | 0.54 |
| 중앙 | 115,292 | 229 | 129,987 | 246 | 140,494 | 264 | 8.08 | 7.32 |
| 지자체 | 21,199 | 1,103 | 22,845 | 1,041 | 22,238 | 1,030 | △2.66 | △1.06 |

자료: 중소기업청, 「제2차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위원회 자료」, 2016.

다음 표는 각 연도별 사업군별 재정지원사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5년 기준 기술 부문이 사업 수는 가장 많지만, 금융부문이 가장 많은 사업 예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혜기업 수도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9〉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부문별 사업 수 현황

(단위: 개, %)

| | 2012 | 2013 | 2014 | 2015 | 비중(2015) |
|------|------|------|------|------|----------|
| 금융 | 135 | 142 | 146 | 150 | 19.7 |
| 기술 | 88 | 133 | 146 | 157 | 20.6 |
| 인력 | 42 | 48 | 53 | 53 | 7.0 |
| 수출 | 122 | 145 | 161 | 155 | 20.3 |
| 내수 | 33 | 52 | 62 | 64 | 8.4 |
| 창업 | 26 | 34 | 35 | 33 | 4.3 |
| 경영 | 98 | 128 | 149 | 147 | 19.3 |
| 동반성장 | 3 | 4 | 4 | 3 | 0.4 |
| 계 | 547 | 686 | 756 | 762 | 100.0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표 II-10〉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부문별 지원금(집행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

| | 2012 | 2013 | 2014 | 2015 | 비중(2015) |
|-----------------|------------|------------|------------|------------|----------|
| 금융 | 7,105,293 | 8,311,800 | 7,744,066 | 9,312,609 | 38.5 |
| 기술 | 1,577,372 | 2,001,137 | 1,975,017 | 1,757,500 | 7.3 |
| 인력 | 419,649 | 498,157 | 525,667 | 481,023 | 2.0 |
| 수출 | 165,783 | 223,621 | 233,868 | 117,608 | 0.5 |
| 내수 | 6,130 | 13,395 | 20,007 | 37,459 | 0.2 |
| 창업 | 179,680 | 206,362 | 192,353 | 166,061 | 0.7 |
| 경영 | 103,518 | 182,877 | 256,299 | 210,401 | 0.9 |
| 동반성장 | 2,208 | 3,885 | 2,937 | 3,113 | 0.0 |
| 계 ¹⁾ | 19,117,058 | 22,878,583 | 21,897,491 | 24,168,435 | 100.0 |

주: 1) 계는 중복을 배제한 수치임.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표 II-11〉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부문별 수혜기업 수 현황

(단위: 개, %)

| | 2012 | 2013 | 2014 | 2015 | 비중(2015) |
|-----------------|---------|---------|---------|---------|----------|
| 금융 | 251,102 | 369,538 | 383,426 | 482,677 | 106.0 |
| 기술 | 5,321 | 8,836 | 17,773 | 16,820 | 3.7 |
| 인력 | 68,666 | 82,780 | 88,148 | 84,876 | 18.6 |
| 수출 | 13,828 | 15,666 | 16,476 | 15,258 | 3.4 |
| 내수 | 1,725 | 2,270 | 3,124 | 4,919 | 1.1 |
| 창업 | 4,409 | 5,822 | 5,824 | 6,093 | 1.3 |
| 경영 | 30,349 | 56,616 | 44,896 | 24,841 | 5.5 |
| 동반성장 | 161 | 182 | 132 | 150 | 0.0 |
| 계 ¹⁾ | 271,903 | 360,785 | 390,535 | 455,293 | 100.0 |

주: 1) 계는 중복을 배제한 수치임.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표 II-12〉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부문별 사업당 집행금액

(단위: 백만원, 배)

| | 2012 | 2013 | 2014 | 2015 | 규모 ¹⁾ (2015) |
|------|--------|--------|--------|--------|-------------------------|
| 금융 | 52,632 | 58,534 | 53,042 | 62,084 | 1.96 |
| 기술 | 17,925 | 15,046 | 13,528 | 11,194 | 0.35 |
| 인력 | 9,992 | 10,378 | 9,918 | 9,076 | 0.29 |
| 수출 | 1,359 | 1,542 | 1,453 | 759 | 0.02 |
| 내수 | 186 | 258 | 323 | 585 | 0.02 |
| 창업 | 6,911 | 6,069 | 5,496 | 5,032 | 0.16 |
| 경영 | 1,056 | 1,429 | 1,720 | 1,431 | 0.05 |
| 동반성장 | 736 | 971 | 734 | 1,038 | 0.03 |
| 전 부문 | 34,949 | 33,351 | 28,965 | 31,717 | 1.00 |

주: 1) 규모는 상호비교를 위해 전부문을 1로 둘 때의 상대적 크기.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표 II-13〉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부문별 수혜기업당 지원금액

(단위: 백만원, 배)

| | 2012 | 2013 | 2014 | 2015 | 규모 ¹⁾ (2015) |
|------|-------|-------|-------|-------|-------------------------|
| 금융 | 28.3 | 22.5 | 20.2 | 19.3 | 0.36 |
| 기술 | 296.4 | 226.5 | 111.1 | 104.5 | 1.97 |
| 인력 | 6.1 | 6.0 | 6.0 | 5.7 | 0.11 |
| 수출 | 12.0 | 14.3 | 14.2 | 7.7 | 0.15 |
| 내수 | 3.6 | 5.9 | 6.4 | 7.6 | 0.14 |
| 창업 | 40.8 | 35.4 | 33.0 | 27.3 | 0.51 |
| 경영 | 3.4 | 3.2 | 5.7 | 8.5 | 0.16 |
| 동반성장 | 13.7 | 21.3 | 22.3 | 20.8 | 0.39 |
| 전 부문 | 70.3 | 63.4 | 56.1 | 53.1 | 1.00 |

주: 1) 규모는 상호비교를 위해 전부문을 1로 둘 때의 상대적 크기.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다. 부처별 사업 규모

다음 표는 중앙부처별 사업 수와 예산을 정리한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의 예산 규모와 그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4〉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규모

(단위: 건, 억원)

| 연번 | 부처명 | 2015 | | 2016 | |
|----|-----|------|--------|------|--------|
| | | 사업 수 | 예산 | 사업 수 | 예산 |
| 1 | 고용부 | 25 | 15,122 | 23 | 15,375 |
| 2 | 관세청 | 2 | 24 | 2 | 22 |
| 3 | 교육부 | 2 | 32 | 1 | 12 |
| 4 | 국토부 | 3 | 337 | 7 | 1,127 |
| 5 | 금융위 | - | - | 2 | 414 |
| 6 | 기상청 | - | - | 1 | 17 |
| 7 | 농림부 | 15 | 12,012 | 14 | 12,792 |
| 8 | 농진청 | - | - | 1 | 64 |
| 9 | 문체부 | 14 | 5,153 | 15 | 6,126 |
| 10 | 미래부 | 21 | 3,369 | 31 | 4,813 |
| 11 | 방사청 | 3 | 183 | 4 | 339 |

〈표 II-14〉의 계속

| 연번 | 부처명 | 2015 | | 2016 | |
|----|-----|------|---------|------|---------|
| | | 사업 수 | 예산 | 사업 수 | 예산 |
| 12 | 산림청 | - | - | 1 | 10 |
| 13 | 산업부 | 52 | 22,212 | 56 | 22,339 |
| 14 | 식약처 | 2 | 31 | 1 | 15 |
| 15 | 조달청 | - | - | 1 | 10 |
| 16 | 중기청 | 85 | 68,396 | 78 | 72,806 |
| 17 | 특허청 | 4 | 487 | 5 | 517 |
| 18 | 해수부 | 4 | 1,070 | 5 | 1,514 |
| 19 | 환경부 | 14 | 1,560 | 16 | 2,184 |
| 계 | | 246 | 129,987 | 264 | 140,494 |

자료: 중소기업청, 「제2차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위원회 회의자료」(2016. 3. 30)

다음 표는 2014년 기준 부문별 재정지원사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5년 기준 기술부문이 사업 수는 가장 많지만, 금융부문이 가장 많은 사업 예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5〉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부문별 사업 수 현황(2014년 기준)

(단위: 개)

| 연번 | 부처명 | 금융 | 기술 | 인력 | 수출 | 내수 | 창업 | 경영 | 계 |
|----|-----|----|----|----|----|----|----|----|----|
| 1 | 고용부 | 1 | | 16 | | | | 1 | 18 |
| 2 | 관세청 | | | | 1 | | | 1 | 2 |
| 3 | 교육부 | | | | | | | | 0 |
| 4 | 국토부 | | 3 | | 1 | | | | 4 |
| 5 | 금융위 | 3 | | | | | | | 3 |
| 6 | 기상청 | | | | | | | | 0 |
| 7 | 농림부 | 5 | 1 | | 1 | | | 1 | 8 |
| 8 | 농진청 | | | | | | | | 0 |
| 9 | 문체부 | 3 | 1 | | 3 | | 1 | 3 | 11 |
| 10 | 미래부 | 1 | 5 | 1 | 5 | | 2 | 4 | 18 |
| 11 | 방사청 | 4 | | | | | | 1 | 5 |
| 12 | 산림청 | | | | | | | | 0 |
| 13 | 산업부 | 12 | 20 | 1 | 7 | | | 1 | 41 |
| 14 | 식약처 | | | | | | | 2 | 2 |

〈표 II-15〉의 계속

| 연번 | 부처명 | 금융 | 기술 | 인력 | 수출 | 내수 | 창업 | 경영 | 계 |
|----|-----|----|----|----|----|----|----|----|-----|
| 15 | 조달청 | | | | | | | | 0 |
| 16 | 중기청 | 15 | 22 | 5 | 12 | 8 | 13 | 15 | 90 |
| 17 | 특허청 | | 4 | | | | | | 4 |
| 18 | 해수부 | 4 | 1 | | | | | | 5 |
| 19 | 환경부 | 3 | 3 | | 2 | | | 4 | 12 |
| 소계 | | 51 | 60 | 23 | 32 | 8 | 16 | 33 | 223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표 II-16〉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부문별 예산 현황(2014년 기준)

(단위: 백만원)

| 연번 | 부처명 | 금융 | 기술 | 인력 | 수출 | 내수 | 창업 | 경영 | 계 |
|----|-----|-----------|-----------|-----------|---------|--------|---------|---------|------------|
| 1 | 고용부 | 190,320 | | 1,002,345 | | | | - | 1,192,665 |
| 2 | 관세청 | | | | - | | | - | - |
| 3 | 교육부 | | | | | | | | - |
| 4 | 국토부 | | 11,977 | | 4,901 | | | | 16,878 |
| 5 | 금융위 | - | | | | | | | - |
| 6 | 기상청 | | | | | | | | - |
| 7 | 농림부 | 1,173,817 | 2,450 | | 119,894 | | | - | 1,296,161 |
| 8 | 농진청 | | | | | | | | - |
| 9 | 문체부 | 7,334 | 8,700 | | 4,698 | | 3,000 | 23,904 | 47,636 |
| 10 | 미래부 | 57,000 | 28,405 | 1,500 | 8,683 | | - | 26,639 | 122,227 |
| 11 | 방사청 | 18,211 | | | | | | 382 | 18,593 |
| 12 | 산림청 | | | | | | | | - |
| 13 | 산업부 | 499,208 | 3,197,981 | 13,946 | 74,147 | | | 1,953 | 3,787,235 |
| 14 | 식약처 | | | | | | | 6,299 | 6,299 |
| 15 | 조달청 | | | | | | | | - |
| 16 | 중기청 | 6,662,638 | 1,662,244 | 41,483 | 104,751 | 27,982 | 154,689 | 121,035 | 8,774,822 |
| 17 | 특허청 | | 36,902 | | | | | | 36,902 |
| 18 | 해수부 | 276,943 | 6,000 | | | | | | 282,943 |
| 19 | 환경부 | 149,817 | 26,748 | | 4,900 | | | 12,216 | 193,681 |
| 소계 | | 9,035,288 | 4,981,407 | 1,059,274 | 321,974 | 27,982 | 157,689 | 192,428 | 15,776,042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라. 서비스 전달체계

중앙부처의 사업서비스 전달체계는 주로 유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위사업청만 7개의 사업을 직접 수행했으며, 나머지 중앙부처는 200여 개 이상의 지원사업을 유관기관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표 II-17〉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 이용 현황(2010~2015년)

(단위: 개)

| | 2010 | | | 2011 | | | 2012 | | |
|---------|----------|-------|-----|----------|-------|-----|----------|-------|-----|
| | 수행 기관 이용 | 직접 수행 | 총계 | 수행 기관 이용 | 직접 수행 | 총계 | 수행 기관 이용 | 직접 수행 | 총계 |
| 고용노동부 | 13 | 0 | 13 | 13 | 0 | 13 | 14 | 0 | 14 |
| 관세청 | 0 | 0 | 0 | 2 | 0 | 2 | 2 | 0 | 2 |
| 국토교통부 | 3 | 0 | 3 | 2 | 0 | 2 | 3 | 0 | 3 |
| 금융위원회 | 3 | 0 | 3 | 3 | 0 | 3 | 3 | 0 | 3 |
| 농림축산식품부 | 8 | 0 | 8 | 8 | 0 | 8 | 7 | 0 | 7 |
| 문화체육관광부 | 9 | 0 | 9 | 11 | 0 | 11 | 12 | 0 | 12 |
| 미래창조과학부 | 2 | 0 | 2 | 4 | 0 | 4 | 7 | 0 | 7 |
| 방위사업청 | 0 | 2 | 2 | 0 | 4 | 4 | 0 | 4 | 4 |
| 산업통상지원부 | 27 | 0 | 27 | 35 | 0 | 35 | 38 | 0 | 38 |
| 식품의약품안전 | 0 | 1 | 1 | 0 | 1 | 1 | 0 | 1 | 1 |
| 중소기업청 | 49 | 0 | 49 | 62 | 0 | 62 | 78 | 0 | 78 |
| 특허청 | 1 | 0 | 1 | 1 | 0 | 1 | 3 | 0 | 3 |
| 해양수산부 | 5 | 0 | 5 | 5 | 0 | 5 | 5 | 0 | 5 |
| 환경부 | 6 | 0 | 6 | 7 | 0 | 7 | 9 | 0 | 9 |
| Total | 126 | 3 | 129 | 153 | 5 | 158 | 181 | 5 | 186 |

| | 2013 | | | 2014 | | | 2015 | | |
|---------|----------|-------|----|----------|-------|----|----------|-------|----|
| | 수행 기관 이용 | 직접 수행 | 총계 | 수행 기관 이용 | 직접 수행 | 총계 | 수행 기관 이용 | 직접 수행 | 총계 |
| 고용노동부 | 17 | 0 | 17 | 16 | 0 | 16 | 18 | 0 | 18 |
| 관세청 | 2 | 0 | 2 | 2 | 0 | 2 | 2 | 0 | 2 |
| 국토교통부 | 2 | 0 | 2 | 3 | 0 | 3 | 3 | 0 | 3 |
| 금융위원회 | 3 | 0 | 3 | 3 | 0 | 3 | 3 | 0 | 3 |
| 농림축산식품부 | 9 | 0 | 9 | 8 | 0 | 8 | 11 | 0 | 11 |

〈표 II-17〉의 계속

| | 2013 | | | 2014 | | | 2015 | | |
|---------|----------------|----------|-----|----------------|----------|-----|----------------|----------|-----|
| | 수행 기관 이용 | 직접 수행 | 총계 | 수행 기관 이용 | 직접 수행 | 총계 | 수행 기관 이용 | 직접 수행 | 총계 |
| 문화체육관광부 | 14 | 0 | 14 | 16 | 0 | 16 | 18 | 0 | 18 |
| 미래창조과학부 | 18 | 0 | 18 | 19 | 0 | 19 | 19 | 0 | 19 |
| 방위사업청 | 0 | 5 | 5 | 0 | 5 | 5 | 0 | 2 | 2 |
| 산업통상자원부 | 44 | 0 | 44 | 44 | 0 | 44 | 43 | 5 | 48 |
| 식품의약품안전 | 0 | 1 | 1 | 0 | 2 | 2 | 0 | 2 | 2 |
| 중소기업청 | 88 | 0 | 88 | 94 | 0 | 94 | 94 | 0 | 94 |
| 특허청 | 3 | 0 | 3 | 4 | 0 | 4 | 4 | 0 | 4 |
| 해양수산부 | 5 | 0 | 5 | 5 | 0 | 5 | 5 | 0 | 5 |
| 환경부 | 11 | 0 | 11 | 12 | 0 | 12 | 23 | 0 | 23 |
| Total | 216 | 6 | 222 | 226 | 7 | 233 | 243 | 9 | 252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3. 중소기업 관련 이슈

가. 중소기업 현황과 문제점

많은 기존 연구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의 수가 많아 경쟁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홍성철·백훈(2012)에 따르면 2009년 제조업 기준 종업원 10인 미만 소기업의 비중이 82%를 차지하고 있다. 장우현 외(2013)는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해 약 334만개의 전체 사업체 중에 중소기업에 속하는 사업체가 약 30만개, 소상공인에 속하는 사업체가 약 303만개임을 보였다. 반면 종사자 1인당 연간 매출액은 대기업이 약 6억 500만원, 중소기업이 약 2억 9천만원이지만, 소상공인은 약 1억원에 그쳐 생산성의 차이가 사업체 규모별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의에 하한이 없는 것을 상기했을 때 법령 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 대다수는 소상공인이고 이들의 생산성이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정한 외(2015)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생산액과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기여율)이 2010년대 들어 급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홍성철·백훈(2012)과 중소기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보고서(2010)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연결고리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홍성철·백훈(2012)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전체 중소기업의 약 0.12%가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에 반해 2009년도에는 이 비율이 약 0.04%로 감소했다.

한편 구정한 외(2015)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간접금융이 중소기업 자금공급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량 중소기업에 편중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의존도는 1.2%로 낮아졌다.

더불어 OECD(2016)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보증 규모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신용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라는 시장실패를 보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이후 그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보증의 규모는 2014년 약 5%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로 나타났다.

〈표 II-18〉 중소기업 자금공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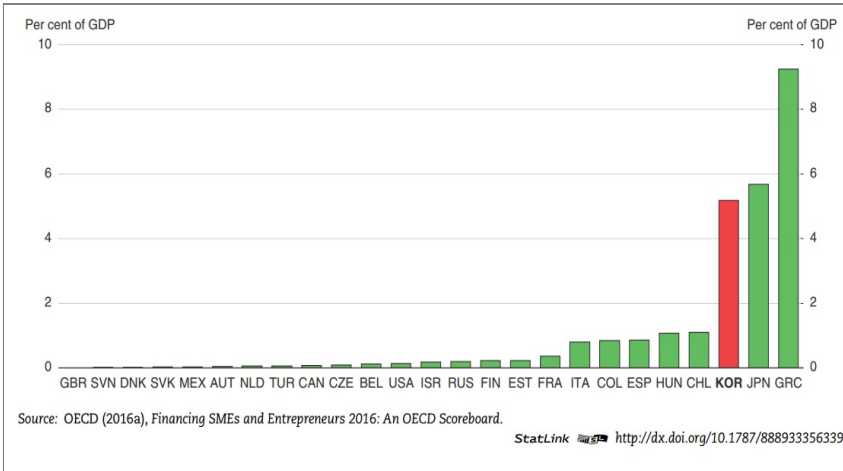
(단위: 조원, %)

| | 간접금융 | | | 직접금융 | | | 정책금융 | | | 계 | | |
|------|-------|-------|-------|------|------|------|------|-----|------|------|------|-------|
| | 은행대출 | 비은행대출 | 소계 | 회사채 | 주식발행 | 벤처투자 | 소계 | 온렌딩 | 정책자금 | | 보증잔액 | 소계 |
| 2005 | 256.5 | 82.5 | 293.6 | 0.3 | 3.0 | 3.4 | 6.7 | - | 3.2 | 45.4 | 48.6 | 348.9 |
| (비중) | 73.5 | 23.6 | 84.2 | 0.1 | 0.9 | 1.0 | 1.9 | 0.0 | 0.9 | 13.0 | 13.9 | 100.0 |
| 2009 | 443.4 | 121.8 | 497.5 | 1.1 | 4.5 | 3.9 | 9.5 | 0.2 | 5.9 | 67.7 | 73.8 | 580.8 |
| (비중) | 76.3 | 21.0 | 85.7 | 0.2 | 0.8 | 0.7 | 1.6 | 0.0 | 1.0 | 11.7 | 12.7 | 100.0 |
| 2013 | 489.2 | - | 489.2 | 0.1 | 0.8 | 6.4 | 7.2 | 6.7 | 4.9 | 75.5 | 87.1 | 583.5 |
| (비중) | 83.8 | 0.0 | 83.8 | 0.0 | 0.1 | 1.1 | 1.2 | 1.1 | 0.8 | 12.9 | 14.9 | 100.0 |

자료: 구정한 외(2015) 〈표 III-17〉 p. 14를 인용한 OECD(2016) Table 6(p. 37)을 재인용

[그림 II-1] 국내총생산 대비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대출보증의 비중

(단위 : %)



자료: OECD(2016), Figure19.(p. 38)

하지만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는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우현 외(2014)에 따르면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은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일부 매출액과 고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이윤과 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으며,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지원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작게 나타났다.

OECD(2016a)는 정부지원의 부정적인 효과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 정부지원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신용평가 능력 향상의 유인을 감소시킨다. 둘째, 정부지원은 경쟁력이 약한 기업이 살아남도록 돕는다. 셋째, 중소기업은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 상태에 머물기 원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은 기업의 성장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나.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운영방식의 문제점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은 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며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우현 외(2013)는 이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목적을 경쟁력 있는 기업의 성장 지원이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지원하는 정책이 혼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최세경 외(2015)는 중소기업 정책의 목표가 효율성 또는 형평성이라는 이분법적 영역이 아니라 균형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합·조정하는 기구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2010년도 중소기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보고서와 장우현 외(2013)에 따르면 과거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부처 간 사업의 조율·조정 기능이 사라졌고 동시에 객관적인 사업평가도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우현 외(2013)는 형식적인 정책조정기구의 설립 외에도 그 기구로 하여금 과학적인 평가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객관적인 사업의 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 조정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방식의 문제점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지원 체계로 인해 지역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 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졸업제나 일몰제 부재로 인한 수혜기업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⁶⁾

6) 김세종 외(2010), p. 132.

Ⅲ.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혜 분석

1. 수혜 현황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혜 현황분석은 현재 중소기업 재정지원이 어떠한 형태로 기업들에 지원되고 있는지를, 통합관리시스템상의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 지원주체별 지원현황 분석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다양한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수행되고 있다. 각 기업마다 수혜받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로 수혜기업 수, 사업당 금액, 수혜기업별 평균금액 등을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였다.

먼저 수혜기업 수로는 대부분의 사업체가 중앙부처 지원사업만을 수혜하였으며, 전체 수혜기업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26만여개 기업체는 지난 5년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지원을 모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의 수혜를 받는 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연평균 증가율 10.1%), 연도별 수혜기업의 총합이 전 기간 수혜를 받는 비중복 기업체 수보다 1.5배 정도 되어, 상당수의 기업이 연도별 중복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중앙부처의 지원사업만을 수혜받는 기업은 2011~2015년의 기간 동안 110만여 사업체로 조사되었으며(중복 감안), 연평균 증가율은 8.4%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사업을 지원받는 사업체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22.0%),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사업체의 증가율도 17.7%에 이른다.

〈표 III-1〉 정책 제공 주체별 수혜기업 현황: 수혜기업 수 (단위: 개, %)

| 연도 | 중앙부처 only | 지자체 only | 중앙부처 + 지자체 | 계 |
|--------------|---------------------|-----------------|-------------------|----------------------|
| 2010 | 241,801 | 5,348 | 34,966 | 282,115 |
| 2011 | 190,997 | 8,882 | 35,864 | 235,743 |
| 2012 | 217,999 | 10,804 | 43,522 | 272,325 |
| 2013 | 290,230 | 11,511 | 59,731 | 361,472 |
| 2014 | 307,928 | 14,334 | 68,597 | 390,859 |
| 2015 | 362,390 | 14,433 | 79,014 | 455,837 |
| 전 기간 (비중) | 1,100,132 (84.3) | 52,554 (4.0) | 262,536 (20.1) | 1,304,427 (100.0)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한편, 한 개의 기업당 지원받은 금액의 평균금액은 전체 사업, 전 기간 기준 2억 3천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중복 포함), 각 연도별 평균은 2015년 기준 1억 4천만원, 중앙부처 사업만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대략 1억 2,700만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한 사업체가 수혜받는 금액은 여러 부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중복으로 받는 금액도 포함하여 기업체마다 편차가 클 수 있으며, 계상방식은 지원금액 총액을 지원기업 수로 나누었다.

〈표 III-2〉 정책 제공 주체별 수혜기업 현황: 기업당 수혜금액 평균 (단위: 천원)

| 연도 | 중앙부처 only | 지자체 only | 중앙부처 + 지자체 | 계 |
|------|-----------|----------|------------|---------|
| 2010 | 119,507 | 187,734 | 200,606 | 130,852 |
| 2011 | 152,646 | 148,322 | 232,063 | 164,565 |
| 2012 | 144,858 | 133,349 | 214,390 | 155,514 |
| 2013 | 147,648 | 118,104 | 223,017 | 159,162 |
| 2014 | 139,991 | 115,174 | 214,937 | 152,234 |
| 2015 | 126,770 | 132,731 | 219,113 | 142,965 |
| 전 기간 | 201,367 | 165,319 | 266,805 | 230,189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중앙부처 지원사업만을 수혜받는 기업의 평균 수혜금액은 연평균 1.2% 증가하는 반면, 지자체의 사업만을 수혜받는 기업은 연평균 6.7%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인 기업체당 수혜금액은 연평균 1.8% 증가율로 미미하게나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사업체당 평균 수혜받는 사업수로는 전 기간 전 주체를 기준으로 1.46개로 조사되었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중복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평균 2.57개로 나타났다.

〈표 III-3〉 정책 제공 주체별 수혜기업 현황: 기업당 평균 수혜사업 수

(단위: 개)

| 연도 | 중앙부처 only | 지자체 only | 중앙부처 + 지자체 | 계 |
|------|-----------|----------|------------|-------|
| 2010 | 1,181 | 1,071 | 2,427 | 1,334 |
| 2011 | 1,260 | 1,043 | 2,541 | 1,447 |
| 2012 | 1,252 | 1,047 | 2,522 | 1,447 |
| 2013 | 1,292 | 1,065 | 3,003 | 1,567 |
| 2014 | 1,282 | 1,066 | 2,520 | 1,492 |
| 2015 | 1,238 | 1,070 | 2,385 | 1,432 |
| 전 기간 | 1,252 | 1,061 | 2,569 | 1,458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다음은 사업당 한 기업에 얼마만큼 지원을 하였는가⁷⁾에 대한 평균금액이다. 이 금액은 사업별 수혜금액을 수혜기업수로 나눈 값의 평균으로 산정하였으며, 중앙부처 사업은 전기간 평균 1억 2,600만원, 자체사업의 경우 7,8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지원금액도 증가하고, 지원받는 사업체 수도 증가하였으나, 한 사업당 1기업에 대한 지원평균 금액은 연평균 0.7% 증가, 지자체 사업의 경우 오히려 연평균 1.9%가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한 사업체당 지원받는 금액이 증가한 것은, 사업체당 같은 기간

7)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위원회의 2016년 기준 중앙정부사업의 경우, 한 사업당 평균 총액이 532억원, 지자체사업의 경우 한 사업당 22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중복수혜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III-4〉 정책 제공 주체별 수혜기업 현황: 사업당 1기업 평균 지원금액

(단위: 천원)

| 연도 | 중앙부처 | 지자체 | 계 |
|------|---------|--------|---------|
| 2010 | 111,262 | 87,635 | 108,503 |
| 2011 | 133,735 | 97,231 | 128,383 |
| 2012 | 135,720 | 90,097 | 128,297 |
| 2013 | 139,094 | 60,889 | 122,629 |
| 2014 | 131,628 | 76,418 | 122,270 |
| 2015 | 114,930 | 79,440 | 109,202 |
| 전 기간 | 126,927 | 78,480 | 118,956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나. 단년도 수혜금액 분석

2014년 단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수는 총 39만 859개 업체이다.

중앙정부사업 수혜기업의 한 기업당 수혜금액은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기준 약 4,190만원⁸⁾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전체 사업체에 골고루 나눠준다고 생각할 경우, 한 기업당 414만원씩 돌아가는 셈이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위원회 회의자료의 예산기준으로 볼 때에는 1기업당 수혜금액은 3,062만원이며, 이를 전체사업체에 동등하게 지급할 경우 1기업당 300만원 정도 지급될 수 있다.

두 자료의 금액 차이는 이차보전 등 예산의 편성에 있어 사후적으로 정산되는 사업금액이, 부처별 예산의 경우 배제되었고, 통합관리시스템의 경우 사후적으로 정산된 금액으로 이 금액이 포함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연도별 사업부문 집행금액의 총합으로, 데이터 안정성 부분에 있어 검증이 필요함

〈표 III-5〉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혜 현황

| | 전체 사업 | 중앙정부 사업 | 지자체 사업 |
|-------------------------------------|------------|------------|------------|
| * 총지원금액 (단위: 백만원) | | | |
| (통합관리시스템) | - | 15,776,042 | - |
| (운영위원회예산) | 13,649,100 | 11,529,200 | 2,119,900 |
| * 사업체 수 (단위: 개) | | | |
| 전체 사업체 | 3,812,820 | - | - |
| 수혜기업 | 390,859 | 376,525 | 82,931 |
| * 1기업당 수혜금액(운영위원회 예산기준) (단위: 원) | | | |
| 전체 사업체 | 3,579,791 | 3,023,799 | 555,993 |
| 수혜기업 | 34,920,777 | 30,620,012 | 25,562,214 |
| * 1기업당 수혜금액(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기준) (단위: 원) | | | |
| 전체 사업체 | - | 4,137,631 | - |
| 수혜기업 | - | 41,899,056 | - |

자료: 수혜기업수, 총지원금액: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총지원금액(예산): 중소기업청, 「제2차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위원회 회의자료」(2016. 3. 30)
 전체 사업체 수: 통계청, 「전국사업체총조사」(검색일: 2016. 7. 29)

2. 중복수혜 현황 분석

가. 사업 중복수혜 현황

전 사업(중앙부처, 지자체 수혜 포함)을 기준으로 2010~2015년에 걸쳐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은 총 130만여 기업이었다. 그 중 한 해에 단일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이 약 60%, 여러 사업의 중복수혜를 받은 기업은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 기업 중복수혜 사업 수별 기업 분포

(단위: 개, %)

| 연도 | 단일 수혜 | 2사업 수혜 | 3사업 수혜 | 4사업 수혜 | 5사업 이상 | 계 |
|--------------|-------------------|-------------------|------------------|-----------------|-----------------|--------------------|
| 2010 | 214,746 | 53,539 | 7,741 | 2,986 | 3,103 | 282,115 |
| 2011 | 162,614 | 57,068 | 8,957 | 3,385 | 3,719 | 235,743 |
| 2012 | 190,140 | 61,334 | 12,833 | 3,732 | 4,286 | 272,325 |
| 2013 | 245,680 | 54,510 | 48,605 | 6,622 | 6,055 | 361,472 |
| 2014 | 258,365 | 102,964 | 17,372 | 5,535 | 6,623 | 390,859 |
| 2015 | 307,475 | 123,570 | 14,470 | 5,001 | 5,321 | 455,837 |
| 전 기간 (비중) | 781,725 (59.9) | 333,813 (25.6) | 108,527 (8.3) | 32,078 (2.5) | 48,284 (3.7) | 1,304,427 (100) |

주: 같은 해에 지원받은 사업의 누적수 기준으로 기업 수를 합산.

전 기간은 단순 합산이 아닌, 분석대상 기간 중 중복수혜를 받은 기업 수 합산(기간중복 배제).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중복수혜 사업별 수혜금액은 〈표 Ⅲ-7〉과 같다.

중복수혜를 받은 기업이 받는 금액은 단일수혜를 받은 기업과 크게 차이가 났다.

단일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2015년을 기준으로 대략 7,500만원 정도를 지원 받은 반면, 5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평균 17억원 정도를 수혜받아, 차이가 23배 이상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Ⅲ-7〉 기업 중복수혜 사업 수별 수혜금액(총액)

(단위: 천원)

| 연도 | 단일 수혜 | 2사업 수혜 | 3사업 수혜 | 4사업 수혜 | 5사업 이상 |
|------|--------|---------|---------|-----------|-----------|
| 2010 | 69,645 | 203,030 | 653,714 | 928,466 | 1,335,869 |
| 2011 | 97,833 | 197,992 | 576,287 | 833,028 | 1,238,155 |
| 2012 | 90,996 | 190,906 | 467,139 | 822,428 | 1,250,257 |
| 2013 | 81,195 | 264,117 | 220,553 | 772,063 | 1,458,827 |
| 2014 | 80,065 | 165,844 | 474,056 | 972,719 | 1,498,626 |
| 2015 | 75,274 | 155,588 | 620,940 | 1,030,394 | 1,731,479 |
| 전 기간 | 65,468 | 166,420 | 373,713 | 878,920 | 2,725,333 |

주: 같은 해에 지원받은 사업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기업당 총액의 평균을 계산함.

전 기간은 분석대상 기간 동안 기업당 수혜총액의 평균.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사업당 수혜금액으로 나누어 보아도(〈표 Ⅲ-8〉참조), 4개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의 사업당 평균수혜금액은 분석대상 기간 동안 단일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의 약 2.1~3.4배였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8〉 기업 중복수혜 사업 수별 수혜금액(사업당 평균) (단위: 천원)

| 연도 | 단일 수혜 | 2사업 수혜 | 3사업 수혜 | 4사업 수혜 |
|------|--------|---------|---------|---------|
| 2010 | 69,645 | 101,515 | 217,905 | 232,117 |
| 2011 | 97,833 | 98,996 | 192,096 | 208,257 |
| 2012 | 90,996 | 95,453 | 155,713 | 205,607 |
| 2013 | 81,195 | 132,058 | 73,518 | 193,016 |
| 2014 | 80,065 | 82,922 | 158,019 | 243,180 |
| 2015 | 75,274 | 77,794 | 206,980 | 257,598 |
| 전 기간 | 65,468 | 83,210 | 124,571 | 219,730 |

주: 같은 해에 지원받은 사업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기업당 총액의 평균을 수혜사업 수로 나눔.
 전 기간은 분석대상 기간동안 기업당 수혜총액의 평균을 수혜사업 수로 나눔.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상기 현상은, 최대 수혜기업의 경우 2010~2015년까지 총 52개의 사업의 수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 다사업 중복수혜기업 중에는 5개 이상 여러 사업의 중복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Ⅲ-9〉 중복 사업 수별 수혜기업의 평균 정보 (단위: 년, 천원, 명)

| 구분 | 업력 | 매출액 | 종사자 수 |
|-----------|-----|-----------|-------|
| 단일 사업 수혜 | 4.6 | 394,167 | 2.3 |
| 2사업 중복수혜 | 5.1 | 779,508 | 3.2 |
| 3사업 중복수혜 | 6.3 | 1,570,300 | 5.7 |
| 4사업 중복수혜 | 7.4 | 3,313,798 | 11.5 |
| 5사업 중복 이상 | 9.0 | 6,979,331 | 22.6 |
| 전체 기업 평균 | 7.0 | 5,673,707 | 20.9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2014년 중앙정부 사업을 사업군 기준으로 저자 작성

〈표 Ⅲ-9〉는 수혜기업의 중복 사업 수별 평균 정보를 담고 있다. 중복사업 수가 많아질수록, 업력, 매출액, 종사자 수의 항목들에서 모두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오래되고 규모가 큰 기업들일수록 중복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사업군 중복수혜 현황

다음은, 중소기업청에서 정의한 사업군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군 간의 중복수혜를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단일사업군의 수혜를 받은 기업은 85.4%로, 사업군 간 중복수혜를 받은 기업은 총 19만 1,087개 사업체, 총 수혜기업의 14.6%로 조사되었다.

〈표 Ⅲ-10〉 기업 중복수혜 사업군 수별 기업 분포

(단위: 개, %)

| 연도 | 단일 사업군 수혜 | 2사업군 수혜 | 3사업군 수혜 | 4사업군 수혜 | 5사업군 이상 | 계 |
|-----------|------------------|----------------|--------------|--------------|-------------|-----------------|
| 2010 | 261,320 | 16,307 | 3,440 | 870 | 178 | 282,115 |
| 2011 | 213,476 | 17,592 | 3,535 | 942 | 198 | 235,743 |
| 2012 | 241,608 | 24,642 | 4,450 | 1,274 | 351 | 272,325 |
| 2013 | 313,589 | 39,248 | 6,252 | 1,875 | 508 | 361,472 |
| 2014 | 345,978 | 34,881 | 7,035 | 2,258 | 707 | 390,859 |
| 2015 | 418,030 | 28,871 | 6,436 | 1,916 | 584 | 455,837 |
| 전 기간 (비중) | 1,113,340 (85.4) | 143,970 (11.0) | 28,872 (2.2) | 11,259 (0.9) | 6,986 (0.5) | 1,304,427 (100)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전 기관 사업을 사업군 기준으로 저자 작성

〈표 Ⅲ-11〉 기업 중복수혜 사업군 수별 평균 수혜금액(총액)

(단위: 천원, %)

| 연도 | 단일 사업군 수혜 | 2사업군 수혜 | 3사업군 수혜 | 4사업군 수혜 | 5사업군 이상 |
|------|-----------|---------|---------|-----------|-----------|
| 2010 | 93,917 | 536,712 | 923,154 | 1,262,174 | 1,322,302 |
| 2011 | 121,382 | 531,041 | 921,414 | 1,119,065 | 1,153,691 |
| 2012 | 112,671 | 425,048 | 876,358 | 1,155,670 | 1,042,662 |

〈표 III-11〉의 계속

| 연도 | 단일 사업군 수혜 | 2사업군 수혜 | 3사업군 수혜 | 4사업군 수혜 | 5사업군 이상 |
|------|-----------|---------|-----------|-----------|-----------|
| 2013 | 109,369 | 393,796 | 993,050 | 1,253,415 | 1,375,842 |
| 2014 | 100,300 | 447,486 | 1,031,742 | 1,228,308 | 1,363,440 |
| 2015 | 96,282 | 537,355 | 988,002 | 1,439,686 | 1,443,347 |
| 전 기간 | 101,856 | 570,466 | 1,772,582 | 2,947,331 | 3,890,209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전 기간 사업을 사업군 기준으로 저자 작성

〈표 III-12〉 기업 중복수혜 사업 수별 수혜금액(사업당 평균)

(단위: 천원)

| 연도 | 단일 수혜 | 2사업 수혜 | 3사업 수혜 | 4사업 수혜 |
|------|---------|---------|---------|---------|
| 2010 | 93,917 | 268,356 | 307,718 | 315,543 |
| 2011 | 121,382 | 265,521 | 307,138 | 279,766 |
| 2012 | 112,671 | 212,524 | 292,119 | 288,918 |
| 2013 | 109,369 | 196,898 | 331,017 | 313,354 |
| 2014 | 100,300 | 223,743 | 343,914 | 307,077 |
| 2015 | 96,282 | 268,677 | 329,334 | 359,922 |
| 전 기간 | 101,856 | 285,233 | 590,861 | 736,833 |

주: 같은 해에 지원받은 사업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기업당 총액의 평균을 수혜사업 수로 나눔.

전 기간은 분석대상 기간동안 기업당 수혜총액의 평균을 수혜사업 수로 나눔.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다. 사업군 내 중복수혜 현황

단일 사업군 수혜를 받는 기업 중 사업군 내 중복수혜 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과 인력, 기술, 내수 등의 사업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융, 창업, 경영 사업군에 비해 사업군 내 다중수혜의 비율이 높았다. 전 기간 내 사업군 내 다중수혜의 비율은 약 2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3〉 단일 사업군 내 중복수혜 기업 수

(단위: 개)

| 구분 | 중복 여부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0~2015년 |
|----|-------|---------|---------|---------|---------|---------|---------|------------|
| 금융 | 단일 | 202,951 | 150,483 | 169,979 | 224,701 | 244,362 | 309,552 | 893,211 |
| | 다중 | 15,798 | 19,240 | 18,652 | 29,628 | 35,541 | 47,768 | 190,782 |
| 기술 | 단일 | 3,868 | 3,126 | 3,892 | 6,279 | 11,748 | 10,811 | 22,128 |
| | 다중 | 346 | 321 | 398 | 741 | 2,119 | 1,641 | 7,984 |
| 인력 | 단일 | 52,605 | 48,452 | 49,355 | 58,770 | 63,093 | 64,956 | 153,685 |
| | 다중 | 10,635 | 13,032 | 11,121 | 14,082 | 13,807 | 10,642 | 66,661 |
| 수출 | 단일 | 5,505 | 5,725 | 6,390 | 6,063 | 6,632 | 6,007 | 15,662 |
| | 다중 | 1,900 | 2,537 | 2,465 | 2,824 | 2,509 | 1,918 | 10,046 |
| 내수 | 단일 | 542 | 1,034 | 952 | 991 | 1,149 | 1,862 | 4,215 |
| | 다중 | 23 | 106 | 90 | 127 | 230 | 376 | 1,336 |
| 창업 | 단일 | 1,054 | 1,900 | 3,056 | 4,316 | 4,195 | 4,920 | 15,293 |
| | 다중 | 10 | 126 | 335 | 312 | 273 | 272 | 2,586 |
| 경영 | 단일 | 4,755 | 4,948 | 27,942 | 52,027 | 39,967 | 20,747 | 126,227 |
| | 다중 | 283 | 348 | 985 | 1,762 | 1,674 | 722 | 10,294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표 III-14〉 단일 사업군 내 중복수혜 기업 비중

(단위: %)

| 구분 | 중복 여부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0~2015년 |
|----|-------|-------|-------|-------|-------|-------|-------|------------|
| 금융 | 단일 | 92.8 | 88.7 | 90.1 | 88.4 | 87.3 | 86.6 | 82.4 |
| | 다중 | 7.2 | 11.3 | 9.9 | 11.6 | 12.7 | 13.4 | 17.6 |
| 기술 | 단일 | 91.8 | 90.7 | 90.7 | 89.4 | 84.7 | 86.8 | 73.5 |
| | 다중 | 8.2 | 9.3 | 9.3 | 10.6 | 15.3 | 13.2 | 26.5 |
| 인력 | 단일 | 83.2 | 78.8 | 81.6 | 80.7 | 82.0 | 85.9 | 69.7 |
| | 다중 | 16.8 | 21.2 | 18.4 | 19.3 | 18.0 | 14.1 | 30.3 |
| 수출 | 단일 | 74.3 | 69.3 | 72.2 | 68.2 | 72.6 | 75.8 | 60.9 |
| | 다중 | 25.7 | 30.7 | 27.8 | 31.8 | 27.4 | 24.2 | 39.1 |
| 내수 | 단일 | 95.9 | 90.7 | 91.4 | 88.6 | 83.3 | 83.2 | 75.9 |
| | 다중 | 4.1 | 9.3 | 8.6 | 11.4 | 16.7 | 16.8 | 24.1 |
| 창업 | 단일 | 99.1 | 93.8 | 90.1 | 93.3 | 93.9 | 94.8 | 85.5 |
| | 다중 | 0.9 | 6.2 | 9.9 | 6.7 | 6.1 | 5.2 | 14.5 |
| 창업 | 단일 | 99.1 | 93.8 | 90.1 | 93.3 | 93.9 | 94.8 | 85.5 |
| | 다중 | 0.9 | 6.2 | 9.9 | 6.7 | 6.1 | 5.2 | 14.5 |
| 전체 | 단일 | 90.3 | 85.8 | 88.5 | 87.7 | 86.9 | 86.9 | 80.9 |
| | 다중 | 9.7 | 14.2 | 11.5 | 12.3 | 13.1 | 13.1 | 19.1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라. 지속 및 반복수혜 현황

하나의 사업을 여러 해 동안 지속수혜, 혹은 반복수혜를 받은 기업은 각 사업군별로 <표 Ⅲ-15>와 같았다.

전체 사업군을 기준으로 다년간 수혜를 받은 기업은 대략 전체 기업의 2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업군별로 살펴보면, 창업사업군의 경우 동일사업의 지속·반복수혜를 받은 비중이 31.4%로 가장 높았다. 반면 동일사업의 지속·반복수혜가 가장 적은 사업군은 경영(93.8%)과 금융(92.4%) 사업군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사업군별 단일사업 지속수혜 현황(사업 수)

(단위: 개)

| 연번 |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계 |
|----|----|-----------|---------|--------|--------|-------|-----------|
| 1 | 금융 | 137,593 | 9,650 | 1,328 | 207 | 98 | 148,876 |
| 2 | 기술 | 1,071,613 | 194,816 | 38,113 | 8,779 | 3,380 | 1,316,701 |
| 3 | 인력 | 37,554 | 5,104 | 720 | 249 | 126 | 43,753 |
| 4 | 수출 | 6,701 | 728 | 105 | 16 | 7 | 7,557 |
| 5 | 내수 | 33,239 | 9,101 | 3,153 | 1,367 | 613 | 47,473 |
| 6 | 창업 | 221,344 | 61,664 | 23,527 | 10,647 | 5,579 | 322,761 |
| 7 | 경영 | 19,567 | 1,248 | 35 | - | - | 20,850 |
| | 계 | 1,099,582 | 246,207 | 60,369 | 19,605 | 9,182 | 1,434,945 |

주: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연수로 기업 수를 입력.

사업코드가 동일한 사업을 수혜받은 기간이 여러 해에 걸치는 기업 수를 사업군별로 count.

사업군간 중복수혜가 있는 기업의 경우 중복 count됨.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앙정부 사업을 사업군 기준으로 저자 작성

<표 Ⅲ-16> 사업군별 단일사업 지속수혜 현황(사업 수 비중)

(단위: %)

| 연번 |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계 |
|----|----|------|------|-----|-----|-----|-------|
| 1 | 금융 | 92.4 | 6.5 | 0.9 | 0.1 | 0.1 | 100.0 |
| 2 | 기술 | 81.4 | 14.8 | 2.9 | 0.7 | 0.3 | 100.0 |
| 3 | 인력 | 85.8 | 11.7 | 1.6 | 0.6 | 0.3 | 100.0 |
| 4 | 수출 | 88.7 | 9.6 | 1.4 | 0.2 | 0.1 | 100.0 |

〈표 III-16〉의 계속

| 연번 |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계 |
|----|----|------|------|-----|-----|-----|-------|
| 5 | 내수 | 70.0 | 19.2 | 6.6 | 2.9 | 1.3 | 100.0 |
| 6 | 창업 | 68.6 | 19.1 | 7.3 | 3.3 | 1.7 | 100.0 |
| 7 | 경영 | 93.8 | 6.0 | 0.2 | | | 100.0 |
| 계 | | 76.6 | 17.2 | 4.2 | 1.4 | 0.6 | 100.0 |

주: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연수로 기업 수를 입력.
 사업코드가 동일한 사업을 수혜받은 기간이 여러 해에 걸치는 기업 수를 사업군별로 count.
 사업군간 중복수혜가 있는 기업의 경우 중복 count됨.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앙정부 사업을 사업군 기준으로 저자 작성

동일 사업을 다년간 지속·반복 수혜 시 기업의 수혜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혜금액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평균 수혜금액은 다년간 지속수혜를 받은 기업일수록 높은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수혜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군은 기술사업군이었으며, 사업당 1년 평균수혜금액은 5년 지속수혜 시 대략 7억 6천만원이었다.

〈표 III-17〉 사업군별 단일사업 지속수혜 현황(누적 수혜금액)

(단위: 천원)

| 연번 |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연평균 |
|----|----|---------|---------|---------|-----------|-----------|---------|
| 1 | 금융 | 10,736 | 25,308 | 23,813 | 59,152 | 49,811 | 12,475 |
| 2 | 기술 | 104,521 | 339,527 | 970,508 | 2,421,689 | 3,812,636 | 189,336 |
| 3 | 인력 | 134,966 | 271,705 | 389,368 | 298,727 | 237,317 | 157,756 |
| 4 | 수출 | 2,626 | 4,740 | 7,721 | 7,644 | 90,086 | 3,364 |
| 5 | 내수 | 10,587 | 26,075 | 33,470 | 43,192 | 118,892 | 17,237 |
| 6 | 창업 | 6,032 | 9,717 | 15,266 | 22,022 | 26,172 | 8,195 |
| 7 | 경영 | 34,308 | 68,895 | 79,166 | - | - | 36,685 |
| 소계 | | 115,227 | 294,406 | 690,707 | 1,318,530 | 1,824,426 | 193,607 |

주: 동일 사업 수혜를 여러 해 지원받은 경우만 합산하여, 기업당 사업수혜 누적금액의 기업간 평균.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앙정부 사업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저자 작성

한편, 다년간 지속수혜를 받은 경우의 연평균 수혜금액은, 기술부문을 제외하고는 수혜받은 연수와 수혜금액은 특별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술부문의 경우 다년간 수혜받은 기업일수록 큰 금액을 수혜받는 기업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18〉 사업군별 단일사업 지속수혜 현황(연평균 수혜금액)

(단위: 천원)

| 연번 |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연평균 |
|----|----|---------|---------|---------|---------|---------|---------|
| 1 | 금융 | 10,736 | 12,654 | 7,938 | 14,788 | 9,962 | 12,475 |
| 2 | 기술 | 104,521 | 169,764 | 323,503 | 605,422 | 762,527 | 189,336 |
| 3 | 인력 | 134,966 | 135,853 | 129,789 | 74,682 | 47,463 | 157,756 |
| 4 | 수출 | 2,626 | 2,370 | 2,574 | 1,911 | 18,017 | 3,364 |
| 5 | 내수 | 10,587 | 13,038 | 11,157 | 10,798 | 23,778 | 17,237 |
| 6 | 창업 | 6,032 | 4,859 | 5,089 | 5,506 | 5,234 | 8,195 |
| 7 | 경영 | 34,308 | 34,448 | 26,389 | | | 36,685 |
| 소계 | | 115,227 | 147,203 | 230,236 | 329,633 | 364,885 | 193,607 |

주: 동일 사업 수혜를 여러 해 지원받은 경우만 합산하여, 기업당 사업수혜 누적금액의 기업간 평균.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앙정부 사업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저자 작성

마. 중복수혜에 대한 조치 및 방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표적 쟁점 중의 하나는 중복수혜 문제이다. 중복수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제한된 자원에서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및 지대추구 행위와의 연계 가능성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의 모니터링과 관리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는 ‘재정사업 지원한도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앙부처의 금융지원사업에 한정하여, 한 기업에 대해 5년 동안 10회, 또는 누적금액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기청 내부에서 수행기관에 권고하는 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을 지니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범부처별로 통합된 사업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수행 내용이 즉각적인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 간, 부문 간의 중복수혜 및 수혜받은 금액 총량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그리고 아직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도화되어 반영되고 있지는 못하다.

〈표 Ⅲ-19〉 최고액 수혜기업 지원금액(1기업당 총액 기준)

(단위: 천원)

| 연도 | 단일 사업군 수혜 | 2사업군 수혜 | 3사업군 수혜 | 4사업군 수혜 | 5사업군 이상 |
|------|-------------|------------|-------------|-------------|-------------|
| 2010 | 22,000,000 | 18,654,000 | 35,794,804 | 14,783,650 | 17,667,000 |
| 2011 | 20,000,000 | 22,433,000 | 17,113,000 | 11,376,000 | 20,305,540 |
| 2012 | 19,000,000 | 27,045,494 | 19,778,160 | 16,683,400 | 19,717,804 |
| 2013 | 34,000,000 | 44,324,415 | 33,769,076 | 37,017,194 | 33,940,136 |
| 2014 | 64,813,400 | 31,296,000 | 36,471,500 | 32,460,000 | 43,083,600 |
| 2015 | 29,100,000 | 38,816,000 | 29,237,500 | 32,186,000 | 53,714,000 |
| 전 기간 | 102,855,000 | 85,311,000 | 129,546,430 | 105,423,800 | 112,437,881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전 기간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군 기준으로 저자 작성

3. 효과성 분석을 위한 중복 유형의 정의

중복의 유형에 따라 지원의 효과성은 달라질 수 있다. 단일시점에 단일사업을 수혜받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계열로 보면 연도별로 연속해서 수혜를 받을 경우와, 단연도에 1회적으로 단일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의 지원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일시점에서의 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가 수행되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중복수혜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수혜의 횟수(시계열 반복)와 중복수혜의 종류(동일사업군 내, 타 사업군 간 중복), 그리고 이 두 기준의 복합으로 다양한 경우의 중복 유형을 분류한다(〈표 Ⅲ-20〉 참조).

본 연구에서는 수혜중복 분석의 유형을 시점, 사업군, 기관, 사업의 4차원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각 경우의 수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먼저, 사업군 간 중복의 차이에 주안점을 두어 효과성 분석을 하고자 한다.

〈표 III-20〉 기업 수혜의 중복 타입

| 사업중복 시점 | | 사업군 | | |
|------------|------|-------------------------------|--------------------------------|--------------------------------|
| | | 단일 사업군 | | 다중 사업군 |
| | | 단일사업 | 다중 사업 | 다중 사업 |
| 시점 | 단일시점 | Type A 단일시점 단일 사업군 단일사업 | Type C 단일시점 단일 사업군 다중 사업 | Type E 단일시점 다중 사업군 다중 사업 |
| | 다중시점 | Type B 다중시점 단일 사업군 단일사업 | Type D 다중시점 단일 사업군 다중 사업 | Type F 다중시점 다중 사업군 다중 사업 |

자료: 이민호(2008b), p. 685를 확장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I-1] 중복의 타입의 정의(시간 프레임을 기준으로)



자료: 〈표 III-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IV.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쟁점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는 먼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 후자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에 집중해 있고 일부 금융지원 외의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존재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문제와 효과성 자체에 대한 지적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한편, 다른 국가의 사례와 유사하게,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중소기업 성장이라는 거시적 정책 목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효과성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1.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소기업 지원제도 관련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용우 외(2010)는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 금융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종류도 다양하고 각 부처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성이 많아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과 정책자금 지원 절차의 복잡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부처 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정부지원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원기관 사이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절차상의 복잡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병현 외(2006)에서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력 차이가 심해졌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이 투입 위주의 단기적 목표의 설정과 공급자 위주의 정책집행 그리고 관련 부처들 간의 원활하지 못한 업무 협조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개발하고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중소기업 지원제도 구조를 탈피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재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재현 외(2009)은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개선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부문별 유형을 파악하고 유사중복 지원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원제도 간 유사중복이 만연하고 지원주체의 복잡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체계화하고 지원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미 외(2014)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문제의 관점을 달리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는 긍정적 가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사중복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간 연계 및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상엽 외(2015)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군 심층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의 정책목표를 명시적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총량관리제도, 역할분담 관리체계 등 여러 가지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은 지원제도의 양적 발전에 비해 질적 발전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특히 개별 부처마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부처 간 연계가 부족하여 제도 간 유사중복 문제가 심각하며 또한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지원제도 운영으로 지원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개별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지원주체,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의 분석을 통해 개별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제도 간 연계를 통해 기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1〉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 저자 (발행년도) | 분석대상/내용 | 분석모형 | 분석 결과 |
|-----------------|---|--|--|
| 정용우 외 (2010) | 금융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 문헌고찰, 담당자 면담 | 중소기업 정책자금제도는 중복성이 문제되고 있음. 지원제도 간 연계성 강화와 절차상 복잡성을 개선하여야 함 |
| 이병헌 외 (2006) |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기술혁신 관점에서 분석 | 문헌고찰, 제도 분석 |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종류는 많지만 효과성이 저조한 상황. 그 이유로 기술혁신이라는 장기적 목표가 아닌 단기적 목표 설정의 문제점과 공급자 위주의 정책집행을 지적하고 있음 |
| 이재현 외 (2009) |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부문별 유형 파악하고 유사중복 지원실태 분석 | 2007년 중소기업종합정보 서비스(SP)에 등록된 지원사업 내용 분석 | 중소기업 지원제도 간 유사중복과 지원주체의 복잡성이 문제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대상 및 규모를 체계화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함 |
| 이상미 외 (2014)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유사중복 문제 분석 | 중소기업정책포털 「기업마당」에 공고내용 분석 |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유사중복이 많음을 확인하고, 유사중복 문제가 긍정적 가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 및 재구조화를 강조 |
| 이상엽 외 (2015) |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 - | 정책목표의 명시적 설정 및 사업체계 구축/중소기업 금융지원 총량관리 및 역할 분담 관리체제 구축, 자본 자금 공급 확대 등 |

자료: 정용우 외(2010), 이병헌 외(2006), 이재현 외(2009), 이상미 외(2014), 이상엽 외(2015)를 요약하여 저자 작성

2.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문별 사업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가장 많은 연구로는 금융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가. 금융부문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의 효과는 크게 수익성, 고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되었다.

1) 분석대상 데이터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 대부분은 주로 특정 지원 사업이 기업의 매출액,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따라서 관심 연구대상인 지원사업 내역자료와 기업 재무자료를 연계하여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구분하고 상호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했다.

위평량(2014)의 경우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기업의 고용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순투자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에 대한 내부자료와 KIS-value 자료를 연계해 제조업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상 중소기업 을 중심으로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의 성과를 분석했다. 김현욱(2005)은 12 개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현황 DB에 수록된 정책자금 지원 자료와 D&B Korea의 기업 DB에 수록된 재무제표를 연계했으며, 종속변수로는 총자산을 이용한 영업이익률을 사용했다. 장우현 외(2014)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이력과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연계해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 연간 인당지금액, 생존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노용환 외(2012)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사업이 고용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진공 DB로부터 중진공 정책자금의 수혜기업과 이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비수혜기업의 재무자료를 추출해 이용했다. 또한 보다 정확한 고용통계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DB를 연계해 사용했다.

한편 권선주 외(2006)의 연구는 한국신용평가의 재무자료를 이용해 조세 지원과 금융지원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기업 재무자료로부터 각 기업의 실효세율과 이자비율을 계산한 뒤 이 변수들이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조세지원과 금융지원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이지만, 조세지원과 금융지원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이러한 지원이 실효세율과 이자비율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어 지원정책의 효과로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강동수 외(2012)는 정책금융지원과 고용 및 기업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기업데이터(KED), 은행연합회, 근로복지공단의 원자료를 결합한 데이터를 사용했다. 주요 독립변수는 정부보증, 신기보보증, 중진공대출을 통한 지원 여부와 그 규모이고 주요 종속변수는 고용증감, 고용증가율, 총자산수익률 차분 및 총자산 대비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용해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차이를 비교했다. 다른 연구와 달리 강동수 외(2012)는 정책금융을 정부보증, 신기보보증, 중진공대출로 구분해 중복 지원에 관한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했지만, 효과성을 추정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정책금융 수혜 여부와 그 규모만을 변수로 채택해 중복 지원의 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2) 방법론

대부분의 효과성 연구가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사이의 성과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과 성향점수에 의한 짝짓기 추정법(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 등의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먼저 장우현 외(2014)는 성향점수에 의한 짝짓기 추정법을 이용해 수혜기업과 유사한 비수혜기업을 상호 비교해 효과성을 추정했다. 위평량(2014)은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성과 차이를 지원시점 전후로 비교해 효과성을 추정했다. 강동수 외(2012)의 경우 이중차분법과 성향점수에 의한 짝짓기 추정법을 함께 사용해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점검했으며, 노용환 외(2012)는 이중차분법, Heckman의 2단계 추

정방식과 처리효과모형(treatment effect model) 세 가지 방식을 사용했다. 김현욱(2005)도 유사한 방법으로 지원시점 이전의 기준연도와 이후의 비교 연도에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성과를 상호 비교해 효과성을 추정해 이중차분법과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했다. 단, 권선주 외(2006)의 경우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비교한 것이 아닌, 실패세율과 이자비율이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어서 단순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관심 연구대상으로 하나의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추정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관심 연구대상인 특정 지원사업과 다른 기타 사업의 지원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경우 보다 좋은 재무성적으로 인해 민간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특정 정책자금 지원을 기준으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구분해 상호 비교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해당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가 아닐 수도 있다. 복수의 지원사업을 함께 고려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중복 지원의 문제를 고려해 효과성을 추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3) 효과성

금융지원사업의 효과성은 수혜기업에 가져온 일차적 변화인 매출액, 고용, 수익성, 생존율 등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금융지원사업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자. 여기에 속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금융지원사업이 일부 양(+)의 효과를 불러온다는 결과를 내고 있지만 많은 경우 기업의 수익성, 고용 상황을 개선시켰다는 강한 증거를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미 언급된 관련 연구의 주요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장우현(2014)은 전술한 바와 같이 광업제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지원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중

소기업진흥공단은 수익성을 제외한 매출, 고용, 생존율 측면에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생존율 상승에만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권선주 외(2006)에서 중소기업 조세지원 및 금융지원 사업이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감면세율과 낮은 이자비율은 2000~2002년에만 모두 유의하게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기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정책(감면세율)은 성장성(총자산증가율)에 시간이 지날수록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금융지원정책(이자비율)의 효과는 안정적으로 유효하였다. 반면에 유형고정자산증가율을 지표로 본 정책 효과는 대부분 기간에서 유의성이 없었으며, 종업원 수 증가율 효과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위평량(2014)에서는 2012년 제조업의 「외감법」⁹⁾ 대상기업 중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규모가 큰 「외감법」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의 효과가 없었으며, 제조업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비율만 높아지고 다른 지표에서는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김현욱(2005)은 정책자금 지원이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사이에 영업이익률 개선의 정도에 차이를 유발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이 창업·초기단계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다음은 고용을 종속변수로 본 연구들의 결과이다. 강동수 외(2012)와 노용환 외(2012) 모두 정책금융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데 일시적인 도움을 주지만, 기간이 길어지거나 규모가 커질수록 그 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동수 외(2012)에서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고용 및 기업 성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금융의 수혜와 고용증가율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정책금융의 규모와 고용증가율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정책금융이 고용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커질수록 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했다. 노용환 외(2012)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책자금 신청기업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중 채택기업과 탈락기업을 비교하면, 고용효과는 자금투입 초기에 집중되고 있었으며, 3년 이후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지속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기·전자·의료정밀·영상음향·통신장비·광학기계 제조업이 정책자금을 통한 고용효과가 높은 생산활동부문으로 분석되었다. 자금 유형별 고용효과에서 단기고용효과의 경우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장기고용효과는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창업자금에서 높은 성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금 용도별 고용효과에서 단기의 경우는 운전자금이, 중장기에서는 시설자금의 고용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자금의 승인이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1) 업력이 낮고 2) 고용자 수가 적은 소기업일 경우 3) 초기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전도 유망한 기업일 경우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1) 담보수준 2)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고용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기존연구에서의 금융지원사업 효과: 수익성

| 저자 (발행연도) | 분석대상/내용 | 분석모형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분석 결과 |
|-----------------|---|-----------------------------------|---------------|---|---|
| 장우현 (2014) | 광업제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력 전수조사 | 상황점수 짜깁기 추정법 (PSME) | 정책자금 지원이력 | 사업체 성과 | 모든 지원기관에서 수익성개선 미달성/모든 지원기관에서 생존율에 유효한 영향 |
| 권선주 외 (2006) | 조세지원, 금융지원이 기업수익성,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 회귀분석 | 감면세율/ 이자비용 |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 유형고정자산 증가율/ 종업원 수 증가율 | 감면세율, 낮은 이자비용은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 미친다(2000~2002년)/ 감면세율은 총자산증가율에 긍정적 효과/ 유형고정자산증가율, 종업원 수 증가율은 성장성에 영향 미치지 않음. |
| 위평량 (2014) | 제조업의 「외감법」 대상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의 성과여부를 비교·분석 | 이중차분법(DD) | 정책자금 수혜기업 | 전년대비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순투자율/전년대비근로자증가율/부채비율 | 분석결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의 효과가 없음. |
| 김현욱 (2005) | 중소기업청 DB의 정책자금 지원자료 이용하여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경영성과 간 실증분석 | 정책 효과 분석방법 이용 (Ashenfelter, 1978) | 정책자금 지원 여부 | 수익성 (총자산을 이용한 영업이익이익률) |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 간 수익성 개선정도 차이 없음/장업·초기기업의 정책자금에 의한 영업이익률 개선효과가 더 강하다는 증거 일부에서 발견 |

자료: 장우현 외(2014), 권선주 외(2006), 위평량 외(2014), 김현욱(2005)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

〈표 IV-3〉 기존연구에서의 금융지원사업 효과: 고용효과

| 저자 (발행연도) | 분석대상/내용 | 분석모형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분석 결과 | |
|-----------------|------------------------------|---|--|-------------------------|---|---------------------------|
| | | | | | 정(+)/의 상관관계 | 분석 결과 |
| 강동수 외 (2012) | 정책금융, 고용, 기업 성과 간의 상관관계 실증분석 | 이산형 정책금융 모형(DID) | 정책금융지원 | 고용증가율 | 정(+)/의 상관관계 | 정책금융 수혜와 고용증가율은 정(+)/의 효과 |
| | | 연속형 정책금융 모형 (회귀분석) | 금융지원금액 | 고용증가율 | 음(-)/의 상관관계 | 정책금융 규모 커질수록 그 효과 반감 |
| 노동환 외 (2012)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 기술통계분석/ 이중차감법(DID) /Heckman류의 2단계 추정을 통한 결과 비교분석 | 정책자금승인/ 직접대출 · 대리 대출/ 자금용도/ 정책자금대여규모 | 고용효과 (종업원 수 증감인원) | 고용효과는 정책자금투입 초기에 집중, 지속성낮음 / 단기고 용효과(긴급경영안정자금), 중장기고용효과(개발기술 사업화자 금, 신성장기반자금, 창업자금) 높음/자금 용도별 고용효과: 단기(운전자금), 중장기(시설자금)/업력이 낮고 고용자 수가 적은 소규모 기업, 초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높은 미래 유망 한 기업일수록 고용효과 큼 | |

자료: 강동수 외(2012), 노동환 외(2012)를 요약하여 저자 작성

〈표 IV-4〉 기존연구에서의 수출지원사업 효과

| 저자 (발행연도) | 분석대상/내용 | 분석모형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분석 결과 |
|-----------------|--|-----------|--|--------------------------|--|
| 김은영 외 (2011) |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실효성 및 타당성 분석 | 회귀분석 | 기업특성/수출마케팅 에로서험/수출지원제 도 운영특성/기관별 지원제도의 인지도/수출지원제도 활용도 | 수출지원제도 활용도/수출성과 | 수출비중 낮은 경우, 시장개척이 어렵거나 외부환경 요인이 악화될수록 수출지원제도 적극 활용/수출비중 일정 이상이면 활용도 하락/복잡한 절차 및 수출지원 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수출지원의 실질적 효과가 미비한 경우 수출지원제도 활용도 감소/수출 지원제도 인지도 올라갈수록 활용도 증가/수출지원 사업에 대한 활용도 증가할수록 수출성과 증가 |
| 박광서 외 (2010) | 중소수출기업의 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 차이와 활용성과 분석 | 분산분석/회귀분석 | 중소수출기업 유형 | 지원제도 인지도/활용도/ 활용성과 | 전자무역 · 수출금융 지원사업(수출지원제도 인지도 차이 있음),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수출지원제도 인지도 차이 없음)/해외마케팅 · 전자무역 · 수출금융 지원사 업(수출지원제도의 활용도 차이있음)/수출지원제도의 활용 재무적 · 계량적 수출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 지 않으나 전략적 수출성과 · 수출 업무 효율화에는 긍정적 영향 미침/전략적 수출성 · 수출업무 효율화 (수출지원제도의 활용성과 차이 있음), 재무적 수출성 과(수출지원제도의 활용성과 차이 없음) |

자료: 김은영 외(2011), 박광서 외(2010)를 요약하여 저자 작성

〈표 IV-5〉 기존연구에서의 기술지원사업 효과

| 저자 (발행연도) | 분석대상/내용 | 분석모형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분석 결과 |
|-----------------|--------------------------------------|---|---|---------------|---|
| 박문수 외 (2012) |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 연구 실시 |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 |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 - 자금세제지원 - 정보지도지원 - 기술인프라지원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지원정책은 기술 자금세제지원 및 기술 인프라 지원 등의 직접적 기술개발 장 책인, 혁신형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 간 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

자료: 박문수 외(2012)를 요약하여 저자 작성

〈표 IV-6〉 기존연구에서의 성과관리체계 관련 연구

| 저자 (발행연도) | 분석대상/내용 | 분석모형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분석 결과 |
|----------------|---|----------------|-------------------------------|------|--|
| 홍운선 (2014) | 중소기업 지원사업 위탁기관 평가지표 도출하여 활용방안 모색 | 문헌분석/전문가 지문 | - | -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 을 통한 정량지표 활용/단기와 중장기를 병행한 성과평가 실시 |
| 김라산 외(2009) | 2003~2006년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 중 4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정보화정책 평가 단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상관분석 | 조직전략요인 /내부운영요인/ 지원과정보요인 | 만족도 | 전반적으로 조직전략요인, 내부운영요인, 정부지원과정보 인 만족도와 상관관계 있음/조직전략 분야 평가는 Step3 (장기적), 내부 운영분야 평가는 Step2(중기적), 지원과정의 평가는 Step1(단기적)의 비율 높음 |

자료: 홍운선(2014), 김라산(2009)를 요약하여 저자 작성

나. 수출 및 기술 부문

금융지원 이외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는 수출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김은영 외(2011)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활용성과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특성상 수출비중이 낮을 때에는 수출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다가 수출비중이 일정 이상 넘어가면 수출지원제도를 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시장 정보 부족, 마케팅 능력 부족 등으로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거나 외부 환경요인이 악화될수록 수출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지원제도의 절차가 까다롭거나 지원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원을 받더라도 그 실질적 효과가 미비한 경우 수출지원제도의 활용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지원사업 중 그 인지도가 높을수록 활용도 또한 증가하였다.

박광서 외(2010)에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활용성 및 성과에 대한 연구를 기업유형에 따른 차이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기술부분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연구를 살펴보면, 박문수 외(2012)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기업의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지원정책은 기술 자금세제지원 및 기술 인프라 지원 등 직접적인 기술개발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 간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체계 개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관리체계의 개선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홍운선(2014)에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성과평가체계의 바람직한 설정을 위해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정량적 지표를 활용한 성과평가를 제시하였으며, 단기와 중장기 성과평가 분석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김락상 외(2009)에서는 중소기업 정부지원 정보화정책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정부가 지원한 정보화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떤 단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실증하였다. 조직전략분야에 대한 평가는 3단계(장기적), 내부운영분야 평가는 2단계(중기적), 지원과정 평가는 1단계(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4. 중복수혜의 정의와 이슈

가. 개념적 정의

일반적으로 '중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불필요함'이나 '낭비'와 같은 부정적인 개념이 연상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책에 있어서 '중복'이라는 현상적 개념(phenomenal concept)이 바로 '낭비'나 '비효율'과 같은 가치적 개념(concept of value judgement)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¹⁰⁾ 왜냐하면, 정책 연구에 있어서의 '중복'은 정책의 수요자 측면에서의 '충분성'과 연계될 때 비로소 가치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유사사업이더라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충분성의 관점에서 중복의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 서비스의 수요를 기반으로 생각해 볼 때는 서비스 총량의 관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충분성'이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제한된 수준의 자원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집중 또는 배분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형평성'의 가치와 경쟁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상적인 중복이 효과성의 관점에서 가치가 있으면 낭비적 중복이 아니며, 그럼에도 여전히 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공방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중복의 비효율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대상이나 수단의 겹침의 개념이 아닌, 비용발생과 대비한 성과의 정도를 보고 정의해야 한다(이민호, 2008, p. 402).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상 및 수혜의 중복이 결과적으로는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단계별 타 부문

10) 이민호(2008b), p. 402.

에 대한 지원 중복이, 연속적인 기업의 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기업의 효과적인 자립과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홍성철 외, 2013, pp.98~99). 이것을 기업이 지원받은 사업의 개수와 부문에 대한 단순 중복 관점으로 보면 비효율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중복판단의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중복의 개념 및 영역에 대해서는 이민호(2008b)의 연구에서 비교적 잘 정리하고 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정책의 특성, 정책의 속성·수준·요소, 행정권한의 부여, 시간, 동일한 활동의 반복에 따른 누적, 적정수준, 비효율 등의 기준이 언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특성과 수준, 시간에 대한 기준을 차용하여 효율과 비효율을 판단할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표 IV-7〉 정부사업 중복 관련 용어의 정의

| 용어 | 내용 |
|---------------------|--|
| 1. 협의의 중복 (Overla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정도의 공통된 특성을 갖추고 있음 ○ 전체가 완벽히 동일하다기보다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 업무 및 역할을 공유 예) 서로 다른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둔 규제활동이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 ⇒ 나름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공통적인 겹침을 가짐 |
| 2. 이중 (Duplic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대상에 대해 완벽하게 동일한 속성 혹은 요소가 동시에 존재(consisting of corresponding or identical parts) 또는 동일한 카피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
| 3. 이원화 (Dual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에서 주로 쓰이는 이중의 개념 ex) 다른 단체 간의 동일한 행정권한 부여로 발생하는 중복의 문제 ○ 부분적이지 않고 상당히 포괄적임 ○ 행정체계의 이원화, 이중적 행정체계의 문제로 거론됨 |
| 4. 반복 (Repeti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성이 반영됨 ○ 다른 시점에 동일한 활동이 다시 이루어짐(performing again) |
| 5. 중첩 (Reiter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적 변화과정에서 동일한 활동이 다시 이루어져 누적됨(being piled up one on another) |
| 6. 가외 (Redundanc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활동이 일정 기준 또는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수준(exceeding what is necessary or normal) ○ 적정수준을 넘어선 나머지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의미 |

자료: 이민호(2008b),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의 유형별 효과 분석」, pp. 403~404, 저자 정리.

한편, 김찬수 외(2013)에서는 공공부문의 유사·중복의 정의를 ① 대상자 중복 ② 기관 간 유사중복 ③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중복,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부문의 입장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점으로, 필요 이상의 혜택을 동일 수혜자에게 서비스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헌에 따르면,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경우, 공공 및 민간부문의 타 사업과의 중복에 대한 질문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기준은 사업 목적, 수혜대상과 더불어, 유사사업간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세부사업 수준에서 확인하고 있다.

〈표 IV-8〉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유사·중복 식별 기준

| 유사·중복의 식별의 기준 |
|---|
| ① 사업목적이 다른지 |
| ② 사업목적이 같더라도 수혜대상이 다른지 |
| ③ 사업목적이 같으나, 유사사업 간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실적이 있는지 |

자료: 김찬수 외(2013)를 참조하여 저자 정리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에서는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두고,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중복이 없을 경우 유사중복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상미(2014)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사·중복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에 집중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복을 보는 기준으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모집기간으로 보았고, 사업 속성의 차별화를 통한 조치를 궁극적 목표로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관점을 일부 차용하여 사업의 속성(목적, 분야, 수단), 대상, 시간에 대한 관점을 활용하여 중복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효과성을 판단하였던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며, 지원부문 간 중복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중복 수혜로 볼 수도 있다는 관점을 유지하고자 한다.

〈표 IV-9〉 정부사업 중복의 범주

| 중복의 관점 | 중복의 종류 | 중복의 영역 |
|-------------------|-----------------|------------|
| 정책 제공자 관점 | ① 사업 대상자 중복 | 대상 |
| | ② 기관 간 유사·중복 | 전달체계(수행기관) |
| | | 수단 |
| ③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중복 | 정책 수단 | |
| 정책 수혜자 관점 | ①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수혜 | 대상 |
| | ② 여러 해 동안의 수혜 | 시간 |
| | ③ 여러 부문 수혜 | 정책 특성 |

자료: 김찬수 외(2013)를 참조하여 저자 추가 및 재구성.

1차년도 연구인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분류체계인 사업군 간의 중복수혜에 따른 효과성 파악에 그치고, 다음 장에서 개발되는 세분화된 사업 분류에 따른 사업수단 간의 중복수혜에 따른 효과성 분석은 2차년도 보고서에 담고자 한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수혜 규모의 크기의 적정성도 지원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충분성에 근거한 중복수혜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V.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류체계

1.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현행 사업을 진단하는 데에 활용하고자 한다. 분류체계는 사업의 목적, 수혜대상, 지원수단, 지원활동 및 산출물로 구성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분류체계에 기본적인 예산정보와 수행기관을 포함한 행정정보도 추가된다. 이러한 분류체계 개발의 일차적 목적은 현행 사업들 간의 유사중복·분절화 현황의 진단이다. 이러한 분류체계와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투자 방향과 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중복수혜 현황을 분류체계에 맞추어 분석하고, 어떠한 지원사업의 조합이 사업효과 창출에 효과적인지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중복수혜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는 선형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제한된 자원이라는 제약조건을 감안할 때, 소수의 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효과가 약한 일회성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 창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혜기업의 성장이라는 일차적 효과성 기준에서 본다면 중복수혜에 대한 가치판단은 실증의 문제이다.

사업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중복수혜의 유형을 분석하고, 어떠한 유형의 중복수혜가 효과성을 창출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세분화를 통한 적절한 타깃팅(targeting)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 아니면 수혜기업에 일반적인 지원을 하고 수혜기업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투자 또는 필요한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 방향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타겟팅이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면, 어떠한 지원사업의 조합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산당국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사업의 속성을 반영하는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범정부적인 중소기업 사업의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의 프로그램 분류체계는 개별 부처 단위로 개발되어 있으므로, 각 부처 내에서는 중소기업 진흥 목적의 사업은 파악할 수 있지만,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어렵다. 개별 사업의 속성을 기반으로 한 분류체계는 다부처 사업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시하지만,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본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사업의 중복수혜 현황이나 사업의 효과성 분석이 이루어지지지는 못하였다. 다시 말해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분류체계는 자체는 새롭게 개발되었지만, 이 분류체계에 근거한 후속 분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현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혜현황과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시도할 예정이다.

가. 기존 분류체계 검토

먼저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상의 분류체계, 최근에 장우현(2014)이 발표한 분류체계, 그리고 홍운선·이형철(2013)이 제안한 체계가 있다. 분류체계는 분류체계의 활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류체계의 목적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분류체계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1) 중소기업청 분류체계¹¹⁾

11) 이하의 내용은 중소기업청(2015)과 중소기업청(2016)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중소기업청에서는 관리하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상의 사업 분류체계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혜 현황 분석, 유사중복 사업 관리, 지원 기업에 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정책디렉토리는 세부/내역/공고사업을 구조화(코드화)하여 관리하는 체계이며, 지원사업을 대상별, 분야별, 부처/기관별로 조회·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함 대상사업이나 정책 범위는, 예산사업, 조세 등 비예산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제도를 포괄한다.

분류체계는 수행기관, 지원대상, 지원산업, 지원분야(대분류/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의미 있는 사업 분류 정보(사업의 목적-수혜대상-지원수단-지원활동-사업산출물) 기준으로 볼 때, 지원대상-산업-지원분야가 참고할 수 있는 분류 정보이다.

〈표 V-1〉 중소기업청 정책디렉토리 코드체계

| 연도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4digit | 3digit | 2digit | 1digit | 3digit | 3digit | 4digit | 4digit | 3digit |

| 연도 | 수행기관 | 대상1 | 대상2 | 산업1 | 산업2 | 대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내역사업 고유번호 |
|--------|--------|--------|--------|--------|--------|--------|--------|--------|--------------|
| 4digit | 4digit | 1digit | 2digit | 1digit | 2digit | 2digit | 2digit | 1digit | 3digit |

① 지원대상 :

(대상1)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 / 중견기업, 공통

(대상2) 일반·장애인·여성·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 기업

〈표 V-2〉 중소기업청 정책디렉토리 코드분류 - 지원대상

| 대상1 | 중소기업 | 창업벤처 | 소상공인 | 중견기업 | 공통(중견기업+중소기업) | |
|-----|------|------|------|------|---------------|--|
| | 1 | 2 | 3 | 4 | 5 | |

| 대상2 | 일반기업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마을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
| | 00 | 01 | 02 | 03 | 04 | 05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외에 창업벤처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지원대상의 두 번째 분류체계에서는 중소기업이라는 특징 외에 정책적 고려대상이 되는 장애인·여성·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을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다.

② 지원산업

(산업1) 전체·제조업·서비스업

(산업2) 일반·IT/SW·농축산·환경·국방/방위·문화/관광·스포츠·지역전략

〈표 V-3〉 중소기업청 정책디렉토리 코드분류 - 지원사업

| 산업1 | | 전체 | | | 제조업 | | 서비스업 | |
|-----|-----|-------|-----|----|-------|-------|------|------|
| | | 1 | | | 2 | | 3 | |
| 산업2 | 일반* | IT/SW | 농축산 | 환경 | 국방/방위 | 문화/관광 | 스포츠 | 지역전략 |
|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지원산업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분류 외에 중분류 수준의 기업분류와, 특성화된 산업을 타깃으로 할 경우를 고려하여 산업부분코드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다.

③ 지원분야 :

(대분류) 금융·기술·인력·수출·내수·창업·경영·제도·기타

(세분류) 대분류 특성에 따라 50개로 분류

지원분야는 지원 목적에 가까운 개념으로, 기존 사업을 포괄하기 위해 상향식으로 분류체계를 구축한 결과, 사업수단·지원 목적·사업활동 등이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분류에서 정책금융은 사업수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교육컨설팅은 사업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표 V-4〉 중소기업청 정책디렉토리 분류체계 - 지원분야

| 대분류 | 세분류 | | 대분류 | 세분류 |
|-----|-------------|-----------|-------------|----------|
| 금융 | 융자 | 시설 | 수출 | 해외진출준비 |
| | | 운전 | | 시장개척 |
| | | 혼합(시설+운전) | | 해외진출 |
| | | 원자재구매 | | FTA활용/대응 |
| | | 기술개발 | | 수출정보제공 |
| | 보증 | 시설 | 내수 | 온라인 |
| | | 운전 | | 오프라인 |
| | | 혼합(시설+운전) | | 홍보지원 |
| | 펀드/투자 | | | 공공구매 |
| | 보험(수출+무역) | | | 예비창업자지원 |
| 기술 | 단독기술개발 | 창업 | 사업화지원 | |
| | 공동기술개발 | | 창업공간지원 | |
| | 혼합(단독+공동) | | 재기지원 | |
| | 기술인력/장비지원 | | 창업정보제공 | |
|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경영 | 교육 | |
| | 기술정보제공 | | 컨설팅 | |
| | 시험/인증 | | 시설/입지지원 | |
| 인력 | 교육/훈련/연수 | 제도 | 정보화지원 | |
| | 해외인력 |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
| | 국내전문인력 | | 세제 | |
| | 국내일반인력 | 인증 | | |
| | 고용유지 | 제도 | | |
| | 작업환경개선 | 동반성장 | 동반성장 | |
| | 고용환경개선 | | | |
| | 인력정보제공 | | |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책코드매뉴얼(2015. 12)」, 2015.

2) 분류체계(장우현, 2016)

장우현(2016)의 정책등록번호 코드북(안)은 정부부처, 정책대상(업종, 규

모, 업력 기준, 정책적 특수대상 등), 지원목적, 지원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체계의 구체적 항목 구성은 기존 사업 정보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접근법을 취하였다.

〈표 V-5〉 분류체계안(KD): 지원대상

| 대상(5자리) | 코드 | 항목명 | 대상(5자리) | 코드 | 항목명 |
|---------|---------|----------|----------------------|------|----------------|
| 업종(1자리) | 0 | 전부 | 정책적 특수대상 (2자리) | 00 | 해당없음 |
| | 1 | 제조업 | | 01 | 신성장동력산업 |
| | 2 | 서비스업 | | 02 | 창업기술형(벤처) |
| | 3 | 기타 | | 03 | 기술혁신형(이노비즈) |
| 업종부가코드 | 4, 다섯자리 | 표준산업분류 | | 04 | 경영혁신형(메인비즈) |
| 규모(1자리) | 0 | 전부 | | 05 | 수출주도형 |
| | 1 | 소상공인 | | 06 | 뿌리산업 |
| | 2 | 소기업 | | 07 | 스포츠산업 |
| | 3 | 중기업 | | 08 | 문화콘텐츠 |
| | 4 | 중기업과 소기업 | | 09 | ICT 산업 |
| 업력(1자리) | 0 | 전체 | | 10 | 전략산업 |
| | 1 | 창업준비단계 | | 11 | 부품소재 |
| | 2 | 1년 미만 | | 12 | 지식서비스 |
| | 3 | 3년 미만 | | 13 | 바이오 |
| | 4 | 5년 미만 | | 14 |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
| | 5 | 7년 미만 | | 15 | 광역경제권 |
| | 6 | 1년 이상 | | 16 | 산업융합 |
| | 7 | 3년 이상 | | 17 | 산학연계 |
| | 8 | 5년 이상 | | 18 | 환경산업 |
| | 9 | 7년 이상 | | 19 | 기술지식창업기업 |
| | | | 51 | 여성친화 | |
| | | | 52 | 청년친화 | |
| | | | 53 | 고령친화 | |

자료: 장우현, 「중소기업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2014

지원대상 분류체계는 통합관리시스템보다는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다. 업종, 규모, 업력, 정책적 특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동일하게 분류하고, 규모 기준도 통합시스템과 동일하다. 통합관리시스템에 없는 추가적인 분류정보는 업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정책 고려 대상 분류에 기존 사업이 명시하고 있는 특정 기술분야나 산업분야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특수 대상 분류의 문제는, 기존 사업에서 명시하는 명칭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얻는 정보가 무엇인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끔 기존 사업에서 타깃팅하겠다고 지칭하는 기술분야나 산업분야의 명칭이 실질적 내용보다는 홍보 성격이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인 업종코드가 존재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구체적인 업종코드를 활용하면 굳이 불명확한 홍보 성격의 기술이나 산업분야 명칭을 분류체계에 활용할 필요성은 미약하다. 다만 참고자료로 확보해 두는 것 자체는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업력은 기존 지원사업의 대상기준이 기준년도 이상 혹은 미만으로 제시된 경우가 많아,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이상과 미만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존 사업이 주로 1, 3, 5, 7년을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분류체계와는 별도의 쟁점이지만, 이러한 지원 기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는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중소기업이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7~8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초기를 굳이 이렇게 세분화하여 지원 기준으로 설정한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지원목적의 경우 대분류는 진입·생산성향상·판로지원·전환지원으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목적을 중·소분류로 추가하였다. 기업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지원을 목적으로 분류된 체계라고 판단된다. 다만, 생산성 향상과 판로지원은 통상적인 중소기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원 수요이다.

〈표 V-6〉 분류체계안(KDI): 지원 목적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 일반 | 일반 | | |
| 진입지원 | 일반 | | |
| 생산성향상지원 (생산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 일반 | | |
| | 기술고도화 | | |
| | 공정프로세스 개선 | | |
| | 경영기능 개선 | 일반 | |
| | | 기술관련 경영기능개선(컨설팅) | |
| | | 지적재산권 관련 경영기능개선(컨설팅) | |
| | | 세무관련 경영기능개선(컨설팅) | |
| | | 판로관련 경영기능개선(컨설팅) | |
| | 인력고도화 | 법률관련 경영기능개선(컨설팅) | |
| | | 일반인력 확보/유지 | |
| | | 국내 일반인력 확보/유지 | |
| | | 국내 고급인력 확보/유지 | |
| | 인력고도화 | 해외 일반인력 확보/유지 | |
| | | 해외 전문인력 확보/유지 | |
| | | 작업환경 개선 | |
| 공급사슬관리 개선 | | | |
| 시설/기계고도화 | | | |
| 기타 | | | |
| 판로지원 (마케팅) | 일반 | | |
| | 공공조달판로 | | |
| | 수출판로 | 일반 | |
| | | 초기진출 | |
| | | 시장확대 | |
| | 내수판로 | 시장전환 | |
| | | 일반 | |
| | | 초기진출 | |
| | | 시장확대 | |
| | 하도급협상력 개선 | 시장전환 | |
| | | 정보비대칭 완화 | |
| 기타 | | | |
| 전환지원 | 일반 | | |

자료: 장우현, 「중소기업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2014.

지원수단의 분류체계에서, 지원수단 A는 규제 차등화를 제외하고는 재정 지원방식을 유형화한 것이며, 지원수단 B는 재정지원 방식 A가 실제로 활용된 용도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V-7〉 분류체계안(KDI): 지원 수단

| 지원수단 A | | 지원수단 B | |
|----------------|---|-------------|--|
| 대분류 | 중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 일반 | 일반 | 일반(세금감면 포함) | 일반 |
| 예산 | 일반 보조금(직접) 출자금(직접) 출연금(직접) 대출금(직접) 인력파견(직접) 지원시설건설/운영(간접) 품질인증(간접) 기타 | 운전자금 절감 | 일반 인력 원재료 작업환경 기타 |
| | | 시설자금 절감 | 일반 기계장비 건물 기타 |
| 금융 (예산제외) | 일반 대출금 보증 보험 총액한도대출 기타 | 성장자금 절감 | 일반 연구개발(R&D) 판로개척 교육 정보화 기타 |
| | | 기타 | 일반 |
| 조세감면 | 일반 세액공제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기타 | | |
| 시장 (조달) | 일반 중소기업 간 경쟁 소상공인 간 경쟁 소기업 간 경쟁 중기업 간 경쟁 | | |
| 생산 원가 보조 | 일반 전기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기타 | | |
| 규제 차등화 | 일반 생산요소관련(외국인 인력 등) 생산관련(환경규제 등) 시장진입규제(적합업종 등) 기타 | | |
| | | | |

자료: 장우현, 「중소기업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2014.

3) 기존 연구자들의 제안

홍운선 외(2013)에 의하면,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분석틀을 제안하면서, 분류를 위한 카테고리라 기준을 <표 V-8>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지원자금의 출처(회계유형), 지원형태(사업수행방식), 사업성격(부문) 이외에 기업규모, 지원자격, 성장단계는 지원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항목이다. 연구자도 언급하듯이, 성장단계별 구분은 기준 설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시장점유율, 성장률,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표 V-8> 사업 분석 시에 고려되어야 할 항목

| 회계유형 | 지원형태 | 사업 성격 | 사업 주기 |
|--|--|--|--|
|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기금 4. 기타 | 1. 보조 2. 출연 3. 융자 4. 보증 5. 보조+출연 6. 보조+융자 7. 출연+융자 8. 기타 9. 직접수행 10. 출자 | 1. 인프라지원 2. 기술개발지원 3. 경영활동지원 4. 인프라지원+기술경영 지원 5. 기술개발+경영활동지원 6. 기타 | 1. 단기: 한시적 사업 2. 중장기: 계속 사업 |
| 지원 방식 | 지원 기업규모 | 지원대상(지원 자격) | 기업 성장 단계 |
| 1. 직접지원 2. 간접지원 3. 혼합지원(한사업 내에 직접원과 간 접지원이 혼재된 경우) 4. 기타(고유사업) | 1. 영세기업(5인미만 소상공인 1인 창조 기업 등) 2. 소기업 3. 중기업 4. 중견기업 5. 일반중소기업 6. 기타(인프라지원) | 1. 제한성이 있는 경우 - 신용등급 B ⁺⁺ 수출 실적 1백만달러 이하 등 - 단, 일반적인 유흥업 종 제한 등은 자격 제한으로 보지 않음 2. 제한성이 없는 경우 3. 지원대상의 제한성 여 부를 모름 4. 해당사항 없음 | 1. 창업기 2. 성장기 3. 창업기+성장기 4. 성숙기(안정기 포함) 5. 구조전환기 6. 성장단계 구별 없 음 7. 기타(인프라 지원) |

주: 해당 분류의 엄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업규모(영세기업의 기준)와 기업 성장단계의 분류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자료: 홍운선 외(2013), p. 5.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류체계의 구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다음의 순서에 따라 구성하였다.

첫째, 분류체계의 카테고리는 1차적으로 법령, 기존의 기준, 재정사업 속성정보 분류체계 등을 준용하여 대략적인 프레임 작성 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공고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대상사업특성에 맞게 조정하였다. 연구의 범위 내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지원 목표(Goal): 중소기업 지원 영역.
- 수혜 대상(Target Groups):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혜대상
- 활동(Activities):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루어지는 사업활동의 내용
- 사업수행방식(Methods of Intervention): 정부가 실제로 수행하는 일의 내용.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는 활동의 내용이 경영컨설팅이더라도, 중앙정부는 자금을 제공하고 민간기관이 컨설팅을 수행할 경우, 중앙정부의 사업수행방식은 자금 제공임

〈표 V-9〉 분류체계 프레임(안)

| G | O | T | A | M |
|-----------|---------|-------------------------|--------------------|----------------------------------|
| 지원 목표 | | 지원대상 | 수단 | |
| 목표 | 하부 목표 | 수혜 대상 (Target Group) | 활동 (Activities) | 수행방식 (Method of Intervention) |
| 초기투입요소 지원 | 운영자금 | 기업규모 기준 | 투입요소 제공 | 자금지원 |
| | 자재 | 수출 기준 | 역량 강화 | 직접서비스 |
| | 인력 | 업력 및 성장단계 | 영향력 제고 | 간접서비스 |
| | 기술 | 산업 및 업종 | 인프라 제공 | |
| | 장비/시설 | 정부 지정 기업특성 | | |
| 시장매칭 지원 | 공간/입지 | 기술 및 설비 | | |
| | 내수 | 신용 및 사업자 | | |
| 운영지원 | 수출 | | | |
| | 경영컨설팅 | | | |
| | 상품화/사업화 | | | |
| | 홍보 | | | |

자료: 저자 작성

1) 목표 및 목적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업들의 집합체로, 지향하는 바가 다른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에 분석할 경우 같은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지원목적에 따라 결과의 방향이 다르므로 정책의 효과성이 상쇄될 수 있다.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의 목적은 현행 법령 기준의 중소기업 정책의 목표 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중소기업 정책의 기초를 확인하고, 확인된 법령상의 목적을 기준으로 목적별 사업의 분류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목적별 사업을 분류한 효과성 분석이 가능한지를 기능하고자 하였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대상 정책의 목표·목적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후생증대 등 거시적인 국가를 위한 목적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목표, 수단으로서의 분야별 목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실행목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술개발, 경영혁신, 창업의 촉진, 생산성 향상, 판로확보, 국제화 촉진, 인력 확보가 주요 중소기업 정책의 목표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구분하는 부문 내지 사업군과 유사한 수준에서의 구분이다.

또한 중소기업 재정지원정책의 목표가 투자 성격인지, 복지 성격인지에 따라 일반기업에도 적용되는 목표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적용되는 목표(보호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의 관점이 아닌)를 구분하여(특별한 정책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포함), 육성(투자적)과 보호(복지적)의 관점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표 V-10〉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목표 및 목적(투자적 관점)

| 거시적 목적 | 중소기업 정책 목적 (중소기업 대상 목적) | 세부 목표 (수단으로서의 목표) | 실행 목표 |
|---------|----------------------------|--------------------------|--|
| 국가경제 발전 | | 투명한 경영 | |
| 국민후생 증대 | | 사회적 책임 다함 | |
| |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 기술개발 경영혁신 | |
| | 중소기업 설립 촉진 | 건전한 기업가 정신, 자금심 고양 | |
| | 기업의 성장, 발전 | | |
| | 생산성 향상 | | 생산 시설 현대화 정보화 촉진 |
| | 판로확보 | 수주기회 증대 | |
| | | 제품판로 확대 | 유통 효율화 (유통구조 현대화) 유통 효율화 (유통사업 협동화) |
| | 국제화의 촉진 | 국제화의 촉진 |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
| | |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대응 |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시책 실시 |
| | 인력 확보 |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 | 인력 양성 |
| | | | 인력 공급 |
| | | | 근로환경 개선 |
| | | | 복지수준 향상 |
| | |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

자료: 국가법령센터, 「중소기업기본법」(접속일: 2016. 5.10), 저자 요약

〈표 V-11〉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목적(복지적 관점)

| 중소기업 정책 목적 (중소기업 대상 목적) | 세부 목표 (수단으로서의 목표) | 실행 목표 |
|----------------------------|----------------------|-------------------------|
|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 |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단체 조직 촉진 |
| | |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단체운영 합리화 |
| |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 중소기업 집단화 |
| | | 중소기업 협동화 |

〈표 V-11〉의 계속

| 중소기업 정책 목적 (중소기업 대상 목적) | 세부 목표 (수단으로서의 목표) | 실행 목표 |
|----------------------------|----------------------|--|
| | 기업 구조의 전환 | 소기업의 법인 전환 |
| | | 사업 전환 |
| | |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 |
|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촉진 |
| |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협력 촉진 |
| |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동반성장 촉진 |
| 사업 영역의 보호 | |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절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 |
| 공제제도의 확립 | | 서로 도와 도산 막기 |
| | | 기반 조성 (공동구매 및 공동 판매사업 등) |

자료: 국가법령센터, 「중소기업기본법」(접속일: 2016. 5. 10), 저자 요약

나)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은 구조 고도화, 경쟁력 강화, 경영기반 확충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항목을 고려한 중소기업 진흥의 정의는 구조 고도화(합병, 분할, 전환 등), 자동화, 이업종교류, 협동화, 협업, 환경오염 저감, 국제화, 경영안정, 사회적 책임경영, 가업승계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표 V-12〉 「중소기업진흥법」상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체계(1)

| 목적 | 항목 | 목표 | 활동 | 수단 |
|------------------------|------------|-------------------------|--|--|
| 구조고도화 (제2장) | 구조고도화 | 사업규모, 경영기법, 생산방법의 개선 | 법안전환, 기업합병 및 분할, 공동사업, 합업, 사업전환, 사업장 이전, 경영 합리화 등 | 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지원 - 상담, 진단, 지도 및 정보제공 |
| | 자동화 | 자동화 설비업체와 엔지니어링 사업자 육성 | | - 자동화 설비 보급 - 시범사업 표준화 - 전문인력 양성 - 자금지원 등 |
| | 이업종교류 | 다른 업종 중소기업자 간 정보 및 기술교류 | | - 전문가 파견 - 자금지원 등 |
| | 협업 | 집단화 시설공동화(단지조성사업 등) | 협동화 실천계획 수립 | |
| 중소기업 경영 기반 확충 (제4장) | 입지/환경오염 저감 | 공장 입지의 원활한 공급 | | - 자금 지원 - 인력양성 - 기술개발자금 출연,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공동법인 설립 등에 대한 지원 등 |
| | | 환경오염 저감 | 제품생산공정 개선(저공해 공정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설비 설치, 폐자원 재활용 위한 시설 설치) | - 사업시행(산업단지개발사업, 단지조성사업,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등) - 자금, 기술지원 (환경오염저감기술 사업화) |
| | 지도 / 연수사업 | | | - 경영 및 기술지도에 대한 계획 수립 - 지도실시기관 지정 |
| | | | | - 지도비용 출연 - 지도 기존 공고(대상, 지도자 요건, 절차, 결과측정 및 평가, 체재 등) - 연수계획 수립, 연수기관 지정 |

자료: 「중소기업진흥법」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

〈표 V-13〉 「중소기업진흥법」상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체계(2)

| 목적 | 항목 | 목표 | 활동 | 수단 | |
|---------------------------------|-------------|--|---|---|--|
| 중소기업 경영 기반 확충 (제4장) | 국제화 | 국제화 기반조성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 | 외국인 투자 유치, 기술 도입 및 기술교류, 해외투 자 진출, 기술이전, 임직원 해외연수·견학 등 | 정보제공 - 수출자금, 해외투자자금 용자 -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용자 - 해외투자보험 지원 - 중소기업 청년 및 진흥기금에서의 용자 - 신용보증 우선적 실시 - 해외이전에 따른 정보제공 | |
| | | 생산시설 해외 이전 | 판매부진의 해결 일시적 자금난, 인력난 등의 해결 원자재 확보 | -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조치 요청 | |
| | 경영안정 | 경영정상화 | | | - 운영 (중소기업 경영개선 지원시스템) - 계획수립 (인근경영안정지원계획) - 중소기업배출채권보험 설치 - 경영안정 자금 지원 - 판로확보 지원 - 제품개발, 품질향상 및 상품화 지원 (- 세액 공제) (- 세액 감면) |
| | | | | | 민속공예산업 지원 |
| | 기업승계 | 승계지원 | | | - 지참지권 - 전문인력 양성 - 교육 및 연수 - 컨설팅 지원 등 - 예산 출연 보조 |
| | | | | | 기업승계센터 지정 |
| | 사회적 책임경영 | 대상공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 려한 경영활동 | |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 |
| | | | | | |

자료: 「중소기업진흥법」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

다) 정부의 특정 중소기업 정책목표

정부의 기조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의 목표는 신성장동력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거시적 정책 목표가 있다. 이에 따라 특정 목표 대상이 법령 등에 의해 정의되고, 이를 활용한 사업들이 설계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거시적 정책목표를 본 정책사업 분류체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책사업의 목적을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산업, 지역 등의 기업 육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효과성 관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중소기업 자체를 위한 투자 및 복지적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2) 대상

지원대상에 대한 분류는 기존 지원사업 분류체계의 타깃팅(targeting) 부분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에 대한 정의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생애주기(창업기, 성장기, 안정기, 재도약기 등)의 개념을 대상으로,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수행기관별 지원체계를 예로 살펴보면, 중진공, 기보, 신보 모두 중소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기업별 성장단계는 일반적인 정책이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듯, 그렇게 간단하게 대상을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경우는 성별, 나이, 학력, 경력 등의 비교가능한 객관적 지표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필요서비스를 정의하는 데에 크게 무리가 없으나, 기업의 경우는 업종별 특성이 다르고, 업력, 매출액, 매출액변화율, 종업원 수 등의 수치화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한 기업의 성장단계를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제시하겠다는 2012년의 계획과는 다르게, 성장단계를 객관화하는 방법은 정성적인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 단계의 정책기조(필요한 대상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에서 성장단계의 정의는 정책의 대상을 조준하는 데 필수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요인이 성장단계 이외의 구득 불가능한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이 크며, 또한 성장단계의 객관적 판단도 불가능하다(부록 1) 참조). 실질적으로 성장단계 별로 필요지원을 한다는 발상이 오히려 시장 내에서의 메커니즘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기업들 스스로가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즉 시장 내부의 주체가 정보 파악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의 정책으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대상 부분의 구성은 현재 공고되고 있는 사업의 기준을 포괄하는 관점을 취하기 위해, 2016년 4월 27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정책 포털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 공고되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하였다(전체 목록 중 지원대상이 명기되어 있는 약 50% 사업 대상). 이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대략적인 사업 대상을 구조화한 것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의 지원대상의 프레임을 작성하였다.

종합과정 중 대상에 대한 기준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는 성향을 반영해, 창업/성장(투자적 성격: 성장하는 기업의 육성, 복지적 성격: 취약기업의 보호 및 지원 개념과 연동됨)으로 임의로 구분하여 기준을 취합해 보았다.

〈표 V-14〉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한 공고조건(정량기준)

| 구분 | 기준 A | |
|-------|------|--|
| 업력 | 창업 | (예비창업, 3개월 이상, 1년 이내), 3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
| | 성장 |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
| 종업원 수 | 창업 | (개인, 2인 이상의 팀, 4인 이내, 5인, 10인), 20인 이하, 50인 이하(미만) |
| | 성장 | (3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10~300인 |
| 매출액 | 창업 | 1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
| | 성장 |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비제조), 100억원 이상(제조업), 150억원, 200억원, 400억원 이상 |

〈표 V-14〉의 계속

| 구분 | 기준 A | | |
|---------------|---------------------------------------|--|--|
| | 성장지원 | 3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20% 이상 | |
| | 비중 긴급지원 | 전년 동기(동월)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 직전년도(또는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 | |
| 수출액 (직전년도) | 창업 | 10만달러, 50만달러, 100만달러, 200만달러, 500만달러 이하(미만) | |
| | 성장 | 50억원 이상(SW 벤처), 100억원 이상(벤처), 200만달러, 3년내 500만달러 | |
| | 비중 | 수출비중이 15%(30%) 이상 | |
| 총자산 | 100억원 이상 | | |
| 연구개발비 | 2,500만원 이상,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3%(5%) 이상 | | |

자료: 기업마당(www.bizinfo.go.kr) 공고사업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6. 4. 27)

사업마다 다양한 방식의 대상을 정의하고 있으나, 특정 기준 이외의 본질적인 사업대상 및 목적에 대해 서술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한 특정 기준도 사업제안자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일관된 경향으로 취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표 V-15〉는 다소 나열식이더라도 대략적인 사업대상의 범주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시함).

또한 사업 설명서를 보며,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량적 판단이 가능한 기준과, 그렇지 않은 비정량 기준(자격 등)을 분류하여 카테고리화하였다.

〈표 V-15〉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한 공고조건(비정량기준)

| 구분 | 기준 | |
|------|----------|--|
| 신용 등 | 신용등급 | 일정 신용등급 이상 기업 신보의 종합신용등급 K12* 이상(CPA감사보고서 미보유시 K11) |
| | 거래정지 여부 | 연체 등 공공정보등록, 저신용자 |
| | 법정관리 여부 | 여부 |
| 경영상황 | 경영 위기 기업 | 3년연속 영업이익이 지급이자보다 낮거나(이자보상배율1이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
| | 정상 경영 기업 |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기업 자본잠식 등의 재무적 문제가 없는 기업 |
| | M&A | 거래정보망에 매수·매도 기업으로 등록 등 |

〈표 V-15〉의 계속

| 구분 | 기준 | |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특허(출원, 등록), 실용신안, 상표, 의장(=디자인) | |
| 시설기준 | 공장보유 | 여부 |
| | 연구소 운영 여부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 부서) 보유기업 |
| | 품질관리 시스템 | 유지 여부 |
| 기술 및 제품 | 기술 기준 |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뿌리기술 |
| | 제품 기준 | CE, UL, JIS 등 해외유명규격 획득업체 및 NT, KT, EM 등 신기술 인증제품 소비재 완제품 보유(생산)기업 일반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신제품(B2C제품) 소모품 / 국내개발제품 / 3년 이내 개발 제품 |
| 지역 | 서울, 부산, 대구·경북 등 | |
| 법인 | 국내법인, 해외법인 여부 | |
| 행정 | 사업자 등록 | 여부 |
| | 협동조합 | 가입 여부 |
| | 4대보험 | 가입 여부 |
| | 보증 | 가치평가보증/IP우대보증 |
| 프랜차이즈 | 가맹점 | 가맹점 10개 이하 가맹점 10~50개 운영 |
| | 직영점포 | 외식업: 직영점포가 2개 이상이며, 2호점 업력이 최소1년 이상 서비스 / 도소매업: 직영점포가 1개 이상이며, 1호점 업력이 최소1년 이상 |
| 산업구분 | 뿌리산업 녹색·신성장동력중소기업 한국형 신제조기반 전략기술 부품·소재산업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구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 기업 선정 | 글로벌강소기업, 우수기업군(예: KB히든스타 등) 혁신형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 우수벤처기업 | |
| 제외 업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 |
| 특정대상 | 여성, 장애인 등 | |

자료: 기업마당(www.bizinfo.go.kr) 공고사업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6. 4. 27)

3) 수단

수단의 분류는 현재 개발 중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의 정부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한 재정속성정보 분류체계(안)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재정속성정보 분류체계(안)은 단위사업 수준의 전 부처 전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분류체계로, 세부사업 수준의 특정 부문(중소기업 지원)의 사업을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수단에 해당되는 사업수행방식(Method of Intervention)과 활동(Activity)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석에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준용하여, 대상인 기업의 생리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분류체계를 작성하였다.

〈표 V-16〉 재정속성정보 분류체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수단

| 1차분류 | | 2차분류 | | |
|---------------------------------------|----------------|------------|--------------|-----------|
| 사업수행방식 (Method of intervention) | | ①규제 | ②보조금 | ③출자 |
| | | ④출연 | ⑤용자 | ⑥보증 |
| | | ⑦이차보전 | ⑧공적보험 | ⑨바우처 |
| | | ⑩공공정보 제공 | ⑪국제기구 분담금 | ⑫정부직접서비스 |
| | | ⑬계약 | ⑭기타 | |
| 예상 사업 산출물 (Activity) | 직접 제공 | ①자금/재원 | ②자원(장비 시설 등) | ③대민서비스 제공 |
| | | ④기관운영지원 | ⑤기타 | |
| | 실행 역량 강화 | ①보호 및 재활 | ②교육 및 직업교육 | ③오락 및 문화 |
| | | ④사람·자원의 이동 | ⑤기타 | |
| | 촉진 및 영향력 제고 | ①자문 정보제공 | ②매칭·위탁·연결 | ③홍보 |
| | ④네트워킹 | ⑤기타 | | |
| | 규제 실행 | ①허가 | ②조사 | ③판결 |
| | | ④처벌 및 제재 | ⑤보호 | ⑥개입 |
| | | ⑦기타 | | |
| | 법·조직 변화 | ①법 및 규칙 | ②변화 도입 | ③기타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속성정보 분류체계(안)」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분류체계 개발안

가. 목적

중소기업 지원의 목적은 법령 및 기존 사업설명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언적인 내용에서 나아가, 시장실패에 근거한 중소기업에 지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목적을 구체화하였다. 그 이유는 기존 법령이나 사업설명서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 많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목적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V-17〉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기초(참고용)

| 기초 | 항목 | 세부 내용 |
|----|-------------|--|
| 육성 | 중소기업 설립 촉진 | 기업가정신 함양 |
| | 기술개발 | |
| | 경영혁신 | 사업규모, 경영기법, 생산방법의 개선 |
| | 생산성 향상 | 생산시설 현대화, 정보화, 원자재 확보 |
| | 판로확보 | 수주기회 증대, 판로확대, 유통효율화 |
| | 국제화의 촉진 | 수출입 진흥, 외국기업과의 협력 증진, 국제환경변화대응, 외국인 투자유치,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기술이전, 해외 투자 진출, 생산시설 해외이전 |
| | 인력 확보 | 인력양성, 인력공급, 근로환경 개선, 복지 향상, 인식개선 |
| 보호 |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 협동조합 등 조직 촉진, 운영 합리화 |
| |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 중소기업 집단화, 협동화 |
| | 기업 구조의 전환 | 법인전환, 사업전환, 합병 |
| |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 중견기업, 대기업 등과의 경쟁, 협력, 동반성장의 촉진 |
| | 사업 영역의 보호 | 중소기업자사업적합분야에서의영역확보 |
| | 공제제도의 확립 | 서로도와 도산막기, 공공구매 및 공동판매 기반 조성 |

자료: 국가법령센터, 「중소기업 기본법」(접속일: 2016. 5. 10)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중소기업의 지원 목적을 크게 중소기업의 육성(투자적 목적)과 보호(복지적 목적)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표 V-17〉와 같다. 〈표 V-17〉를 보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기초를 크게 육성과 보호로 나누고 있다. 먼저 중

소기업 육성을 기조로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설립과 발전을 위한 지원을 중점으로 설립지원 및 기술·인력 등의 투입요소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재원 등의 직접적 제공이 아닌 중소기업 간의 조직화 및 중소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사업 전환 등을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은 투자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보호는 대부분이 규제나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목표를 선언적으로는 포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육성이 곧 보호를 포함하는 내용이므로, 굳이 중소기업 지원의 목적을 보호와 육성으로 구분하는 실효성은 미약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실패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시장실패 요인의 해소를 사업의 목표로 판단하고, 시장실패 요인의 해소를 지원목표로 설정하였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시장실패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개별 투입요소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자금, 인력, 기술 등의 투입요소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 해소를 위한 투입요소 지원 영역이 있다.

둘째는, 시장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국내외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겪으므로,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영역이 있을 수 있다.

셋째는, 경영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역량 및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정보 지원영역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표 V-18>과 같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목적을 분류하였다. 먼저 중소기업 설립 시 필요한 초기 투입요소에 따라 운영자금, 자재, 인력, 기술, 장비/시설, 공간/입지로 세부 항목을 설정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목적을 분류하였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상품 판매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내수와 수출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운영자 관점, 즉 기업경영 관점에서 분류하여, 그 지원사업이 경영컨설팅을 위한 것인지, 제품의 상품화 및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것인지, 홍보를 위한 것인지로 세부 항목을 설정하였다.

〈표 V-18〉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목적 분류 항목

| 항목 | |
|----------|---------|
| 초기 투입요소 | 운영자금 |
| | 자재 |
| | 인력 |
| | 기술 |
| | 장비/시설 |
| | 공간/입지 |
| matching | 내수 |
| | 수출 |
| 운영 | 경영컨설팅 |
| | 상품화/사업화 |
| | 홍보 |

자료: 저자 작성

나. 대상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지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타깃팅하여, 지원사업과의 연계성이 강한 가장 타당한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분류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현존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사업내용 분석을 통해 지원대상의 특성을 종합하고, 기존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분류체계를 마련하였다.

먼저 기존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류한 결과, 다소 나열식으로 여러 조건이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항목을 묶어 세부 카테고리를 구성하였으며, 일부 카테고리만 밀집하여 사업이 배치될 경우, 전반적인 사업을 보는 프레임의 객관적 균형을 잃을 수 있어 기존 사업의 지원대상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대상을 기업규모에 따라 분류하였다. 기업규모는 일반규모와 수출 규모로 분류되었고, 일반규모 안에는 세부 항목으로 법적 규모, 매출액 기준,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때 법적 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수출 규모에는 아래 항목으로 수출액 크기, 수출비중, 수출기반을 세부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때 수출기반이란 것은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얼마만큼의 수출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종업원 수, 수출부서의 존재 여부, 개도국을 수출대상자로 설정하고 있는지, 수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표 V-19〉 대상 분류 항목(기업규모)

| 항목 | | 주요내용 |
|------|----------|--|
| 기업규모 | 법적 규모 | (1) 중소기업 (2) 중견기업+중소기업 (3) 중기업 (4) 소기업 (5) 소상공인 (6) 중견기업 (7) 대기업 (8) 중견기업+대기업 (9) 전체기업 (10) 우선지원대상기업 |
| | 매출액 | (11) 10억원 미만 (12) 30억원 미만 (13) 50억원 미만 (14) 120억원 미만 (15) 400억원 미만 (16) 10억원 이상 (17) 30억원 이상 (18) 50억원 이상 (19) 120억원 이상 (20) 400억원 이상 |
| | 상시 근로자 수 | (21) 5인 이내 (22) 10인 이내 (23) 20인 이내 (24) 50인 이내 (25) 100인 이내 (26) 5인 이상 (27) 10인 이상 (28) 20인 이상 (29) 50인 이상 (30) 100인 이상 |

〈표 V-19〉의 계속

| 항목 | | 주요내용 |
|----------|------|--|
| 수출 규모 | 수출액 | (31) 50만달러(5억원) 미만 (32) 100만달러(10억원) 미만 (33) 200만달러(20억원) 미만 (34) 500만달러(50억원) 미만 (35) 1,000만달러(100억원) 미만 (36) 5,000만달러(500억원) 미만 (37) 500만달러(50억원) 이상 (38) 1,000만달러(100억원) 이상 (39) 5,000만달러(500억원) 이상 |
| | 수출비중 | (41) 수출비중 10% 이상 (42) 수출비중 15% 이상 (43) 수출비중 30% 이상 |
| | 수출기반 | (51) 해외중업업 수(여부) (52) 수출부서 여부 (53) 수출대상지(개도국/개도국 외) (54) 수출경험도 |

자료: 기업마당(www.bizinfo.go.kr)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6. 4. 27)

다음으로는 기업의 업력 및 성장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체계를 설정하였다. 성장단계에 대한 정의에 관한 부분은 홍운선 외(2013)와 본 보고서의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존하는 지원체계상의 타깃팅이 대부분 성장단계를 근거로 하고 있어, 기존 사업의 설계가 얼마나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지 확인하고자, 분류체계를 편성하였다.

〈표 V-20〉 대상 분류 항목(업력 및 성장단계)

| 항목 | | 주요내용 |
|--------------|--------|---|
| 업력 및 성장단계 | 업력 기준 | (0) 예비창업(창업준비단계) (1) 3개월 미만 (2) 1년 미만 (3) 3년 미만 (4) 5년 미만 (5) 7년 미만 (6) 1년 이상 (7) 3년 이상 (8) 5년 이상 (9) 7년 이상 (10) 전기간 |
| | 성장 단계 | (10) 창업준비기 (11) 창업기 (12) 성숙기(성장기) (13) 안정기 (14) 전환기 (15) 창업기 + 성숙기 (16) 성숙기 + 안정기 (19) 전단계 |
| | 고성장 단계 | (21) 고성장 기업 (22) 매출액 증가율 8% 이상 (23)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

자료: 기업마당(www.bizinfo.go.kr)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6. 4. 27)

〈표 V-21〉 대상 분류 항목(산업 및 업종)

| 항목 | | 주요내용 |
|---------|-------|--|
| 산업 및 업종 | 일반 업종 | (0) 전업종 (1) 제조업 (2) 서비스업 (3) 제조업 + 서비스업 (4) 광업 (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금융 및 보험업 (1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9) 특정 업종 |
| | 산업 기준 | (21) 뿌리산업 (22) 부품/소재산업 (23) 지역전략/연고사업 (24) 지식서비스산업 (25) 문화콘텐츠 산업 (26) 바이오 산업 (27) 융복합 산업 (28) 프랜차이즈 (29) 녹색기술 산업 (30) 첨단융합 산업 (31) 고부가서비스 산업 (32) 광역경제권 산업 (33) 수출주도형 (34) 스포츠 산업 (35) ICT 산업 (36) 전략산업 (37) 산업융합 (38) 산학연계 (39) 환경산업 (40) 기술지식창업기업 (99) 특정 산업 |

자료: 기업마당(www.bizinfo.go.kr)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6. 4. 27)

또한, 업종에 대해서는 ‘일반 업종’과 ‘산업 기준’의 두 가지 카테고리로 대상을 분류하였다. 일반적인 기준은 법령상의 기준을 차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설명서에 업종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법령상의 기준에 포괄되지 않는 특정 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 업종 및 특정 산업을 세부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기업특화 특성에 대한 카테고리는 크게 정부의 문서에서 특별히 지정한 ‘정부 특정기업’과, 기존 카테고리에서 활용하던 ‘보호대상기업’의 두 가지 기

준으로 분류하였다. ‘정부 특정기업’은 법령상 새로 정의된 분야나 유형을 의미한다. 하위 항목으로는, 자격기준인 창업기술형(벤처), 기술혁신형(이노비즈), 경영혁신형(메인비즈)가, 분야기준으로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창조기업, 농공상용합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있다. ‘보호대상 기업’의 항목으로는 사회적 약자 관련 기업 분류기준인 여성친화, 청년친화, 고령친화, 장애인 기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기업의 조건으로 지방소재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하였다.

〈표 V-22〉 대상 분류 항목(기업특화 특성)

| 항목 | | 주요내용 |
|------------|------------|--|
| 기업특화 특성 | 정부특정 기업 | 자격기준 (1) 창업기술형(벤처) (2) 창업기술형(벤처) (3) 경영혁신형(메인비즈) |
| | | 분야기준 (11)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12) 창조기업(법령기준) (13) 농공상용합기업(법령기준) (14) 중소기업적합업종(법령기준) |
| | 보호대상 기업 | 사회적 약자 관련 (21) 여성친화 (22) 청년친화 (23) 고령친화 (24) 장애인기업 |
| | | 기업조건 (31) 지방소재 기업 (32) 마을기업 (33) 협동조합 |

자료: 중소기업청 정책데이터리포트준코드체계(표 V-23), 기업마당(www.bizinfo.go.kr) 사업공고를 참조, 저자 재구성(검색일: 2016. 4. 27)

‘기술 기준’은 기업부설연구소 존재 여부, 기술 인증 및 특허 존재 여부, R&D 투자비율, 기술은 있으나 사업화가 안 된 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설비 및 제품 기준’의 세부 항목으로는 공장등록 여부, 특정설비 보유 기업, 완제품생산기업, 특정 제품군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신용 및 사업자의 자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신용 등급이 일정 이상인 기업과 이하인 기업, 대기업 협력기업, 민간투자 여부로 구분하였고, 구조조정 진단을 받았는지, 사업 및 업종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

체인지, FTA 피해기업인지, 재해피해 기업인지로 세부 항목을 설정하였다. 법인 여부와 사업자 등록 여부를 세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사업자의 나이,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요청된 사업들이 있어, 구체적인 조건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사업자 기준에 대한 항목도 추가하였다. 기술기준, 신용 및 사업자 기준에 대한 세부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V-23〉 대상 분류 항목(기술기준, 신용 및 사업자 기준)

| 항목 | | 주요내용 | |
|-------------|-----------|--|--|
| 기술기준 | 기술 및 설비 | (4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여부 (42) 기술기준(인증, 특허 등) (43) R&D 투자비율 지정 (44) 기술은 있으나 사업화가 안되는 기업 | |
| | 설비 및 제품기준 | (51) 공장등록 여부 (52) 특정 설비 보유 기업 (53) 제품기준(완제품 등) (54) 특정 제품군 | |
| 신용 및 사업자 기준 | 신용 및 자격 | 신용 및 투자 기준 | (61) 신용기준(일정등급 이상) (62) 신용기준(일정등급 이하) (63) 대기업 협력기업 (64) 민간 투자 여부 |
| | | 위기 기준 | (71) 경영위기(구조조정 진단 등) (72) 사업, 업종 전환 계획/추진 기업 (73) FTA 피해 기업 |
| | 등록 여부 | (81) 법인 여부 (82) 사업자 등록 여부 | |
| | 사업자 기준 | 사업자 기준1 | |
| 사업자 기준2 | | | |

자료: 기업마당(www.bizinfo.go.kr) 사업공고를 참조, 저자 재구성(검색일: 2016. 4. 27)

다. 수단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어떤 수단을 통하여 운영되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지원사업의 활동(Activity)이 기업의 투입요소 제공, 실천역량 강화, 기업의 영향력 제고, 인프라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분류하였다. 투입요소 제공의 세부 항목으로는 운영자금/재원 지원, 시설/장비 지원, 기

술/연구개발 지원, 인력공급이 있다. 실천역량 강화에는 정보제공, 교육/훈련/연수, 컨설팅/자문이 있으며, 영향력 제고에는 네트워킹(networking) 마련, 옹호 및 홍보/PR이 있다. 기업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활동으로는 기술인증/시험인증 지원, 온라인 물 지원 등의 거래 인프라 지원이 있으며, 시제품 제작 지원이 있다.

또한 지원사업의 활동이 어떤 수행방식을 통해 이뤄지는지를 분류하였다. 먼저 지원사업의 수행주체를 중앙정부와 수행기관으로 나누었다. 세부 항목으로 자금지원, 직접서비스 제공, 간접서비스 제공이 있다. 이때 자금지원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회수하는 방식의 투자, 일정 이자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융자, 보조금 형태의 자금 지원, 보증, 이자보전, 간접대출 등으로 세부 항목을 구분하였다. 세부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단에 대한 분류 항목은 아래 <표 V-24>와 같다.

<표 V-24>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류체계: 수단(활동 + 수행방식) 분류 항목

| 항목 | | 주요내용 | |
|------|----------|--|--|
| 활동 | 투입요소 제공 | (1) 운영 자금/자원 (2) 시설/장비 (3) 기술/연구개발 (4) 인력공급 | |
| | 실천역량 강화 | (11) 정보제공 (12) 교육/훈련/연수 (13) 컨설팅/자문 | |
| | 영향력 제고 | (21) Networking (22) 옹호 및 홍보/PR | |
| | 인프라 제공 | (31) 기술인증/시험인증 (32) 거래 인프라(온라인 물/기술특허 물) (33) 시제품 제작 | |
| 수행방식 | 중앙 정부 | 자금 지원 | (41) 투자 (42) 융자 (43) 보조금 (44) 보증 (45) 이자보전 (46) 간접대출 (47) 바우처 (48) 공적보험 (49) 조세감면/공제 |
| | | 직접 서비스 | (51) 직접제공 (52) 규제 (53) 인증 (54) 계약 |
| | | 간접 서비스 | (61) 수행기관 출자 (62) 수행기관 출연 |
| | 수행 기관 | 자금 지원 | (71) 투자 (72) 융자 (73) 보조금 (74) 보증 (75) 이자보전 (76) 간접대출 (77) 바우처 (78) 공적보험 (79) 조세감면/공제 |
| | | 직접 서비스 | (81) 직접제공 (82) 규제 (83) 인증 (84) 계약 |

자료: 재정속성분류체계(안) (<표 V-16>), 기업마당(www.bizinfo.go.kr) 사업공고를 참조하여 저자 재구성(검색일: 2016. 4. 27)

아래의 <표 V-25>, <표 V-26>, <표 V-27>에서는 이상에서 설명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목적, 대상, 수단에 대한 전체 분류체계 안을 보여주고 있다.

<표 V-25> 분류체계 안(전체 - 목적)

| 1차 분류 | | 2차 분류 | |
|----------|----------------|---------|--|
| 지원 목적 | 투입요소 지원 | 운영자금 | |
| | | 자재 | |
| | | 인력 | |
| | | 기술 | |
| | | 장비/시설 | |
| | | 공간/입지 | |
| | 시장 매칭 지원 | 내수 | |
| | | 수출 | |
| | 컨설팅 및 정보 제공 | 경영컨설팅 | |
| | | 상품화/사업화 | |
| | | 홍보 | |

자료: 저자 작성

〈표 V-26〉 분류체계 인(전체 - 대상)

| 1차 분류 | | 2차 분류 | | |
|--------------|------|----------------------|-------------------------|---------------|
| 기업규모 | 법적규모 | (1) 중소기업 | (3) 중소기업 | |
| | | (4) 소기업 | (6) 중견기업 | |
| | 일반규모 | (7) 대기업 | (9) 전체기업 | |
| | | (10) 우선지원대상기업 | | |
| | | (11) 10억원 미만 | (12) 30억원 미만 | |
| | | (14) 120억원 미만 | (15) 400억원 미만 | |
| | 대상 | 매출액 | (17) 30억원 이상 | (18) 50억원 이상 |
| | | | (20) 400억원 이상 | (19) 120억원 이상 |
| | | 상시 근로자수 | (21) 5인 이내 | (22) 10인 이내 |
| | | | (24) 50인 이내 | (25) 100인 이내 |
| (27) 10인 이상 | | | (28) 20인 이상 | |
| (30) 100인 이상 | | | (29) 50인 이상 | |
| 수출규모 | 수출액 | (31) 50만달러(5억원) 미만 | (32) 100만달러(10억원) 미만 | |
| | | (34) 500만달러(50억원) 미만 | (33) 200만달러(20억원) 미만 | |
| | 수출비중 | (37) 500만달러(50억원) 이상 | (36) 5,000만달러(500억원) 미만 | |
| | | (41) 수출비중 10% 이상 | (38) 1,000만달러(100억원) 이상 | |
| 수출기반 | 수출기반 | (51) 해외종업원 수(여부) | (39) 5,000만달러(500억원) 이상 | |
| | | (54) 수출경향도 | (42) 수출비중 15% 이상 | |
| 업력 및 성장단계 | 업력기준 | (52) 수출부서 여부 | (43) 수출비중 30% 이상 | |
| | | (0) 예비창업(창업준비단계) | (53) 수출대상지(개도국/개도국 외) | |
| | | (3) 3년 미만 | (2) 1년 미만 | |
| | | (6) 1년 이상 | (5) 7년 미만 | |
| | | (9) 7년 이상 | (8) 5년 이상 | |
| | | | (10) 전 기간 | |

〈표 V-26〉의 계속

| 1차 분류 | | 2차 분류 | |
|---------------------|-------|---|--|
| | 성장단계 | (10) 창업준비기 (13) 안정기 (16) 성숙기 + 안정기 | (11) 창업기 (14) 전환기 (19) 전단계 (22) 매출액 증가율 8%이상 (23) 매출액 증가율 20%이상 |
| | 고성장단계 | (21) 고성장 기업 | |
| 대상 산업 및 업종 | 일반업종 | (0) 전업종 (3) 제조업 + 서비스업 (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9) 운수업 (12) 금융 및 보험업 (1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 제조업 (4) 광업 (7) 건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 교육 서비스업 (99) 특정 업종 |
| | 산업기준 | (21) 뿌리산업 (24) 지식서비스 산업 (27) 융복합 산업 (30) 첨단융합 산업 (33) 수출주도형 (36) 전략산업 (39) 환경산업 | (2) 서비스업 (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 도매 및 소매업 (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3) 지역전략/연고사업 (26) 바이오 산업 (29) 녹색기술 산업 (32) 광역경제권 산업 (35) ICT 산업 (38) 산학연계 (99) 특정 산업 |

〈표 V-26〉의 계속

| 1차 분류 | | 2차 분류 | | |
|----------------------|----------------|--------------------------|---------------------------------------|--|
| 기업특 화특성 | 정부특 정기업 | (1) 창업기술형(벤처) | (2) 창업기술형(벤처) (3) 경영혁신형(메인비즈) | |
| | 보호 대상 기업 | (11)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 (12) 창조기업(법령기준) (13) 농공융합기업(법령기준) | |
| | | (14) 중소기업적합업종(법령기준) | (21) 여성친화 (22) 청년친화 (23) 고령친화 | |
| | | (24) 장애인기업 | (31) 지방소재 기업 (32) 마을기업 (33) 협동조합 | |
| 기술 기준 | 기업조건 | (34) 협동조합 | (43) R&D 투자비율 지정 | |
| | 기술기준 | (4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여부 | (42) 기술기준(인증, 특허 등) | |
| | 기술 및 설비 | (44) 기술은 있으나 사업화가 안되는 기업 | (52) 특정 설비 보유 기업 (53) 제품기준(원제품 등) | |
| | 설비 및 제품기준 | (51) 공장등록 여부 (54) 특정 제품군 | (62) 신용기준(일정등급 이하) (63) 대기업 협력기업 | |
| 신용 및 사업자 기준 | 신용 및 자격 | (61) 신용기준(일정등급 이상) | (72) 사업 인증 전환 계획/추진 기업 (73) FTA 피해 기업 | |
| | 등락 여부 | (64) 민간 투자 여부 | (82) 사업자 등록 여부 | |
| | | 위기 기준 | (71) 경영위기(구조조정 진단 등) | |
| | | 등록 여부 | (74) 재해 피해 기업 | |
| 사업자 기준1 | 사업자 기준2 | | | |

자료: 〈표 V-18〉, 〈표 V-19〉, 〈표 V-20〉, 〈표 V-21〉, 〈표 V-22〉, 〈표 V-23〉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표 V-27〉 분류체계 안(전체 - 수단)

| | | 1차 분류 | 2차 분류 | | | |
|----|------|----------|--------------------------|--------------------------------|-----------------------------------|---------------------------------------|
| 수단 | 활동 | 투입요소 제공 | (1) 운영 자금/재원 (4) 인력공급 | (2) 시설/장비 | (3) 기술/연구개발 | |
| | | 실천역량 강화 | (11) 정보제공 | (12) 교육/훈련/연수 | (13) 컨설팅/자문 | |
| | | 영향력 제고 | (21) Networking | (22) 옹호 및 홍보/PR | | |
| | | 인프라 제공 | (31) 기술인증/ 시험인증 | (32) 가태 인프라온라인 물 /가특허 물 | (33) 시제품 제작 | |
| | 수행방식 | 중앙 정부 | 자금 지원 | (41) 투자 (44) 보증 (47) 바우처 | (42) 용자 (45) 이자보전 (48) 공적보험 | (43) 보조금 (46) 간접대출 (49) 조세감면/공제 |
| | | | 직접서비스 | (51) 직접제공 (54) 계약 | (52) 규제 | (53) 인증 |
| | | | 간접서비스 | (61) 수행기관 출자 | (62) 수행기관 출연 | |
| | | | 수행 기관 | 자금 지원 | (71) 투자 (74) 보증 (77) 바우처 | (72) 용자 (75) 이자보전 (78) 공적보험 |
| | | 직접서비스 | | (81) 직접제공 (84) 계약 | (82) 규제 | (83) 인증 |

자료: 재정속성분류체계(안) (〈표 V-16〉), 기업마당(www.bizinfo.go.kr) 사업공고를 참조하여 저자 재구성

3. 분류체계(안)을 활용한 사업구성 검토

가. 분류체계(안)을 활용한 사업 수 기초통계

2016년 현재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총 14개 부처에서 260개의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중소기업청이 107개로 가장 많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¹²⁾

다만 기초 통계 데이터 자료로 사용된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는 지원사업의 '사업설명서'에 사업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과 '기업마당'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 223개이다.

1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세부사업 기준

〈표 V-28〉 분류체계 분석대상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부처별 통계

(단위: 개)

| | 부처명 | 전체 사업 | 사업설명서 없는 사업 | 사업내용 입력된 사업 |
|----|----------|-------|-------------|-------------|
| 1 | 고용노동부 | 19 | 1 | 18 |
| 2 | 관세청 | 2 | 0 | 2 |
| 3 | 국토교통부 | 5 | 1 | 4 |
| 4 | 금융위원회 | 3 | 0 | 3 |
| 5 | 농림축산식품부 | 11 | 0 | 11 |
| 6 | 문화체육관광부 | 14 | 3 | 11 |
| 7 | 미래창조과학부 | 20 | 3 | 17 |
| 8 | 방위사업청 | 2 | 0 | 2 |
| 9 | 산업통상자원부 | 50 | 12 | 38 |
| 10 | 식품의약품안전처 | 2 | 0 | 2 |
| 11 | 중소기업청 | 107 | 16 | 91 |
| 12 | 특허청 | 4 | 0 | 4 |
| 13 | 해양수산부 | 5 | 0 | 5 |
| 14 | 환경부 | 16 | 1 | 15 |
| | 합계 | 260 | 37 | 223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설명서,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6. 10. 17)

이후의 분석은 위의 사업 중, 사업내용 및 예산 분석을 위해 집행이 완료되어 통합관리시스템에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목적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목적을 초기 투입요소별로 운영자금, 자재, 인력, 기술, 장비/시설, 공간/입지로 분류하면,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수는 49개, 자재는 5개, 인력은 23개, 기술은 70개, 장비/시설은 37개, 공간/입지는 4개로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해주는 사업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이 많았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 제품 판매 시 내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5개,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32개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중소기업 중 내수보다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기업 경영자 관점에서 경영컨설팅을 위한 사업 32개, 상품화/사업화를 위한 사업 31개, 홍보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는 8개로 경영컨설팅과 제품의 상품화 및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내용을 알 수 있는 223개의 사업 중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V-29〉 목적(GOAL): 지원 목적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

(단위: 개)

| GOAL | 사업 수 | | | | | |
|------------|-------|----|---------|----|-------|--------|
| 초기 투입요소 | 운영자금 | 자재 | 인력 | 기술 | 장비/시설 | 공간 /입지 |
| | 49 | 5 | 23 | 70 | 37 | 4 |
| Matching | 내수 | | | 수출 | | |
| | 5 | | | 36 | | |
| 운영 | 경영컨설팅 | | 상품화/사업화 | | 홍보 | |
| | 32 | | 31 | | 8 |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설명서,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6. 10. 17)

2)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보면, 지원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를 조건으로 하는 법적 규모에 따라 사업을 타깃팅한 지원사업이 120개(중소기업 대상사업 90개, 중견기업+중소기업 대상사업 20개, 소상공인 대상사업 5개, 우선지원대상사업 5개 등)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기업의 업력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설정한 사업이 많았다. 아직까지는 기술특화 특성이나 기술수준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을 설정하는 사업의 비중은 적으며, 단순하게 중소기업인지 여부 및 기업 업력을 기준으로 삼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V-30〉 대상(TARGET): 지원대상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

(단위: 개)

| | | TARGET | | 사업 수 | | | |
|--------------------------|--------------------------|---------------------|--------------------|---------|-------|--------|---|
| 기업규모 | 일반규모 | 법적규모 | | 120 | | | |
| | | 매출액 | | 13 | | | |
| | | 상시 근로자 수 | | 14 | | | |
| | 수출규모 | 수출액 | | 1 | | | |
| | | 수출비중 | | 1 | | | |
| | | 수출기반 | | 1 | | | |
| 업력 및 성장단계 | | 업력기준 | | 32 | | | |
| | | 성장단계 | | 1 | | | |
| | | 고성장기업 | | 4 | | | |
| 산업 및 업종 | | 일반 업종 | | 27 | | | |
| | | 산업 기준 | | 18 | | | |
| 기업특화 특성 | 정부특정 기업 | 자격기준 | 창업기술형(벤처) | 0 | | | |
| | | | 기술혁신형(이노비즈) | 3 | | | |
| | | | 경영혁신형(메인비즈) | 1 | | | |
| | | 분야기준 | 녹색/신성장 동력 중소기업 | 1 | | | |
| | | | 창조기업 | 3 | | | |
| | | | 농공상 융합기업 | 1 | | | |
| | 보호대상 기업 | | 중소기업적합업종 | | 0 | | |
| | | | 사회적 약자 | 여성친화 | 1 | | |
| | | | | 청년친화 | 1 | | |
| | | | | 고령친화 | 0 | | |
| | | | 기업 조건 | 장애인기업 | 3 | | |
| | | | | 지방소재 기업 | 0 | | |
| | | | | 마을기업 | 0 | | |
| | | | 기술 기준 (기술 및 설비) | | 기술 기준 | 협동조합 | 2 |
| | | | | | | 사회적 기업 | 0 |
| 설비 및 제품기준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여부 | 9 | | | | | |
| | 기술기준(인증, 특허 등) | 2 | | | | | |
| | R&D 투자비율 지정 | 4 | | | | | |
| | | 기술은 있으나 사업화가 안 된 기업 | | | 2 | | |
| | | 공장등록 여부 | | | 0 | | |
| | | 특정 설비 보유 기업 | 3 | | | | |
| | | 제품기준(완제품 등) | 3 | | | | |
| | | 특정 제품군 | 5 | | | | |
| 신용 및 사업자 기준 (신용 및 자격) | | 신용 및 투자 기준 | | 5 | | | |
| | | 위기 기준 | | 5 | | | |
| | | 등록여부 | | 1 | | |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설명서,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6. 10. 17)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루어지는 사업활동으로는 운영자금/재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144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컨설팅/자문 활동을 통해 지원기업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45개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의 수행주체를 보면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보다는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사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았고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보다는 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행방식 중 자금지원의 경우, 투자방식, 융자방식, 보조금 방식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원기업체에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인 보조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V-31〉 수단(ACTIVITY): 활동 및 상위 수행방식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

(단위: 개)

| | | ACTIVITY | 사업 수 |
|------|---------|--------------|------|
| 활동 | 투입요소 제공 | 운영 자금 / 재원 | 144 |
| | | 시설 / 장비 | 14 |
| | | 기술 / 연구개발 | 11 |
| | | 인력공급 | 5 |
| | 실천역량 강화 | 정보제공 | 5 |
| | | 교육 / 훈련 / 연수 | 22 |
| | | 컨설팅 / 자문 | 45 |
| | 영향력 제고 | Networking | 5 |
| | | 옹호 및 홍보 / PR | 7 |
| | 인프라 제공 | 기술인증 / 시험인증 | 1 |
| | | 거래 인프라 | 2 |
| | | 시제품 제작 | 5 |
| 수행방식 | 중앙정부 | 자금 지원 | 71 |
| | | 직접서비스 | 1 |
| | | 간접서비스 | 7 |
| | 수행기관 | 자금 지원 | 125 |
| | | 직접서비스 | 8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설명서,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6. 10. 17)

〈표 V-32〉 수단(ACTIVITY): 세부 수행방식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

(단위: 개)

| ACTIVITY | | | 사업 수 | |
|----------|------|--------|---------|------|
| 수행방식 | 중앙정부 | 자금 지원 | 투자 | 0 |
| | | | 융자 | 5 |
| | | | 보조금 | 63 |
| | | | 보증 | 2 |
| | | | 이자보전 | 1 |
| | | | 간접대출 | 0 |
| | | | 바우처 | 0 |
| | | | 공적보험 | 0 |
| | | | 조세감면/공제 | 0 |
| | | 직접 서비스 | 직접제공 | 0 |
| | | | 규제 | 0 |
| | | | 인증 | 1 |
| | | | 계약 | 0 |
| | | | 간접 서비스 | 정부출자 |
| | 정부출연 | 7 | | |
| | 수행기관 | 자금 지원 | 투자 | 2 |
| | | | 융자 | 42 |
| | | | 보조금 | 77 |
| | | | 보증 | 2 |
| | | | 이자보전 | 0 |
| 간접대출 | | | 1 | |
| 바우처 | | | 0 | |
| 공적보험 | | | 2 | |
| 조세보험/공제 | | | 0 | |
| 직접 서비스 | | 직접제공 | 7 | |
| | | 규제 | 0 | |
| | | 인증 | 0 | |
| | | 계약 | 1 |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설명서,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6. 10. 17)

4)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목적과 활동 연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지원사업의 개별 초기 투입요소별 어떠한 지원활동을 실시하는지 살펴보았다.

운영자금 분야의 경우 운영자금/재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시설/장비나 컨설팅/자문을 지원해주는 몇몇 사업도 존재한다. 운영자금 분야에서 지원활동이 자금 제공 이외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의 목적이 아닌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는 종합적 성격의 지원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V-33〉 목적·수단 교차분석: 운영자금분야의 수단별 사업 수

(단위: 개)

| GOAL 초기투입요소 | ACTIVITY | | 사업 수 |
|----------------|----------|--------------|------|
| 운영자금 분야 | 투입요소 제공 | 운영 자금 / 자원 | 44 |
| | | 시설 / 장비 | 2 |
| | | 기술 / 연구개발 | 0 |
| | | 인력공급 | 1 |
| | 실천역량 강화 | 정보제공 | 2 |
| | | 교육 / 훈련 / 연수 | 1 |
| | | 컨설팅 / 자문 | 3 |
| | 영향력 제고 | Networking | 1 |
| | | 옹호 및 홍보 / PR | 1 |
| | 인프라 제공 | 기술인증 / 시험인증 | 0 |
| | | 거래 인프라 | 0 |
| | | 시제품 제작 | 0 |

주: 운영자금 분야의 경우 종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 사업의 활동이 운영자금/재원의 제공 이외에 다양한 지원활동을 실시함.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설명서,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6. 10. 17)

다음으로 자재 분야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모든 지원활동이 운영자금/재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표 V-34〉 목적·수단 교차분석: 자재분야의 수단별 사업 수

(단위: 개)

| GOAL 초기투입요소 | ACTIVITY | | 사업 수 |
|----------------|----------|--------------|------|
| 자재분야 | 투입요소 제공 | 운영 자금 / 자원 | 5 |
| | | 시설 / 장비 | 0 |
| | | 기술 / 연구개발 | 0 |
| | | 인력공급 | 0 |
| | 실천역량 강화 | 정보제공 | 0 |
| | | 교육 / 훈련 / 연수 | 0 |
| | | 컨설팅 / 자문 | 0 |
| | 영향력 제고 | Networking | 0 |
| | | 옹호 및 홍보 / PR | 0 |
| | 인프라 제공 | 기술인증 / 시험인증 | 0 |
| | | 거래 인프라 | 0 |
| | | 시제품 제작 | 0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설명서,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6. 10. 17)

인력 분야의 경우는 인력지원을 위한 활동으로 운영자금/재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육/훈련/연수, 컨설팅/자문, 인력 공급 순으로 많았다.

〈표 V-35〉 목적·수단 교차분석: 인력분야의 수단별 사업 수

(단위: 개)

| GOAL 초기투입요소 | ACTIVITY | | 사업 수 |
|----------------|----------|--------------|------|
| 인력분야 | 투입요소 제공 | 운영 자금 / 자원 | 11 |
| | | 시설 / 장비 | 0 |
| | | 기술 / 연구개발 | 0 |
| | | 인력공급 | 4 |
| | 실천역량 강화 | 정보제공 | 1 |
| | | 교육 / 훈련 / 연수 | 6 |
| | | 컨설팅 / 자문 | 5 |
| | 영향력 제고 | Networking | 1 |
| | | 옹호 및 홍보 / PR | 0 |
| | 인프라 제공 | 기술인증 / 시험인증 | 0 |
| | | 거래 인프라 | 0 |
| | | 시제품 제작 | 0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설명서,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6. 10. 17)

기술 분야의 경우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영자금/재원 제공이 가장 많았으며, 기술/연구개발의 직접 제공, 컨설팅/자문, 교육/훈련/연수, 시제품 제작 등의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었다.

〈표 V-36〉 목적·수단 교차분석: 기술분야의 수단별 사업 수

(단위: 개)

| GOAL 초기투입요소 | ACTIVITY | | 사업 수 |
|----------------|----------|--------------|------|
| 기술분야 | 투입요소 제공 | 운영 자금 / 재원 | 45 |
| | | 시설 / 장비 | 5 |
| | | 기술 / 연구개발 | 10 |
| | | 인력공급 | 1 |
| | 실천역량 강화 | 정보제공 | 0 |
| | | 교육 / 훈련 / 연수 | 3 |
| | | 컨설팅 / 자문 | 11 |
| | 영향력 제고 | Networking | 0 |
| | | 옹호 및 홍보 / PR | 0 |
| | 인프라 제공 | 기술인증 / 시험인증 | 0 |
| 거래 인프라 | | 0 | |
| 시제품 제작 | | 2 |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설명서,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6. 10. 17)

장비/시설 분야의 경우 주로 운영자금/재원을 제공하는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시설/장비를 직접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연수의 활동을 하는 사업도 존재하였다.

〈표 V-37〉 목적·수단 교차분석: 장비/시설분야의 수단별 사업 수

(단위: 개)

| GOAL 초기투입요소 | ACTIVITY | | 사업 수 |
|----------------|----------|------------|------|
| 장비/시설분야 | 투입요소 제공 | 운영 자금 / 재원 | 28 |
| | | 시설 / 장비 | 7 |
| | | 기술 / 연구개발 | 0 |
| | | 인력공급 | 0 |

〈표 V-37〉의 계속

| GOAL 초기투입요소 | ACTIVITY | | 사업 수 |
|----------------|----------|--------------|------|
| | 실천역량 강화 | 정보제공 | 0 |
| | | 교육 / 훈련 / 연수 | 3 |
| | | 컨설팅 / 자문 | 0 |
| | 영향력 제고 | Networking | 0 |
| | | 옹호 및 홍보 / PR | 0 |
| | 인프라 제공 | 기술인증 / 시험인증 | 0 |
| | | 거래 인프라 | 0 |
| | | 시제품 제작 | 0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설명서,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6. 10. 17)

공간입지 분야의 경우는 운영자금/재원을 제공하는 사업 수 3개, 컨설팅/자문을 해주는 사업 수 2개, 기술/연구개발·교육/훈련/연수·네트워킹 사업 수가 각각 1개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38〉 목적·수단 교차분석: 공간/입지분야의 수단별 사업 수

(단위: 개)

| GOAL 초기투입요소 | ACTIVITY | | 사업 수 |
|----------------|----------|--------------|------|
| 공간/입지분야 | 투입요소 제공 | 운영 자금 / 재원 | 3 |
| | | 시설 / 장비 | 0 |
| | | 기술 / 연구개발 | 1 |
| | | 인력공급 | 0 |
| | 실천역량 강화 | 정보제공 | 0 |
| | | 교육 / 훈련 / 연수 | 1 |
| | | 컨설팅 / 자문 | 2 |
| | 영향력 제고 | Networking | 1 |
| | | 옹호 및 홍보 / PR | 0 |
| | 인프라 제공 | 기술인증 / 시험인증 | 0 |
| | | 거래 인프라 | 0 |
| | | 시제품 제작 | 0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설명서,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6. 10. 17)

나. 분류체계(안)을 활용한 사업예산 기초통계

1) 중소기업 지원사업 초기 투입요소별 예산액

201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초기 투입요소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운영자금 분야가 5,339,923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장비/시설분야(4,386,124백만원), 기술분야(1,993,021백만원), 인력분야(746,721백만원), 자재분야(458,287백만원), 공간/입지분야(48,457백만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업당 평균 예산액은 자재 분야가 152,762백만원으로 가장 큰 예산액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장비/시설분야 129,004백만원, 운영자금분야 124,184백만원, 기술분야 36,908백만원, 인력분야 33,942백만원, 공간/입지분야 12,114백만원 순이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초기투입요소별 사업당 평균 예산액을 순수하게 비교하기 위해 하나의 초기투입요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총예산액과 사업당 평균예산액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운영자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사업당 평균 예산액이 74,04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장비/시설 60,841백만원, 기술 31,976백만원, 공간/입지 14,256백만원, 인력 12,357백만원 순이었음. 다만 자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설명서'에 예산정보가 없어 그 예산액을 알 수 없었다.

〈표 V-39〉 사업 수 및 예산 기초통계 운영자금분야

(단위: 개, 백만원)

| GOAL 초기투입요소 | 총사업 수 | 예산정보 있는 사업 수 | 총예산액 | 사업당 평균 예산액 |
|-----------------------|-------|-----------------|-----------|---------------|
| 운영자금분야 | 49 | 43 | 5,339,923 | 124,184.26 |
| 〈운영자금〉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 | 27 | 22 | 1,628,976 | 74,044.36 |

주: 사업당 평균 예산액 = 총예산액/예산정보 있는 사업 수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설명서,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6. 10. 17)

〈표 V-40〉 사업 수 및 예산 기초통계 자재분야

(단위: 개, 백만원)

| GOAL 초기투입요소 | 총사업 수 | 예산정보 있는 사업 수 | 총예산액 | 사업당 평균 예산액 |
|---------------------|-------|-----------------|---------|---------------|
| 자재분야 | 5 | 3 | 458,287 | 152,762.33 |
| 〈자재〉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 | 2 | 0 | - | - |

주: 사업당 평균 예산액 = 총예산액/예산정보 있는 사업 수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설명서,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6. 10. 17)

〈표 V-41〉 사업 수 및 예산 기초통계 인력분야

(단위: 개, 백만원)

| GOAL 초기투입요소 | 총사업 수 | 예산정보 있는 사업 수 | 총예산액 | 사업당 평균 예산액 |
|---------------------|-------|-----------------|---------|---------------|
| 인력분야 | 23 | 22 | 746,721 | 33,942 |
| 〈인력〉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 | 17 | 16 | 197,718 | 12,357 |

주: 사업당 평균 예산액 = 총예산액/예산정보 있는 사업 수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설명서,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6. 10. 17)

〈표 V-42〉 사업 수 및 예산 기초통계 기술분야

(단위: 개, 백만원)

| GOAL 초기투입요소 | 총사업 수 | 예산정보 있는 사업 수 | 총예산액 | 사업당 평균 예산액 |
|---------------------|-------|-----------------|-----------|---------------|
| 기술분야 | 60 | 54 | 1,993,021 | 36,908 |
| 〈기술〉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 | 52 | 47 | 1,502,877 | 31,976 |

주: 사업당 평균 예산액 = 총예산액/예산정보 있는 사업 수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설명서,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6. 10. 17)

〈표 V-43〉 사업 수 및 예산 기초통계 장비/시설분야

(단위: 개, 백만원)

| GOAL 초기투입요소 | 총사업 수 | 예산정보 있는 사업 수 | 총예산액 | 사업당 평균 예산액 |
|-------------------------|-------|-----------------|-----------|---------------|
| 장비/ 시설분야 | 37 | 34 | 4,386,124 | 129,004 |
| 〈장비/ 시설〉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 | 18 | 15 | 912,601 | 60,841 |

주: 사업 당 평균 예산액 = 총예산액/예산정보 있는 사업 수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설명서,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6. 10. 17)

〈표 V-44〉 사업 수 및 예산 기초통계 공간/입지분야

(단위: 개, 백만원)

| GOAL 초기투입요소 | 총사업 수 | 예산정보 있는 사업 수 | 총예산액 | 사업당 평균 예산액 |
|--------------------------|-------|-----------------|--------|---------------|
| 공간 / 입지 분야 | 4 | 4 | 48,457 | 12,114 |
| (공간 / 입지)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 | 3 | 3 | 42,767 | 14,256 |

주: 사업당 평균 예산액 = 총예산액/예산정보 있는 사업 수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설명서,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6. 10. 17)

2) 중소기업 지원사업 초기투입요소 조합별 예산 정보

하나의 초기 투입요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초기 투입요소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 성격을 가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총사업 260개 중 28개였으며, 이 중 예산정보를 알 수 있는 사업 27개의 총예산액은 4,288,149백만원, 사업당 평균 예산액은 158,820백만원이었다.

종합적 성격을 가지는 지원사업 중에서 운영자금과 장비/시설을 함께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14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총 예산액은 3,188,457백만원, 사업당 평균 예산액은 227,747백만원이었다.

〈표 V-45〉 종합적 성격을 가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단위: 개, 백만원)

| 초기투입요소별 조합 | 총사업 수 | 예산정보 있는 사업 수 | 총예산액 | 사업당 평균 예산액 |
|-------------------|-------|-----------------|-----------|---------------|
| 운영자금 + 인력 | 2 | 2 | 355,513 | 177,756.5 |
| 운영자금 + 기술 | 2 | 1 | 50,000 | 50,000 |
| 운영자금 + 장비/시설 | 14 | 14 | 3,188,457 | 227,747 |
| 운영자금 + 공간/입지 | 1 | 1 | 5,690 | 5,690 |
| 자재 + 기술 | 1 | 1 | 300,000 | 300,000 |
| 자재 + 장비/시설 | 1 | 1 | 150,000 | 150,000 |
| 인력 + 기술 | 2 | 2 | 30,432 | 15,216 |
| 인력 + 장비/시설 | 1 | 1 | 90,058 | 90,058 |
| 기술 + 장비/시설 | 1 | 1 | 6,712 | 6,712 |
| 운영자금 + 자재 + 장비/시설 | 1 | 1 | 8,287 | 8,287 |
| 운영자금 + 인력 + 기술 | 1 | 1 | 73,000 | 73,000 |
| 운영자금 + 기술 + 장비/시설 | 1 | 1 | 30,000 | 30,000 |
| 합계 | 28 | 27 | 4,288,149 | 158,820 |

주: 사업당 평균 예산액 = 총예산액/예산정보 있는 사업 수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설명서,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6. 10. 17)

Ⅵ.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1. 분석 전략

가. 기본 개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책지원을 받은 집단의 성과를 정책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정책지원을 받은 집단의 성과는 관측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상황 즉, 실제로 정책지원을 받은 집단이 정책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성과는 자료로써 관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³⁾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분석목적에 따라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이하 ATE)’ 또는 처리그룹 내의 처리효과인 ‘처리에 대한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이하 ATT)’를 추정한다. 여기서 ATE란 정책지원을 받은 개체(개인, 기업 등)의 성과 $Y(1)$ 과 동일한 개체가 정책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의 성과 $Y(0)$ 에 대한 모평균(population average)을 각각 계산한 후 그 차이를 정책의 효과로 추정하는 것이다. 즉,

$$\tau_{ATE} = E(\tau) = E[Y(1) - Y(0)] = \mu_1 - \mu_0 \quad (1)$$

한편, ATE는 본질적으로 특별한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정책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합한 방법일 수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중소기업을 대상

13) $Y(1)$ 과 $Y(0)$ 은 처리 또는 수혜와 통제 또는 비수혜 개체들의 잠재적 성과로 ‘인과추론의 근본적 문제’는 $Y(1)$ 과 $Y(0)$ 중 오직 하나만 관측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손실자료(missing data) 문제로 생각될 수 있다(Holland, 1986).

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ATE 추정의 경우 실제 정책 수혜를 받지 않은 표본들까지 분석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전적으로 분석대상을 정책지원과 관련이 깊은 표본들로 구성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사실상 ATT를 분석하는 것과 유사하다. ATT란 정책지원을 받은 집단의 가상적 상황 즉, 정책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성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정책평가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ATE 대신에 ATT를 분석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다.

앞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정책지원을 받았을 경우의 결과가 $Y(1)$ 이고, 동일한 집단이 정책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를 $Y(0)$ 라 할 때 ATT로 추정된 정책지원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은 조건부 평균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tau_{ATT} = E(\tau|D=1) = E[Y(1)|D=1] - E[Y(0)|D=1] \quad (2)$$

그러나 사실상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책지원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 결과는 자료로써 관측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석을 하게 된다.

$$E[Y(1)|D=1] - E[Y(0)|D=0] = \tau \quad (3)$$

식 (3)의 방법이 현실적으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나 위 방식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begin{aligned} \tau^* &= E[Y(1)|D=1] - E[Y(0)|D=0] \quad (4) \\ &= E[Y(1)|D=1] - E[Y(0)|D=1] + E[Y(0)|D=1] - E[Y(0)|D=0] \\ &= \tau_{ATT} + \underbrace{E[Y(0)|D=1] - E[Y(0)|D=0]}_{\text{선택편의}} \end{aligned}$$

만약 식 (4)에서 발생된 선택편의를 $E[Y(0)|D=1] - E[Y(0)|D=0] = 0$ 으로

만들 수 있다면 식 (3)의 추정치 τ^* 는 τ_{ATT} 와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ATT를 추정에 이용하되 이러한 선택편의를 줄이는 방법을 분석 전략으로 이용한다.

나. 매칭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방법은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이하 PSM)이다. PSM은 정책지원(수혜) 집단과 비교 집단(비수혜 집단) 간에 존재하는 특성 차이를 줄임으로써 두 집단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줄이는 방법이다. PSM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에 의존한다.

가정 1.¹⁴⁾ $(Y(1), Y(0)) \perp D|X$

가정 1에서 $Y(1)$ 과 $Y(0)$ 는 정책지원을 받았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기업 성과이고, D 는 정부지원을 받았을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며, X 는 각 기업의 특성들(업력, 업종, 종업원 수 등)을 포함하는 벡터이다. \perp 는 $Y(1)$ 혹은 $Y(0)$ 이 $D|X$ 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호이다. 위 가정은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찰 가능한 특성들이 통제될 경우 지원정책에 따른 체계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관찰된 변수들로 결정되는 성과들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 2.¹⁵⁾ $0 < P(X) < 1$

가정 2는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동일한 공통의 확률

14) 비혼란성(unconfoundedness) 가정이라고 부른다.

15) 공통 영역(common support) 또는 중첩(overlap) 가정이라고 부른다.

영역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확률이 $P(X)=1$ 이거나 $P(X)=0$ 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P(X)=1$ 인 기업은 항상 지원을 받거나 $P(X)=0$ 인 기업은 항상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동일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 간에는 정책지원을 받을 확률이 동일하다는 $P(D=1|X) = P(D=0|X) = P(X)$ 조건을 이용하면 가정 1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수 있다.

가정 1.1 $(Y(1), Y(0)) \perp D|P(X)$

이는 기업들의 관측 가능한 특성들로 구성된 확률이 동일한 기업끼리는 그 성과 역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가정들로 인하여 PSM으로 구성된 비교 집단들은 통계적으로 지원 집단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추정된 성향점수를 이용하여 지원 집단과 유사한 확률적 특성을 가지는 비교집단들을 구성한 후 성향점수로 가중평균하여 ATT를 계산하게 되면 이는 바로 매칭을 통한 ATT이다. 매칭을 통해 ATT를 계산하게 되면, 앞서 언급하였던 선택편의는 가정 1.1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라지게 된다. 즉,

$$\begin{aligned} \tau^{PSM} &= E_{P(X)|D=1} [E[Y(1)|D=1, P(X)] - E[Y(0)|D=0, P(X)]] \\ &= \tau_{ATT}^{PSM} + E_{P(X)|D=1} \left\{ \underbrace{E[Y(0)|D=1, P(X)] - E[Y(0)|D=0, P(X)]}_{=0} \right\} \end{aligned} \quad (5)$$

단, 위 식에서 선택편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P(D=1|X) = P(D=0|X) = P(X)$ 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D=1$ 인 기업과 $D=0$ 인 기업 간의 특성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τ_{ATT}^{PSM} 를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실제 계산이 가능한 형태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tau_{ATT}^{PSM} = \frac{1}{N_1} \sum_i (Y_i - w(i, j) \hat{Y}_j) \quad (6)$$

위 식 (6)에서 N_1 과 Y_i 는 각각 $D=1$ 인 기업들의 총합과 성과지표를 나타내고, \hat{Y}_j 는 특정 i 기업과 매칭된 j 기업의 성과지표이며, $w(i, j)$ 는 추정 시 이용될 가중치를 의미한다. 본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1:1 매칭과 1:5 매칭을 이용하는데, 1:1 매칭은 가중치를 1로 계산하고, 1:5 매칭은 가중치를 5분의 1로 계산하여 분석한다. 즉, 1:1 매칭 시 $w=1$ 이고, 1:5 매칭 시 가중치는 $w=0.2$ 이다.

다. 성향점수 기중 최소자승추정법¹⁶⁾

한편, 매칭을 통한 ATT의 추정은 지원 집단과 매칭된 비교 집단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비교 집단의 관측치를 모두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매칭방법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 이유는 매칭방법에 따라 비교 집단과 가중치 부여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성향점수를 매칭에 이용하지 않고, 회귀분석 시에 가중치로 이용한다면, 분석결과는 사실상 PSM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측치를 이용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PS-WLS라고 한다.¹⁷⁾

PS-WLS는 다음 소절에서 소개할 회귀조정과 비슷한 형태로 지원 효과를 분석하지만, 추정된 성향점수를 가중치로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PS-WLS 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 = \alpha_0 + \tau D_i + x_i \beta_0 + D_i (x_i - \bar{x}_1) \beta_1 + \epsilon_i \quad (7)$$

이 모형에서 x_i 는 i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x_i - \bar{x}_1)$ 는 i 기업

16) Propensity Score-weighted Least Squares. 이하 PS-WLS라고 한다.

17) Cadot et al.(2016) 참조.

의 특성에서 지원받은 기업들, 즉 $D_i = 1$ 인 기업들의 평균치를 빼 변수이고, ϵ_i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¹⁸⁾ ATT는 $E(Y|D=1) - E(Y|D=0) = \hat{\tau}$ 이므로 D_i 에 대한 계수 τ 가 ATT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E(Y|D=1) - E(Y|D=0) = \hat{\tau}$ 의 추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선택편의는 가정 1.1에 의하여 사라지기 때문이다. 추정된 성향점수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w_i = D_i + (1 - D_i)\hat{p}(1 - \hat{p})^{-1}$ 로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 (7)을 추정하면 τ 는 PSM-ATT와 유사한 형태인 식 (8)을 추정할 수 있다.

$$\tau_{ATT}^{PSM} = \frac{1}{N_1} \sum_i (Y_i - w(i, j) \hat{Y}_j) \quad (8)$$

위 식 (8)과 PSM-ATT[식 (6)] 간에는 가중치 부여방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식 (8)의 추정치는 특정 매칭방법(여기서는 1:1매칭과 1:5매칭)을 통해 비교 집단을 선발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성향점수가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관측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과 효율성 두 가지 측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라. 회귀조정

한편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성향점수가 잘 추정되었다는 전제 하에서만 편의가 감소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두 집단 간에 사라지지 않는 체계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칭을 시도해도 추정치의 편의는 항상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매칭 후에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공변량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 차이로 인하여 추정치가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를 줄이기 위하여 부수적인 방법으로 회귀조정(regression-adjustment: 이하 RA) 모형을 이용한다. 분석 모형은 앞서 언급한 식 (7)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8) 설명의 편의상 하나의 설명변수만 고려한다. 실제로 분석할 때는 성향점수 추정 모형에 이용된 변수들을 모두 이용한다.

$$Y_i = \alpha_0 + \tau D_i + x_i \beta_0 + D_i(x_i - \mu_x) \beta_1 + \epsilon_i \quad (9)$$

식 (9)와 식 (7)의 차이점은 \bar{x}_1 대신 μ_x 를 x_i 의 차감변수로 이용한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차이는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ATT 추정치를 도출한다.

$$ATT = \hat{\tau} + \frac{1}{N_1} \sum_{i=1}^N (x_i - \mu_x) \hat{\beta}_1 \quad (10)$$

매칭 혹은 PS-WLS와 비교하여 회귀조정을 통한 ATT 추정치의 장점은 두 집단 간의 공변량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선택편의 오차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추정치의 편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마. 분석 절차

본 연구는 일반적인 분석방법으로서 매칭, PS-WLS, 그리고 RA 모형 등을 이용하지만 종속변수를 차분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이하 DID)분석이다. DID란 각 집단 간에 존재하는 일정한 추세를 제거한 순수한 정부지원의 효과만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들과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을 각각 T와 C라고 표기하고 두 집단 모두 성과 측면에서 동일한 추세를 가진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T집단 i 기업의 성과는 $\Delta Y_{i,t}^T = Y_{i,t}^T - Y_{i,t-1}^T$ 이고, C집단 j 기업의 성과는 $\Delta Y_{j,t}^C = Y_{j,t}^C - Y_{j,t-1}^C$ 이라 할 때 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바로 DID이며, 추세가 존재할 경우 이 역시 제거되므로 정부정책의 순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앞서 언급한 분석방법과 차분된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ATT와 DID가 결합된 형태로 정책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19) 여기서 μ_x 은 x 변수에 대한 전체 평균을 의미한다.

① 우선 t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구분한 후 $t-1$ 시점의 기업 특성들을 이용하여 $P(X_{i,t-1})$ 을 추정한다. 이때 $X_{i,t-1}$ 으로 고려되는 변수들은 로그 매출액,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R&D 집중도, 업력 및 산업더미 등이다(변수 정의는 <표 VI-1> 참조). 성향점수 추정에 이용된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기업성장 모형에 자주 이용되는 변수들인데, 이러한 변수들을 성향점수 추정 시 이용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성과지표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함이다.

② 다음으로 추정된 확률 $P(X_{i,t-1})$ 를 이용하여 추정된 성향점수의 질을 평가한다. 성향점수의 질 평가는 t-검정, 편의 감소, Pseudo-R2와 LR-검정 등을 이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LR-검정을 주요한 평가대상으로 설정한다. 만일 성향점수 추정이 잘 되었다면, 모든 추정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은 채택된다. 이것은 LR-검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반대인 성향점수 추정이 잘 되지 않았다면, 즉 LR-검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모든 추정치가 0이란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③ 성향점수의 질을 평가한 후 성향점수가 잘 추정되었다면 매칭을 통한 DID를 분석하고, 그렇지 않다면 RA를 통해 분석한다.

④ 3단계에서 성향점수의 추정이 잘 이루어졌고 두 집단 간의 공변량 차이가 없다면, $P(X_{i,t-1})$ 를 이용하여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확률과 가장 가까운 비교집단을 1배 혹은 5배수²⁰⁾로 뽑는 매칭분석을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PS-WLS 분석도 실시한다. 그러나 만일 성향점수의 추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즉 두 집단 간의 체계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RA 분석을 통해 ATT를 추정한다.

20) 1배는 1:1 매칭, 5배수는 1:5 매칭을 의미한다.

〈표 VI-1〉 변수 정의

| 변수 | 정의 |
|----------|---|
| 매출액 증가율 | $\ln(\text{매출액}(t+s)) - \ln(\text{매출액}(t-1))$, $s=\{0,1,2,3\}$ |
| 고용 증가율 | $\ln(\text{고용}(t+s)+1) - \ln(\text{고용}(t-1)+1)$, $s=\{0,1,2,3\}$ |
| 부가가치 증가율 | $\ln(\text{부가가치}(t+s)) - \ln(\text{부가가치}(t-1))$, $s=\{0,1,2,3\}$ |
| 매출액(로그) | $\ln(\text{매출액}(t-1))$ |
| 부채비율 | 총부채(t-1)/총자산(t-1) |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t-1)/매출액(t-1) |
| R&D 집중도 | R&D 지출액(t-1)/매출액(t-1) |
| 업력 | (설립연도-1)-지원받은 연도 |
| 고용더미 | 1=9인 미만, 2=10~19, 3=20~49, 4=50~99, 5=100~199, 6=200~299 |
| 산업더미 | 표준산업 대분류 기준에 따라 더미 설정 |

주: 부가가치는 영업손익에 총급여를 합산하여 계산
 자료: 저자 작성

바. 재정지원 평가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업수혜에 대한 정책 효과와 사업군별 지원금액을 이용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한다. 비용-편익 분석은 Cadot et al.(2015)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시도한다.

우선 ATT로 추정된 τ 는 재원지원으로부터 발생된 평균 매출액 증가분을 의미하므로, 각 기업의 T시점 매출에서 τ 를 뺀 후 재원지원이 없었을 경우의 매출액을 계산한다. 이후 각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정책지원으로부터 발생된 순수한 이익 부분을 추정한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곱하는 이유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각 기업의 비용 측면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정책의 중·장기 효과까지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부터 발생된 편익은 다음과 같이 중·장기 효과까지 고려하여 계산한다.

$$\text{평균지원 효과} = \frac{1}{N_1} \sum_i \sum_{t=0} \rho_{i,t} (\exp(Y_{i,t}(1)) - \exp(Y(1)_{i,t} - \tau_{ATT,t})) \times (1+r)^{-t} \quad (11)$$

이때 할인율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5.5%로 가정한다. 한편, 비용에 대한 정보는 <표 IV-10>과 <표 IV-12>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연도의 평균지원금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2011년은 예산 자료를 얻을 수 없어 평균지원 효과만 제시하고, 이후 분석기간인 2012년부터는 단기효과와 중·장기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다.

2. 데이터 및 분석대상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지원이력과 한국기업데이터의 재무정보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정보는 국내의 다른 기업데이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교군 역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분석한다. 이때 비교 집단은 분석대상인 (6개²¹⁾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기업들로 구성하였으며, 표본 추출과정에서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각 연도별로 지원받은 기업들의 중·장기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집단 역시 표본 내에서 최초로 관측된 연도를 기준으로 표본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A기업이 2011년과 2012년에 연속하여 지원을 받았다면, 혹은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불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이 기업은 2011년의 지원집단으로 분류한다. 또한 동일 연도에 동일 사업군 내에서 서로 다른 수행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행기관으로부터 받은 기업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고, 나머지는 제외하였다. 이렇게 비교 집단 선정에 기준을 두는 이유는 정책지원을 받기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각 사업군의 연도별 표본은 <표 VI-2>와 같다.²²⁾

21) 사업군 분류에는 6개 사업이 이외에 인력과 동반성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두 사업군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인력 사업군의 경우 기업들의 평균 지원규모가 소액이어서, 그리고 동반성장 사업군의 경우 대상기업이 많지 않아 표본을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기업들은 비교 집단에서도 제외하였다.

〈표 VI-2〉 각 사업군의 연도별 표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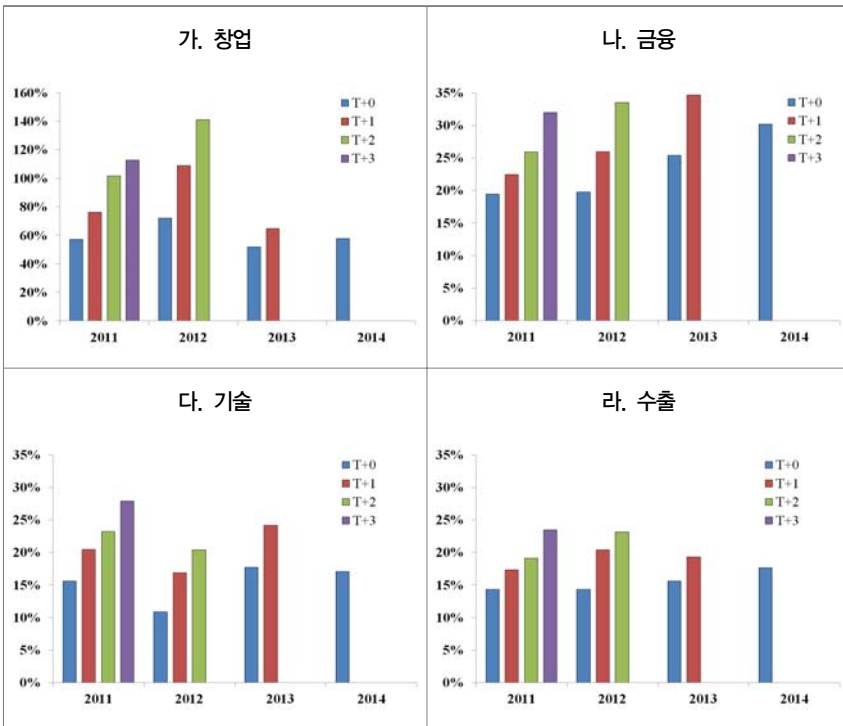
(단위: 개)

| 연도 | 창업 | 금융 | 기술 | 수출 | 내수 | 경영 | 비교집단(공통) |
|------|-----|--------|-------|-------|-----|-------|----------|
| 2011 | 195 | 40,004 | 2,528 | 5,525 | 625 | 3,327 | 28,746 |
| 2012 | 222 | 29,988 | 2,371 | 2,886 | 444 | 5,708 | 29,843 |
| 2013 | 531 | 27,709 | 3,457 | 2,412 | 450 | 7,633 | 25,695 |
| 2014 | 474 | 20,529 | 5,305 | 2,170 | 485 | 6,347 | 27,477 |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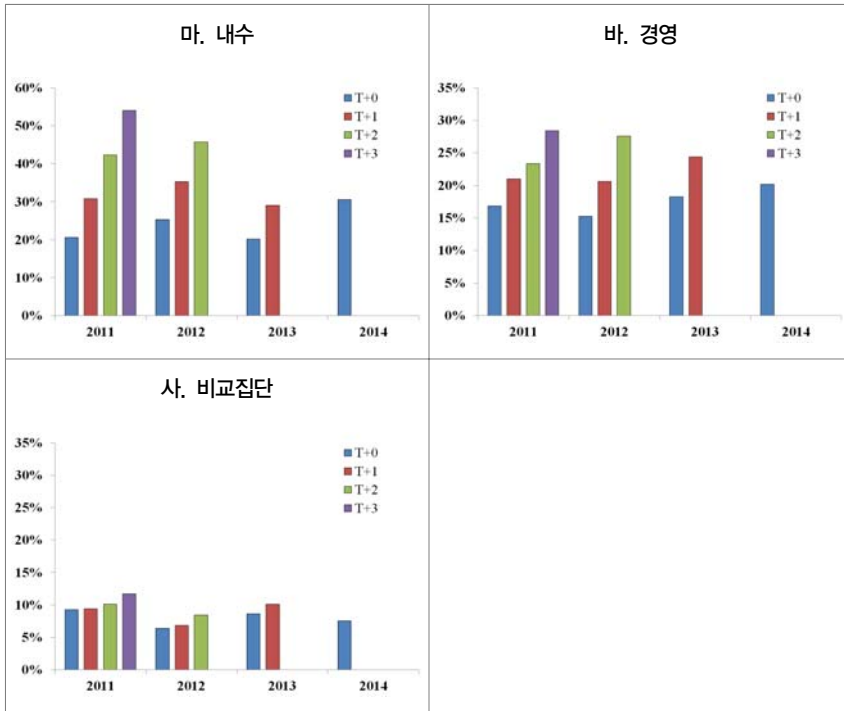
분석에 앞서 각 사업군의 매출액 증가추이를 비교해보면, 대부분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군들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사업군은 창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 각 사업군별 매출액 증가 추이



22) 각 사업군의 전체 지원기업 수는 〈표 II-11〉를 참조하라.

[그림 VI-1]의 계속



주: T+0은 지원받기 직전 연도와 지원받은 연도 간의 매출액 변화를 의미하고, T+1은 지원받기 직전 연도와 지원받은 다음 연도 간의 매출액 변화를 의미
 자료: 한국기업데이터(KEDI)

3. 사업군별 분석 결과

각 사업군별 성과 분석은 분석절차에서 언급한 순서대로 진행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성향점수 추정결과를 통해 각 사업별로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들이 선정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후 성향점수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Pseudo-R², LR-검정, 공변량 간 t-검정 및 편의 검정 등을 살펴본 후 성향점수가 잘 추정되었는지 판단 여부에 따라 집단 간 편의를 줄일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한다. 때문에 모든 분석방법은 성향점수의 질 평가에 의존하여 결정한다.

가. 창업

우선 창업부문 지원에 대한 성향점수 추정결과(〈표 VI-3〉)를 보면, 2011년의 경우 매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창업과 관련된 정책 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창업부문 지원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낮은 기업들이 더 많은 정책 지원을 받았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부채비율의 경우 창업 지원 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업이익률, R&D 집중도는 2011년에만 모두 창업 지원 확률에 유의한 양(+)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당시에 주로 재무가 건전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한 신생기업에 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효과는 2012~2014년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고용규모 측면에서 볼 때 2011~2012년에는 고용규모가 지원혜택을 받는 데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으나, 2013~2014년에는 고용규모가 100인 미만인 기업들에게 많은 지원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향점수 질에 대한 분석결과(〈표 VI-4〉 참조)를 보면 매칭 이후 Pseudo-R²의 값이 매칭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으며, 모든 공변량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0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칭 이전에는 기업의 특성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매칭 이후에는 두 집단 간의 체계적 차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확률은 임의확률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I-5〉는 매칭 전·후로 두 집단 간의 공변량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2011년도 지원군과 비교군의 공변량을 매칭 전·후로 비교해보면 매칭 이전에는 t-통계가 유의한 결과를 보일 뿐 아니라 두 변수 간의 편이 역시 크게 추정되었다. 그러나 매칭 이후에는 t-통계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편이 역시 매칭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매칭을 통해 두 집단 간의 공변량 차이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집단 간에 공변량 차

이로 발생하는 선택편의는 0이 된다.

〈표 VI-3〉 창업부문 성향점수 추정결과

| 변수($t-1$)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
|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 매출액(로그) | -0.302 | (0.000) | -0.295 | (0.000) | -0.238 | (0.000) | -0.225 | (0.000) |
| 부채비율 | -0.013 | (0.714) | -0.008 | (0.704) | -0.003 | (0.675) | 0.001 | (0.759) |
| 영업이익률 | 0.313 | (0.000) | 0.017 | (0.167) | 0.003 | (0.300) | -2.E-05 | (0.886) |
| R&D 집중도 | 0.692 | (0.000) | 0.016 | (0.354) | 0.007 | (0.679) | 0.002 | (0.803) |
| 업력 | -0.173 | (0.000) | -0.242 | (0.000) | -0.052 | (0.000) | -0.067 | (0.000) |

고용규모(기준=9인 미만)

| | | | | | | | | |
|-----------------------|--------|---------|--------|---------|--------|---------|--------|---------|
| 10~19 | -0.135 | (0.434) | -0.233 | (0.237) | 0.184 | (0.016) | 0.242 | (0.003) |
| 20~49 | 0.057 | (0.808) | -0.067 | (0.782) | 0.416 | (0.000) | 0.506 | (0.000) |
| 50~99 | 0.089 | (0.844) | — | | 0.495 | (0.000) | 0.266 | (0.157) |
| 100~199 | — | | — | | 0.388 | (0.051) | -0.100 | (0.787) |
| 200~299 | — | | — | | 0.336 | (0.385) | — | |
| 상수항 | 1.549 | (0.003) | 1.801 | (0.000) | 0.373 | (0.346) | 0.903 | (0.001) |
| Pseudo-R ² | 0.429 | | 0.486 | | 0.321 | | 0.344 | |
| 관측치 | 23,552 | | 23,988 | | 25,000 | | 24,517 | |

주: 1. 모든 모형에 대부분류 산업더미 포함

2. “—”는 분석되지 않음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표 VI-4〉 창업부문 성향점수의 질 평가

| 분석 시점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
| | Pseudo -R ² | LR-검정 (유의확률) | Pseudo -R ² | LR-검정 (유의확률) | Pseudo -R ² | LR-검정 (유의확률) | Pseudo -R ² | LR-검정 (유의확률) |
| 매칭 전 | 0.429 | 0.000 | 0.486 | 0.000 | 0.321 | 0.000 | 0.343 | 0.000 |
| 매칭 후 | 0.005 | 0.999 | 0.005 | 0.999 | 0.005 | 0.997 | 0.008 | 0.881 |

주: LR-검정은 성향점수 추정에 이용된 설명변수의 모든 계수가 0이라는 가설을 검정

자료: 저자 작성

〈표 VI-5〉 매칭 전·후 공변량 차이에 대한 편의 및 t-검정 결과:
2011년 창업부문

| 변수($t-1$) | 매칭 | 평균 | | 편의 (%) | t-통계 | 유의확률 |
|-------------|----|--------|--------|---------|--------|-------|
| | | 지원군 | 비교군 | | | |
| 매출액(로그) | 전 | 12,364 | 14,433 | 141,337 | 18,262 | 0,000 |
| | 후 | 12,364 | 12,389 | 1,699 | 0,171 | 0,864 |
| 부채비율(%) | 전 | 0,697 | 0,516 | 27,211 | 3,836 | 0,000 |
| | 후 | 0,697 | 0,671 | 2,820 | 0,451 | 0,652 |
| 영업이익률(%) | 전 | -0,316 | -0,069 | 16,054 | 1,758 | 0,079 |
| | 후 | -0,316 | -0,309 | 0,308 | 0,042 | 0,966 |
| R&D 집중도(%) | 전 | 0,149 | 0,007 | 31,139 | 7,938 | 0,000 |
| | 후 | 0,149 | 0,172 | 1,910 | 0,244 | 0,808 |
| 업력 | 전 | 1,782 | 10,411 | 145,609 | 14,930 | 0,000 |
| | 후 | 1,782 | 2,057 | 12,031 | 1,455 | 0,146 |
| 고용규모 9인 미만 | 전 | 0,948 | 0,761 | 54,966 | 6,082 | 0,000 |
| | 후 | 0,948 | 0,936 | 5,101 | 0,706 | 0,480 |
| 10~19 | 전 | 0,031 | 0,105 | 29,785 | 3,358 | 0,001 |
| | 후 | 0,031 | 0,038 | 4,005 | 0,560 | 0,576 |
| 20~49 | 전 | 0,016 | 0,088 | 33,093 | 3,546 | 0,000 |
| | 후 | 0,016 | 0,020 | 3,607 | 0,512 | 0,609 |
| 50~99 | 전 | 0,005 | 0,045 | 25,801 | 2,681 | 0,007 |
| | 후 | 0,005 | 0,005 | 0,317 | 0,041 | 0,967 |

주: 1. 2011년의 경우 100~199 및 200~299인 기업들은 양쪽 모두에서 관측되지 않음

2. 편의 및 t-통계는 편의상 모두 절댓값으로 표시

자료: 저자 작성

창업의 경우 모든 연도에서 성향점수가 잘 추정되었기 때문에 분석방법은 RA 대신에 매칭과 PS-WLS를 이용한다.

창업부문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VI-6〉과 〈표 VI-7〉에 보고되어 있다. 매칭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2011년에는 지원군에 대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12년과 2014년에도 모두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보았던 [그림

VI-1의 결과와 상이한 그림을 보여준다. 앞선 기초통계에서는 창업부문이 다른 사업군들에 비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DID 추정결과는 이러한 성장세가 창업기업들의 개인적인 역량일 뿐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발생된 효과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정부지원을 받은 신규 창업기업들 중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과 비교해본 결과 오히려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I-6〉 창업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매출액

| | 2011 | 2012 | 2013 | 2014 |
|-----------|-----------------------|----------------------|-------------------|-----------------------|
| 1:1 매칭 | -0.290 (0.186) | 0.214 (0.251) | -0.039 (0.113) | -0.406 *** (0.135) |
| 1:5 매칭 | -0.171 (0.137) | -0.045 (0.177) | -0.139 (0.085) | -0.254 ** (0.106) |
| PS-WLS | -0.169 *** (0.064) | -0.186 ** (0.078) | -0.065 (0.047) | -0.276 *** (0.082) |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
2. () 안은 표준오차

자료: 저자 작성

〈표 VI-7〉 창업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고용

| | 2011 | 2012 | 2013 | 2014 |
|-----------|---------------------|--------------------|----------------------|---------------------|
| 1:1 매칭 | 0.127 (0.104) | -0.065 (0.100) | 0.111 ** (0.053) | 0.047 (0.057) |
| 1:5 매칭 | 0.168 ** (0.074) | 0.034 (0.078) | 0.068 (0.045) | 0.103 ** (0.041) |
| PS-WLS | 0.095 ** (0.039) | 0.066 * (0.035) | 0.096 *** (0.027) | 0.023 (0.034) |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
2. () 안은 표준오차

자료: 저자 작성

반면 고용 측면의 결과는 매출액과 다른 결과를 보인다. 매출액에 대해선 대체로 정책 효과가 없었던 반면, 고용증가 측면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석결과에 모형별로 다소 상이한 수치와 유의성을 보 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정부지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 업부문의 경우 매출액보다는 고용부문에서 정책적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 된다.

나. 금융

금융부문의 성향점수 추정결과(〈표 VI-8〉)를 보면 2011년과 2012년 지원 사업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들에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인 이상인 기업들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금융지원을 받을 확률 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11년에는 매출액이 많고,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높은 R&D 집중도를 보인 기업들이 정책지 원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매출액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책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2년 이후부터는 매출규모가 작으면서 재무상태가 건정하고, 높은 R&D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의 경우 모든 기간 에서 업력이 낮을수록 금융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VI-8〉 금융부문 성향점수 추정결과

| 변수($t-1$)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
|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 매출액(로그) | 0.039 | (0.000) | -0.025 | (0.000) | -0.042 | (0.000) | -0.048 | (0.000) |
| 부채비율 | -0.056 | (0.000) | -0.039 | (0.001) | -0.005 | (0.235) | -0.026 | (0.002) |
| 영업이익률 | 0.003 | (0.009) | -8E-05 | (0.829) | 0.001 | (0.077) | 0.003 | (0.030) |
| R&D 집중도 | 0.091 | (0.000) | -0.004 | (0.217) | 0.005 | (0.472) | 0.015 | (0.063) |
| 업력 | -0.041 | (0.000) | -0.040 | (0.000) | -0.040 | (0.000) | -0.043 | (0.000) |
| 고용규모(기준=9인 미만) | | | | | | | | |
| 10~19 | 0.157 | (0.000) | 0.128 | (0.000) | 0.000 | (0.993) | 0.024 | (0.251) |
| 20~49 | 0.163 | (0.000) | 0.144 | (0.000) | 0.015 | (0.501) | 0.003 | (0.909) |
| 50~99 | -0.075 | (0.011) | -0.107 | (0.002) | -0.134 | (0.000) | -0.143 | (0.000) |

〈표 VI-8〉의 계속

| 변수($t-1$)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
|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 100~199 | -0.492 | (0.000) | -0.392 | (0.000) | -0.482 | (0.000) | -0.613 | (0.000) |
| 200~299 | -0.861 | (0.000) | -0.731 | (0.000) | -0.851 | (0.000) | -0.976 | (0.000) |
| 상수항 | -1.639 | (0.000) | -0.714 | (0.000) | -0.493 | (0.000) | -0.439 | (0.000) |
| Pseudo-R ² | 0.184 | | 0.182 | | 0.195 | | 0.199 | |
| 관측치 | 68,630 | | 59,720 | | 53,315 | | 47,971 | |

주: 모든 모형에 대분류 산업디미 포함
 자료: 저자 작성

〈표 VI-9〉 금융부문 성향점수의 질 평가

| 분석 시점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
| | Pseudo -R ² | LR-검정 (유의확률) | Pseudo -R ² | LR-검정 (유의확률) | Pseudo -R ² | LR-검정 (유의확률) | Pseudo -R ² | LR-검정 (유의확률) |
| 매칭 전 | 0.184 | 0.000 | 0.182 | 0.000 | 0.195 | 0.000 | 0.199 | 0.000 |
| 매칭 후 | 0.002 | 0.001 | 0.001 | 0.000 | 0.001 | 0.000 | 0.002 | 0.000 |

주: LR-검정은 성향점수 추정에 이용된 설명변수의 모든 계수가 0이라는 가설을 검정
 자료: 저자 작성

한편, 매칭 측면에서 볼 때 금융부문의 결과(〈표 VI-9〉)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부문에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특성이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매칭 분석 대신에 회귀조정 방식을 이용하여 ATT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창업과 달리 매출액과 고용 측면 모두 유의한 양(+)의 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의 경우 2011년보다는 이후에 받은 기업일수록 기업들의 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은 2014년이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반면, 2012~2013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였다. 추정결과에 비춰보면 금융부문의 지원사업은 매출액과 고용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VI-10〉 금융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매출액

| | 2011 | 2012 | 2013 | 2014 |
|----|----------------------|----------------------|----------------------|----------------------|
| RA | 0.102 *** (0.001) | 0.118 *** (0.001) | 0.129 *** (0.001) | 0.210 *** (0.002) |

- 주: 1. ***는 1% 유의수준을 의미
 2. () 안은 표준오차
 3. RA 분석의 표준오차는 100번의 부스트랩을 통해 계산

자료: 저자 작성

〈표 VI-11〉 금융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고용

| | 2011 | 2012 | 2013 | 2014 |
|----|-----------------------|-----------------------|-----------------------|----------------------|
| RA | 0.093 *** (0.0003) | 0.089 *** (0.0003) | 0.077 *** (0.0004) | 0.112 *** (0.001) |

- 주: 1. ***는 1% 유의수준을 의미
 2. () 안은 표준오차
 3. RA 분석의 표준오차는 100번의 부스트랩을 통해 계산

자료: 저자 작성

다. 기술

기술부문의 성향점수 추정결과(〈표 VI-12〉)를 보면, 다른 사업들과 달리 각 연도별로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술부문에서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주로 매출규모가 작고, 부채비율이 낮으며, 영업이익률과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고용규모가 클수록 정책지원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성향점수의 질 평가 결과(〈표 VI-13〉)를 보면 2011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의 대조군과 비교군 간의 공변량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1년은 RA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나머지 기간은 매칭과 PS-WL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표 VI-12〉 기술부문 성향점수 추정결과

| 변수($t-1$)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
|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 매출액(로그) | -0.037 | (0.001) | -0.075 | (0.000) | -0.125 | (0.000) | -0.096 | (0.000) |
| 부채비율 | -0.181 | (0.000) | -0.118 | (0.001) | -0.002 | (0.629) | -0.014 | (0.161) |
| 영업이익률 | 0.011 | (0.090) | 0.001 | (0.592) | 0.028 | (0.000) | 0.002 | (0.185) |
| R&D 집중도 | 0.187 | (0.000) | 0.001 | (0.718) | 0.084 | (0.000) | 0.033 | (0.008) |
| 업력 | -0.029 | (0.000) | -0.029 | (0.000) | -0.030 | (0.000) | -0.030 | (0.000) |
| 고용규모(기준=9인 미만) | | | | | | | | |
| 10~19 | 0.652 | (0.000) | 0.613 | (0.000) | 0.493 | (0.000) | 0.433 | (0.000) |
| 20~49 | 1.051 | (0.000) | 0.912 | (0.000) | 0.753 | (0.000) | 0.674 | (0.000) |
| 50~99 | 0.963 | (0.000) | 0.863 | (0.000) | 0.728 | (0.000) | 0.702 | (0.000) |
| 100~199 | 0.651 | (0.000) | 0.657 | (0.000) | 0.382 | (0.000) | 0.342 | (0.000) |
| 200~299 | 0.254 | (0.047) | 0.299 | (0.021) | 0.031 | (0.818) | 0.065 | (0.541) |
| 상수항 | -2.398 | (0.000) | -1.342 | (0.000) | -0.700 | (0.002) | -0.757 | (0.000) |
| Pseudo-R ² | 0.362 | | 0.331 | | 0.343 | | 0.334 | |
| 관측치 | 29,943 | | 29,493 | | 26,998 | | 32,333 | |

주: 모든 모형에 대부분류 산업더미 포함
 자료: 저자 작성

〈표 VI-13〉 기술부문 성향점수의 질 평가

| 분석 시점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
| | Pseudo -R ² | LR-검정 (유의확률) | Pseudo -R ² | LR-검정 (유의확률) | Pseudo -R ² | LR-검정 (유의확률) | Pseudo -R ² | LR-검정 (유의확률) |
| 매칭 전 | 0.362 | 0.000 | 0.331 | 0.000 | 0.343 | 0.000 | 0.334 | 0.000 |
| 매칭 후 | 0.721 | 0.000 | 0.001 | 1.000 | 0.000 | 1.000 | 0.023 | 0.663 |

주: LR-검정은 성향점수 추정에 이용된 설명변수의 모든 계수가 0이라는 가설을 검정
 자료: 저자 작성

각 연도별 정책 효과의 추정결과(〈표 VI-14〉과 〈표 VI-15〉)를 보면, 기술 부문은 대체로 매출액보다는 고용에서 정책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매출액의 경우 2011년만 유의한 정책 효과가 관측되는 반면, 나머지 기간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고용의 경우 모든 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책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4〉 기술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매출액

| | 2011 | 2012 | 2013 | 2014 |
|-----------|---------------------|--------------------|------------------|------------------|
| 1:1 매칭 | | -0.003 (0.030) | 0.031 (0.026) | 0.024 (0.024) |
| 1:5 매칭 | | -0.043* (0.023) | 0.007 (0.021) | 0.022 (0.019) |
| PS-WLS | | 0.007 (0.014) | 0.020 (0.015) | 0.024 (0.020) |
| RA | 0.049*** (0.003) | | | |

- 주: 1. ***, **는 각각 1%, 5% 유의수준을 의미
 2. () 안은 표준오차
 3. RA 분석의 표준오차는 100번의 부스트랩을 통해 계산

자료: 저자 작성

〈표 VI-15〉 기술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고용

| | 2011 | 2012 | 2013 | 2014 |
|-----------|---------------------|---------------------|---------------------|---------------------|
| 1:1 매칭 | | 0.098*** (0.023) | 0.120*** (0.021) | 0.130*** (0.016) |
| 1:5 매칭 | | 0.101*** (0.020) | 0.126*** (0.016) | 0.107*** (0.014) |
| PS-WLS | | 0.128*** (0.012) | 0.120*** (0.011) | 0.125*** (0.012) |
| RA | 0.198*** (0.002) | | | |

- 주: 1. ***, **는 각각 1%, 5% 유의수준을 의미
 2. () 안은 표준오차
 3. RA 분석의 표준오차는 100번의 부스트랩을 통해 계산

자료: 저자 작성

라. 수출

수출부문의 경우 매출액 규모가 작고 R&D 집중도가 높으면서 고용규모가 작은 기업들에 정책지원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성장점

수의 질 평가 결과(〈표 VI-17〉)를 보면, 기술부문과 마찬가지로 2011년의 성향점수는 두 집단 간 공변량의 균형을 맞추는 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도 기술과 마찬가지로 2011년은 RA분석을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은 매칭과 PS-WLS 분석을 실시한다.

〈표 VI-16〉 수출부문 성향점수 추정결과

| 변수($t-1$)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
|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 매출액(로그) | -0.011 | (0.203) | -0.042 | (0.000) | -0.062 | (0.000) | -0.076 | (0.000) |
| 부채비율 | 0.023 | (0.146) | 0.003 | (0.633) | -0.001 | (0.597) | 0.001 | (0.773) |
| 영업이익률 | 0.022 | (0.010) | -0.002 | (0.153) | 0.001 | (0.699) | 5.E-04 | (0.576) |
| R&D 집중도 | 0.187 | (0.000) | -0.003 | (0.264) | 0.020 | (0.053) | 0.020 | (0.099) |
| 업력 | -0.024 | (0.000) | -0.024 | (0.000) | -0.024 | (0.000) | -0.029 | (0.000) |
| 고용규모(기준=9인 미만) | | | | | | | | |
| 10~19 | 0.601 | (0.000) | 0.549 | (0.000) | 0.483 | (0.000) | 0.449 | (0.000) |
| 20~49 | 0.913 | (0.000) | 0.773 | (0.000) | 0.820 | (0.000) | 0.770 | (0.000) |
| 50~99 | 0.817 | (0.000) | 0.741 | (0.000) | 0.797 | (0.000) | 0.819 | (0.000) |
| 100~199 | 0.372 | (0.000) | 0.451 | (0.000) | 0.426 | (0.000) | 0.504 | (0.000) |
| 200~299 | -0.084 | (0.433) | -0.186 | (0.192) | -0.013 | (0.924) | 0.243 | (0.061) |
| 상수항 | -2.942 | (0.000) | -1.841 | (0.000) | -1.497 | (0.000) | -1.342 | (0.000) |
| Pseudo-R ² | 0.362 | | 0.285 | | 0.292 | | 0.273 | |
| 관측치 | 33,210 | | 29,982 | | 27,221 | | 28,358 | |

주: 모든 모형에 대부분류 산업더미 포함
자료: 저자 작성

〈표 VI-17〉 수출부문 성향점수의 질 평가

| 분석 시점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
| | Pseudo -R ² | LR-검정 (유의확률) | Pseudo -R ² | LR-검정 (유의확률) | Pseudo -R ² | LR-검정 (유의확률) | Pseudo -R ² | LR-검정 (유의확률) |
| 매칭 전 | 0.362 | 0.000 | 0.285 | 0.000 | 0.292 | 0.000 | 0.273 | 0.000 |
| 매칭 후 | 0.300 | 0.000 | 0.000 | 1.000 | 0.000 | 1.000 | 0.000 | 1.000 |

주: LR-검정은 성향점수 추정에 이용된 설명변수의 모든 계수가 0이라는 가설을 검정
자료: 저자 작성

정책 효과 측면을 보면 수출부문은 매출과 고용 모두에서 유의한 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부문의 경우 정책지원 효과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수출액, 그리고 판로가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 등이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연구원(201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출지원 정책은 수출규모뿐만 아니라 판로 확장에도 유의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²³⁾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과 본 연구에서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수출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18〉 수출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매출액

| | 2011 | 2012 | 2013 | 2014 |
|-----------|----------------------|----------------------|---------------------|---------------------|
| 1:1 매칭 | | 0.030 (0.028) | 0.039 (0.027) | 0.019 (0.032) |
| 1:5 매칭 | | 0.018 (0.022) | 0.030 (0.022) | 0.029 (0.025) |
| PS-WLS | | 0.064 *** (0.013) | 0.042 ** (0.017) | 0.061 ** (0.026) |
| RA | 0.046 *** (0.002) | | | |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
 2. () 안은 표준오차
 3. RA 분석의 표준오차는 100번의 부스트랩을 통해 계산

자료: 저자 작성

〈표 VI-19〉 수출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고용

| | 2011 | 2012 | 2013 | 2014 |
|-----------|----------------------|----------------------|----------------------|----------------------|
| 1:1 매칭 | | 0.051 ** (0.022) | 0.080 *** (0.023) | 0.115 *** (0.021) |
| 1:5 매칭 | | 0.074 *** (0.018) | 0.109 *** (0.018) | 0.127 *** (0.018) |
| PS-WLS | | 0.108 *** (0.011) | 0.111 *** (0.012) | 0.132 *** (0.016) |
| RA | 0.161 *** (0.001) | | | |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
 2. () 안은 표준오차
 3. RA 분석의 표준오차는 100번의 부스트랩을 통해 계산

자료: 저자 작성

23) 최근 해외에서도 수출지원 사업의 성과들을 분석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수출지원 사업의 성과는 수출액뿐만 아니라 판로확대에도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내수

내수부문의 경우도 앞선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매출액 규모가 작으면서 업력이 짧은 신생기업이면서 고용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책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VI-20〉 참조). 한편 추정된 성향점수의 질 평가 결과(〈표 VI-21〉)를 보면, 모든 연도에서 매칭 이후 LR-검정의 유의성이 사라져 상대적으로 성향점수가 잘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모형으로서 RA는 사용하지 않는다.

〈표 VI-20〉 내수부문 성향점수 추정결과

| 변수($t-1$)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
|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 매출액(로그) | -0.143 | (0.000) | -0.102 | (0.000) | -0.132 | (0.000) | -0.163 | (0.000) |
| 부채비율 | 0.007 | (0.764) | 0.002 | (0.843) | -0.001 | (0.819) | -0.002 | (0.809) |
| 영업이익률 | 0.013 | (0.131) | -0.002 | (0.508) | -2.E-04 | (0.948) | 0.001 | (0.633) |
| R&D 집중도 | 0.117 | (0.002) | -0.002 | (0.589) | 0.010 | (0.460) | 0.012 | (0.364) |
| 업력 | -0.028 | (0.000) | -0.031 | (0.000) | -0.025 | (0.000) | -0.028 | (0.000) |
| 고용규모(기준=9인 미만) | | | | | | | | |
| 10~19 | 0.475 | (0.000) | 0.356 | (0.000) | 0.260 | (0.000) | 0.380 | (0.000) |
| 20~49 | 0.751 | (0.000) | 0.576 | (0.000) | 0.530 | (0.000) | 0.624 | (0.000) |
| 50~99 | 0.588 | (0.000) | 0.534 | (0.000) | 0.345 | (0.006) | 0.514 | (0.000) |
| 100~199 | 0.252 | (0.131) | 0.184 | (0.294) | 0.324 | (0.040) | 0.295 | (0.105) |
| 200~299 | -0.144 | (0.701) | -0.068 | (0.846) | 0.330 | (0.156) | 0.030 | (0.935) |
| 상수항 | -0.855 | (0.006) | -1.495 | (0.000) | -0.595 | (0.035) | -0.672 | (0.068) |
| Pseudo-R ² | 0.255 | | 0.206 | | 0.209 | | 0.230 | |
| 관측치 | 26,093 | | 26,613 | | 23,560 | | 25,598 | |

주: 모든 모형에 대부분류 산업더미 포함

자료: 저자 작성

〈표 VI-21〉 내수부문 성향점수의 질 평가

| 분석 시점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
| | Pseudo -R ² | LR-검정 (유의확률) | Pseudo -R ² | LR-검정 (유의확률) | Pseudo -R ² | LR-검정 (유의확률) | Pseudo -R ² | LR-검정 (유의확률) |
| 매칭 전 | 0.255 | 0.000 | 0.206 | 0.000 | 0.209 | 0.000 | 0.230 | 0.000 |
| 매칭 후 | 0.001 | 1.000 | 0.001 | 1.000 | 0.000 | 1.000 | 0.001 | 1.000 |

주: LR-검정은 성향점수 추정에 이용된 설명변수의 모든 계수가 0이라는 가설을 검정

자료: 저자 작성

내수부문의 경우 2012년과 2014년에만 매출액 측면에서 정책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 측면은 모든 연도에서 유의한 정책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2〉 내수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매출액

| | 2011 | 2012 | 2013 | 2014 |
|-----------|------------------|-------------------|-------------------|---------------------|
| 1:1 매칭 | 0,023 (0,065) | 0,013 (0,072) | -0,030 (0,079) | 0,118 (0,076) |
| 1:5 매칭 | 0,021 (0,052) | 0,000 (0,060) | 0,010 (0,055) | 0,084 (0,053) |
| PS-WLS | 0,024 (0,033) | 0,056* (0,031) | -0,018 (0,044) | 0,210*** (0,077) |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
2. () 안은 표준오차

자료: 저자 작성

〈표 VI-23〉 내수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고용

| | 2011 | 2012 | 2013 | 2014 |
|-----------|---------------------|---------------------|---------------------|---------------------|
| 1:1 매칭 | 0,213*** (0,049) | 0,237*** (0,051) | 0,156*** (0,049) | 0,175*** (0,043) |
| 1:5 매칭 | 0,167*** (0,039) | 0,191*** (0,043) | 0,144*** (0,040) | 0,195*** (0,034) |
| PS-WLS | 0,161*** (0,023) | 0,170*** (0,026) | 0,139*** (0,025) | 0,201*** (0,035) |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
2. () 안은 표준오차

자료: 저자 작성

바. 경영

경영부문은 대체로 매출액 규모가 크지만 고용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책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이전 사업들과 매출액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표 VI-23〉 참조).

추정된 성향점수의 질 평가 결과(〈표 VI-24〉)를 보면, 모든 연도에서 유의성이 사라졌기에 분석모형 역시 매칭과 PS-WLS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표 VI-24〉 경영부문 성향점수 추정결과

| 변수($t-1$)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
|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계수 | 유의 확률 |
| 매출액(로그) | 0.038 | (0.000) | 0.013 | (0.094) | -0.011 | (0.125) | 0.010 | (0.153) |
| 부채비율 | 0.027 | (0.104) | 0.003 | (0.602) | -0.001 | (0.371) | 3.E-04 | (0.934) |
| 영업이익률 | 0.001 | (0.507) | -0.001 | (0.104) | -2.E-04 | (0.755) | -3.E-05 | (0.967) |
| R&D 집중도 | 0.079 | (0.006) | -0.004 | (0.240) | 0.012 | (0.134) | 0.011 | (0.300) |
| 업력 | -0.027 | (0.000) | -0.034 | (0.000) | -0.035 | (0.000) | -0.037 | (0.000) |
| 고용규모(기준=9인 미만) | | | | | | | | |
| 10~19 | 0.691 | (0.000) | 0.546 | (0.000) | 0.419 | (0.000) | 0.299 | (0.000) |
| 20~49 | 0.854 | (0.000) | 0.658 | (0.000) | 0.445 | (0.000) | 0.367 | (0.000) |
| 50~99 | 0.635 | (0.000) | 0.363 | (0.000) | 0.220 | (0.000) | 0.175 | (0.000) |
| 100~199 | 0.251 | (0.000) | -0.056 | (0.392) | -0.182 | (0.003) | -0.337 | (0.000) |
| 200~299 | -0.249 | (0.047) | -0.768 | (0.000) | -0.507 | (0.000) | -0.592 | (0.000) |
| 상수항 | -3.156 | | -2.390 | | -1.733 | | -2.042 | |
| Pseudo-R ² | 0.330 | | 0.292 | | 0.285 | | 0.273 | |
| 관측치 | 32,041 | | 35,518 | | 33,292 | | 33,791 | |

주: 모든 모형에 대분류 산업더미 포함
자료: 저자 작성

〈표 VI-25〉 경영부문 성향점수의 질 평가

| 분석 시점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
| | Pseudo-R ² | LR-검정 (유의확률) | Pseudo-R ² | LR-검정 (유의확률) | Pseudo-R ² | LR-검정 (유의확률) | Pseudo-R ² | LR-검정 (유의확률) |
| 매칭 전 | 0.330 | 0.000 | 0.292 | 0.000 | 0.285 | 0.000 | 0.273 | 0.000 |
| 매칭 후 | 0.003 | 0.238 | 0.001 | 0.994 | 0.001 | 0.995 | 0.001 | 0.938 |

주: LR-검정은 성향점수 추정에 이용된 설명변수의 모든 계수가 0이라는 가설을 검정
자료: 저자 작성

분석결과를 보면, 경영부문을 매출액과 고용 양측 모두에서 유의한 정책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6〉 경영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매출액

| | 2011 | 2012 | 2013 | 2014 |
|-----------|----------------------|----------------------|----------------------|----------------------|
| 1:1 매칭 | 0.060 ** (0.024) | 0.060 *** (0.023) | 0.035 * (0.021) | 0.049 ** (0.021) |
| 1:5 매칭 | 0.055 *** (0.019) | 0.039 ** (0.018) | 0.054 *** (0.017) | 0.067 *** (0.018) |
| PS-WLS | 0.076 *** (0.012) | 0.083 *** (0.010) | 0.067 *** (0.110) | 0.118 *** (0.017) |

주: 1. ***, **는 각각 1%, 5% 유의수준을 의미
 2. () 안은 표준오차
 3. RA 분석의 표준오차는 100번의 부스트랩을 통해 계산
 자료: 저자 작성

〈표 VI-27〉 경영부문 지원사업의 성과 추정: 고용

| | 2011 | 2012 | 2013 | 2014 |
|-----------|----------------------|----------------------|----------------------|----------------------|
| 1:1 매칭 | 0.157 *** (0.023) | 0.107 *** (0.019) | 0.099 *** (0.017) | 0.097 *** (0.015) |
| 1:5 매칭 | 0.146 *** (0.019) | 0.109 *** (0.016) | 0.089 *** (0.014) | 0.101 *** (0.013) |
| PS-WLS | 0.170 *** (0.011) | 0.170 *** (0.011) | 0.113 *** (0.008) | 0.125 *** (0.011) |

주: 1. ***, **는 각각 1%, 5% 유의수준을 의미
 2. () 안은 표준오차
 3. RA 분석의 표준오차는 100번의 부스트랩을 통해 계산
 자료: 저자 작성

4. 사업군별 중장기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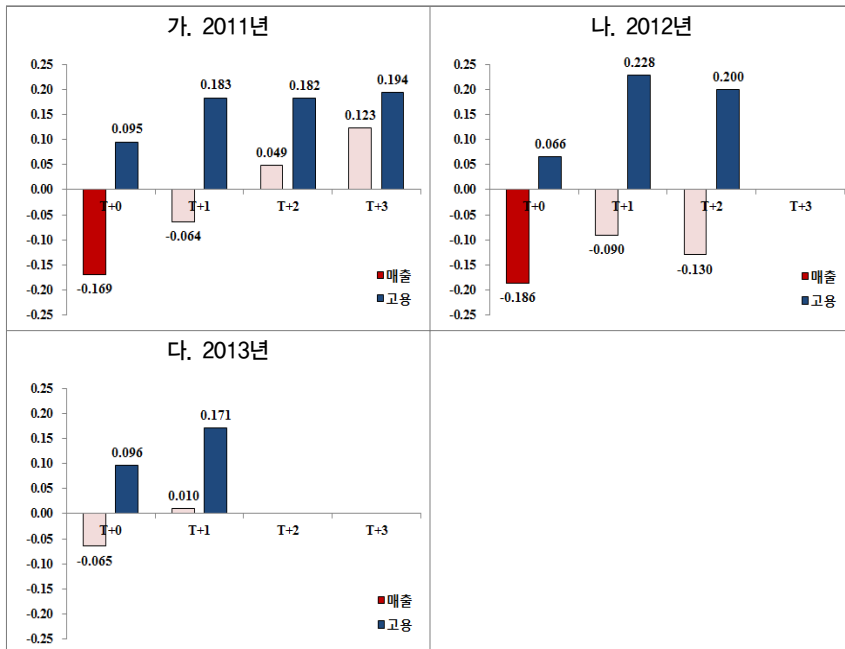
앞선 분석은 지원을 받기 직전 연도와 지원을 받은 연도만을 비교한 단기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정책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 효과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지원받은 이후에도 정책 효과가 유지되는 지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종속변수를 정책 지원을 받기 이전 연도와 정책지원을 받은 이후 연도들 간의 차이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2011년에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 T+1 (2012-2010), T+2 (2013-2010), T+3 (2014-2010)을 분석하고, 2012년에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T+1 (2013-2011), T+2(2014-2011) 등을 분석한다. 각 시점별로 분석하는 분석의 특성상 지원 시점에 따라 최대 T+3에서 최소 T+1의 분석이 가능하다.

가. 창업

창업부문의 중장기 효과분석의 결과를 보면, 매출액에서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선 본장의 제3절에서 분석한 단기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즉, 단기효과가 중기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지원군의 경우 지원시점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2 시점부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단순히 긍정적 방향만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고용은 T+0 시점부터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I-2] 창업부문 지원정책의 중장기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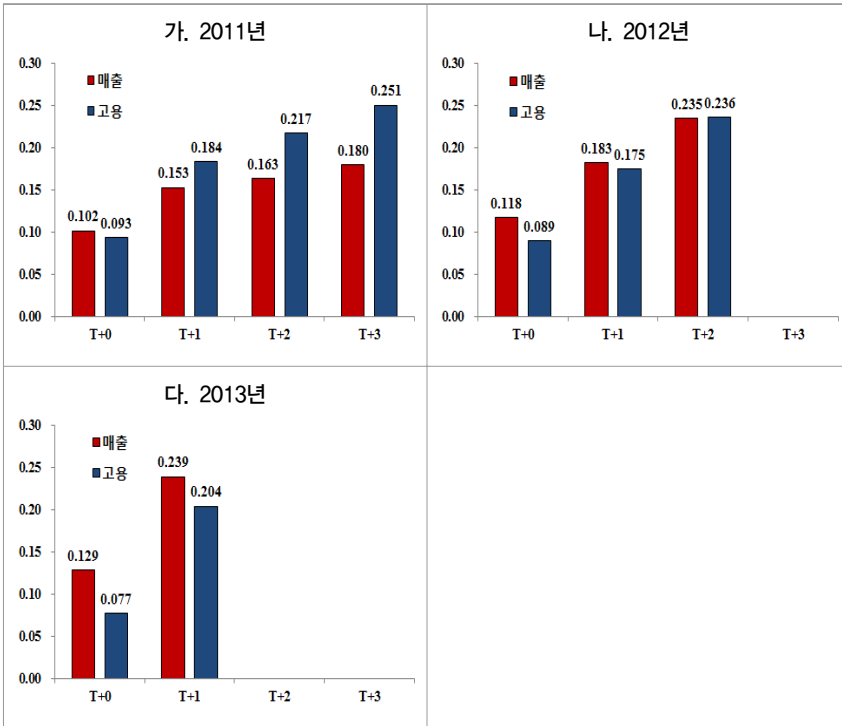
주: 1. ■ ■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그래프는 PS-WLS 추정치를 이용

자료: 저자 작성

나. 금융

금융부문의 경우 모든 연도에서 중·장기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금융부문은 특별히 감소되는 구간이 없이 정책지원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선 본장의 제3절에서 분석한 단기 분석 결과가 중기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3] 금융부문 지원정책의 중장기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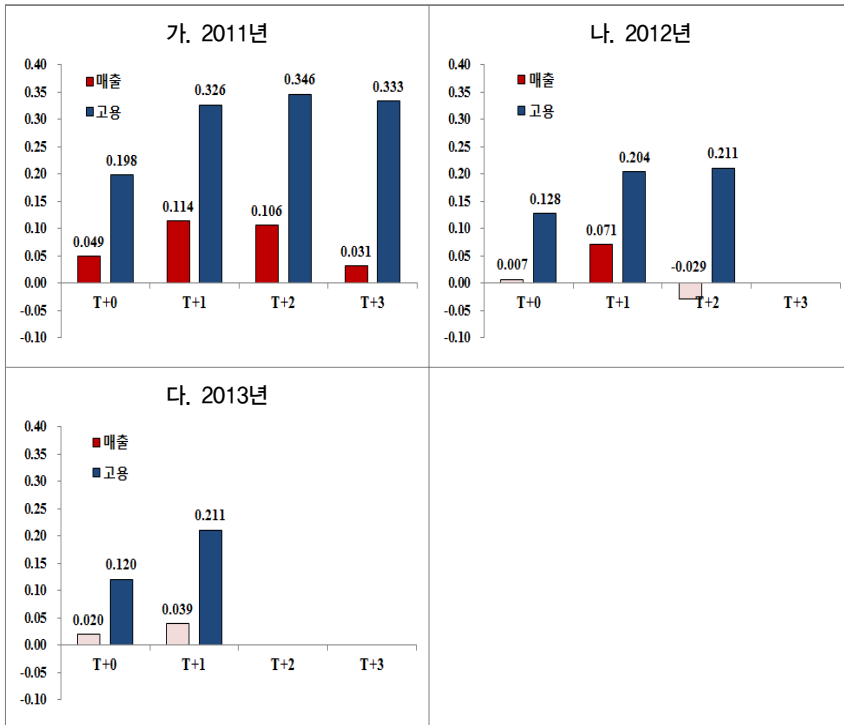
주: 1. ■ ■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그래프는 RA 추정치를 이용

자료: 저자 작성

다. 기술

기술부문은 각 연도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2011년 지원군의 경우 매출액과 고용 모두에서 정책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2년과 2013년에는 고용만 유의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 지원군의 매출액은 T+2기부터 정책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은 T+3기부터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4] 기술부문 지원정책의 중장기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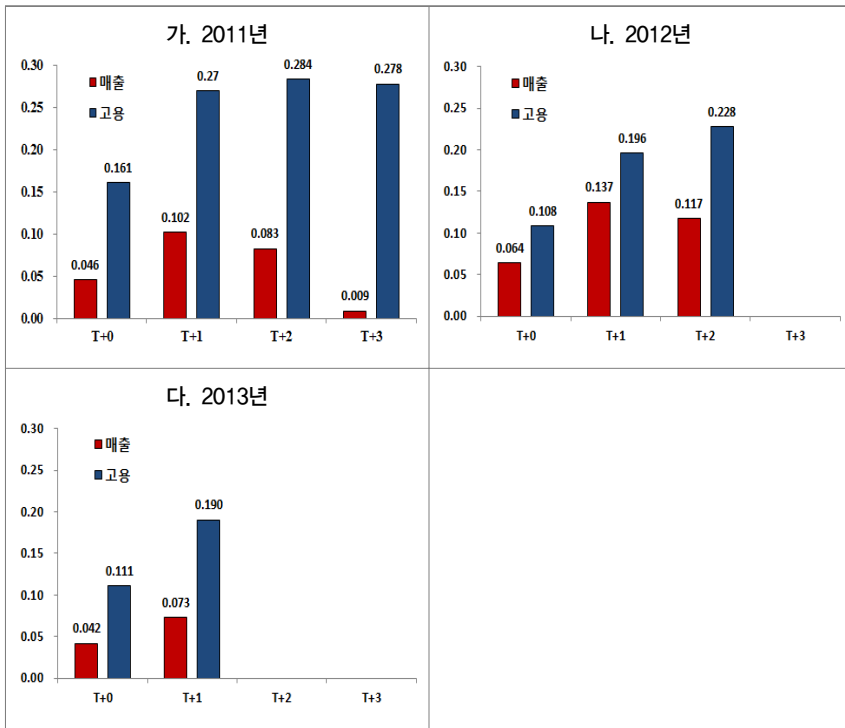
- 주: 1. ■ ■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2011년 그래프는 RA 추정치를 이용
 3. 2012~2013년 그래프는 PS-WLS 추정치를 이용

자료: 저자 작성

라. 수출

수출부문은 모든 연도에서 매출과 고용 증가에 유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효과의 지속성은 매출액보다는 고용 측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즉, 단기적인 고용 증가 효과가 중기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부문 역시 기술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에 대한 정책 효과가 T+2기부터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은 T+3기부터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5] 수출부문 지원정책의 중장기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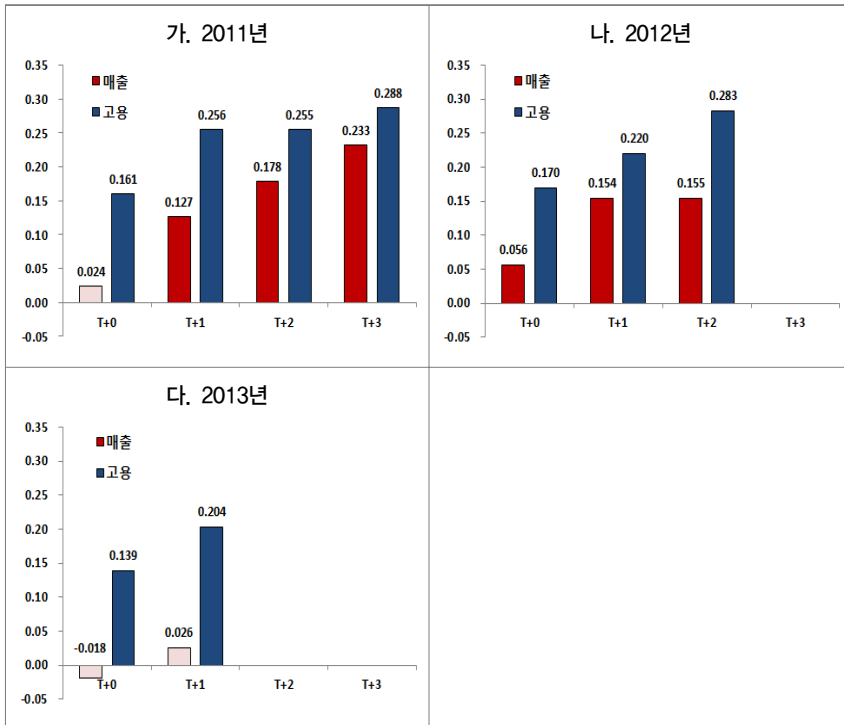
- 주: 1. ■ ■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2011년 그래프는 RA 추정치를 이용
 3. 2012~2013년 그래프는 PS-WLS 추정치를 이용

자료: 저자 작성

마. 내수

내수부문 지원정책의 경우 앞선 분석에서 매출액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장기 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출액에 대한 내수 부문의 지원정책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용은 단기부터 효과가 나타나며 중·장기로 갈수록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6] 내수부문 지원정책의 중장기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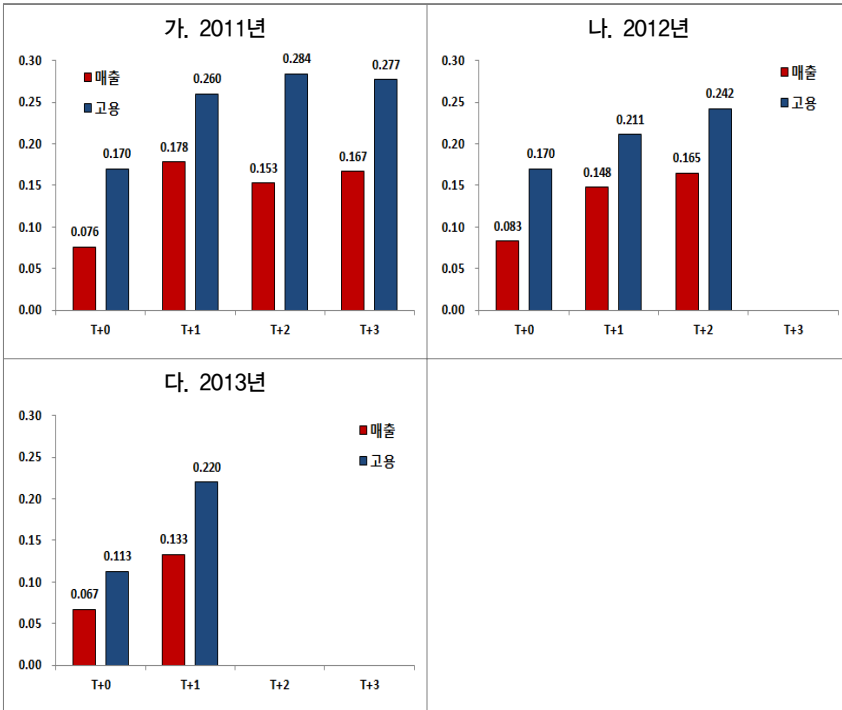
주: 1. ■ ■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그래프는 PS-WLS 추정치를 이용

자료: 저자 작성

바. 경영

경영부문 역시 매출과 고용 증가에 대한 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의 경우 T+2기에 그 효과가 다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7] 사업경영부문 지원정책의 증장기 효과 분석



주: 1. ■ ■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그래프는 PS-WLS 추정치를 이용

자료: 저자 작성

매출액과 고용에 대한 사업군별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매출규모가 작거나 고용규모가 작으면서 업력이 낮은 기업들에 지원이 돌아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지원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는 매출액보다는 고용 측면에서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내수와 기술

사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나는 효과는 없었으나 중·장기로 갈수록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사업군별 B/C 분석

본 절에서는 각 사업군에 대한 B/C 분석을 실시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업별로 성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여 B/C 분석을 실시한다. 한편, 분석에 앞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들을 설정한다. 우선 정책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매칭을 통한 분석의 경우 각 추정치의 평균을 이용하여 성과액을 추정하고, RA 분석을 실시한 경우 그 추정치만 반영한다. 둘째로 정책 효과가 양(+)의 방향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는 0으로 간주하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의 경우 매출액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B/C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다.

분석결과는 <표 VIII-28>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금융의 경우 T시점만을 놓고 볼 때 2013년부터 평균 지원금보다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장기적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그 효과는 최대 5.5까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의 경우 지원금 대비 영업이익의 효과가 거의 0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 효과가 있었던 2011년의 결과를 보아도 지원금 대비 성과의 효과는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판로(수출, 내수)나 경영 측면을 보면 모두 지원금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대체로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군에서는 편익의 효과가 비용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기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B/C 비율을 보이는 사업군은 경영부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사업군은 기술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내수부문의 B/C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경영부문의 B/C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I-28〉 각 사업군별 B/C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 사업군 | 항목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 | | T | 증·장기 | T | 증·장기 | T | 증·장기 | T |
| 금융 | 평균 영업이익(B) | 28.1 | 223.6 | 25.3 | 156.8 | 26.6 | 100.3 | 48.8 |
| | 평균지원금(C) | — | | 28.3 | | 22.5 | | 20.2 |
| | B/C | | | 0.9 | 5.5 | 1.2 | 4.5 | 2.4 |
| 기술 | 평균 영업이익(B) | 31.6 | 216.6 | 0.0 | 39.4 | 0.0 | 0.0 | 0.0 |
| | 평균지원금(C) | — | | 296.4 | | 226.5 | | 111.1 |
| | B/C | | | 0.0 | 0.1 | 0.0 | 0.0 | 0.0 |
| 수출 | 평균 영업이익(B) | 29.5 | 183.7 | 21.6 | 166.6 | 18.0 | 53.9 | 27.9 |
| | 평균지원금(C) | — | | 12.0 | | 14.3 | | 14.2 |
| | B/C | | | 1.8 | 13.9 | 1.3 | 3.8 | 2.0 |
| 내수 | 평균 영업이익(B) | 0.0 | 285.7 | 14.8 | 181.9 | 0.0 | 0.0 | 28.7 |
| | 평균지원금(C) | — | | 3.6 | | 5.9 | | 6.4 |
| | B/C | | | 4.2 | 51.2 | 0.0 | 0.0 | 7.1 |
| 경영 | 평균 영업이익(B) | 34.3 | 282.7 | 25.3 | 144.5 | 16.7 | 58.5 | 32.1 |
| | 평균지원금(C) | — | | 3.4 | | 3.2 | | 5.7 |
| | B/C | | | 7.4 | 42.4 | 5.2 | 18.1 | 5.6 |

주: '—'는 자료 없음.

자료: 저자 작성

6. 부가가치 분석

지금까지 분석결과는 매출액과 고용이라는 양적인 측면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B/C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B/C 분석에서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순효과만을 평가한 반면, 고용 증가에 따른 편익 등은 분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KED 자료의 경우 매출액과 고용 등에서는 정보의 질이 높은 편이지만, 급여와 같은 자료는 결측치 등이 많아서 이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만일 이러한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상당히 많은 정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분석은 따로 절을 두어 분석한다.

가. 분석방법

본 절에서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총급여를 합하여 부가가치 변수를 생성한 후 이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다. 부가가치의 경우 영업이익에 총급여를 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만일 영업손실이 상당히 커서 총급여를 더한 후에도 음(-)의 값을 유지한다면, 로그치를 이용한 DID 분석 시 자료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 분석되는 대상들은 모두 부가가치가 양(+)의 값을 가지는 표본들이다.

본 절에서 실시한 ATT 분석 시 성향점수 추정에 로그 부가가치의 $t-1$ 연도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며, 만일 성향점수의 추정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RA 분석을 실시하게 될 때에도 설명변수에 로그 부가가치의 $t-1$ 연도를 포함하여 분석한다.

한편, 앞선 언급하였듯이 부가가치 측정상 누락되는 관측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이용한 B/C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나. 분석결과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창업의 경우 부가가치에 대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에 대한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하여도 급여가 높지 않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양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기술의 경우 지원시점에는 부가가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후에는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 사업군의 특성상 매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매출액에 대한 정책 효과가 있었던 2011년의 경우를 보면, 부가가치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출액 증가와 고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부가가치가 증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의 경우 매출액과 고용 모두에서 정책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부가가치 역시 양(+)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VI-29〉 창업, 금융, 기술부문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부가가치

| 사업군 | 연도 | T+0 | T+1 | T+2 | T+3 | LR-검정 (유의확률) |
|-----|------|-----------------------|----------------------|----------------------|----------------------|-----------------|
| 창업 | 2011 | -0.076 (0.083) | 0.064 (0.092) | 0.092 (0.116) | -0.075 (0.207) | (0.216) |
| | 2012 | -0.153 * (0.085) | -0.081 (0.118) | 0.150 (0.165) | | (0.996) |
| | 2013 | -0.055 (0.055) | -0.063 (0.074) | | | (0.921) |
| | 2014 | 0.036 (0.069) | | | | (0.649) |
| | 2011 | 0.061 *** (0.001) | 0.105 *** (0.001) | 0.135 *** (0.001) | 0.161 *** (0.001) | (0.000) |
| | 2012 | 0.062 *** (0.001) | 0.120 *** (0.001) | 0.184 *** (0.002) | | (0.000) |
| 금융 | 2013 | 0.069 *** (0.001) | 0.157 *** (0.002) | | | (0.000) |
| | 2014 | 0.089 *** (0.003) | | | | (0.000) |
| | 2011 | 0.015 *** (0.003) | 0.076 *** (0.004) | 0.107 *** (0.005) | 0.059 *** (0.006) | (0.000) |
| | 2012 | -0.017 *** (0.003) | 0.060 *** (0.003) | 0.114 *** (0.005) | | (0.000) |
| | 2013 | -0.027 *** (0.003) | 0.013 *** (0.003) | | | (0.000) |
| | 2014 | 0.006 ** (0.003) | | | | (0.000) |
| 기술 | | | | | | |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2. 추정치 밑에 () 안은 표준오차
 3. LR-검정의 유의확률이 0.1 미만이면 RA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상이면 PS-WLS 이용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수출, 내수, 경영 부문을 살펴보면, 모든 사업군에서 부가가치에 대한 정책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의 경우 매출액에 대한 정책 효과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고용 증가와 이에 따른 급여 증가가 내수 사업군 기업들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VI-30〉 수출, 내수, 경영부문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부가가치

| 사업군 | 연도 | T+0 | T+1 | T+2 | T+3 | LR-검정 (유의확률) |
|-----|------|----------------------|----------------------|----------------------|----------------------|-----------------|
| 수출 | 2011 | 0.046 *** (0.002) | 0.097 *** (0.002) | 0.111 *** (0.002) | 0.055 *** (0.002) | (0.000) |
| | 2012 | 0.043 *** (0.002) | 0.098 *** (0.003) | 0.155 *** (0.004) | | (0.000) |
| | 2013 | 0.048 *** (0.003) | 0.082 *** (0.005) | | | (0.000) |
| | 2014 | 0.038 *** (0.005) | | | | (0.000) |
| | 2011 | 0.020 (0.035) | 0.094 ** (0.042) | 0.150 *** (0.049) | 0.171 * (0.091) | (0.172) |
| | 2012 | 0.091 *** (0.011) | 0.165 *** (0.010) | 0.271 *** (0.020) | | (0.000) |
| 내수 | 2013 | 0.090 *** (0.014) | 0.083 *** (0.012) | | | (0.021) |
| | 2014 | 0.122 *** (0.020) | | | | (0.003) |
| | 2011 | 0.068 *** (0.002) | 0.093 *** (0.003) | 0.126 *** (0.003) | 0.089 *** (0.004) | (0.000) |
| | 2012 | 0.037 *** (0.002) | 0.080 *** (0.002) | 0.145 *** (0.003) | | (0.000) |
| | 2013 | 0.030 *** (0.002) | 0.082 *** (0.002) | | | (0.000) |
| | 2014 | 0.041 *** (0.003) | | | | (0.000) |
| 경영 | | | | | | |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2. 추정치 밑에 () 안은 표준오차

3. LR-검정의 유의확률이 0.1 미만이면 RA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상이면 PS-WLS 이용

자료: 저자 작성

7. 사업군 간 중복수혜 효과 분석

마지막으로 본 절에서는 사업군 간 중복수혜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의 장점은 각 사업군별로 동일 연도에 중복수혜를 받은 기업들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중복

수혜에 따른 지원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각에서는 중복수혜 문제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으켜, 정부의 지원만을 노린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여 중복수혜받은 기업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나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기업성장 단계별로 적절하게 지원 받은 기업들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우려와 반대로 정책 효과가 더욱 증대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사업군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각 사업군을 금융, 기술·창업, 수출·내수 및 경영 등 4개군으로 축소하여 분석한다.

금융의 경우 <표 VII-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은 사업군으로 구분된다. 또한 금융은 기업의 생산 측면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산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한편, 기술·창업은 대체로 초기 기업들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같은 집단으로 묶었으며, 이는 사업초기 단계인 성장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출과 내수는 판로 측면의 정책으로서 생산품을 효과적으로 시장에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판로단계로 구분하였고, 마지막으로 경영은 그 성격상 다른 사업군과 달리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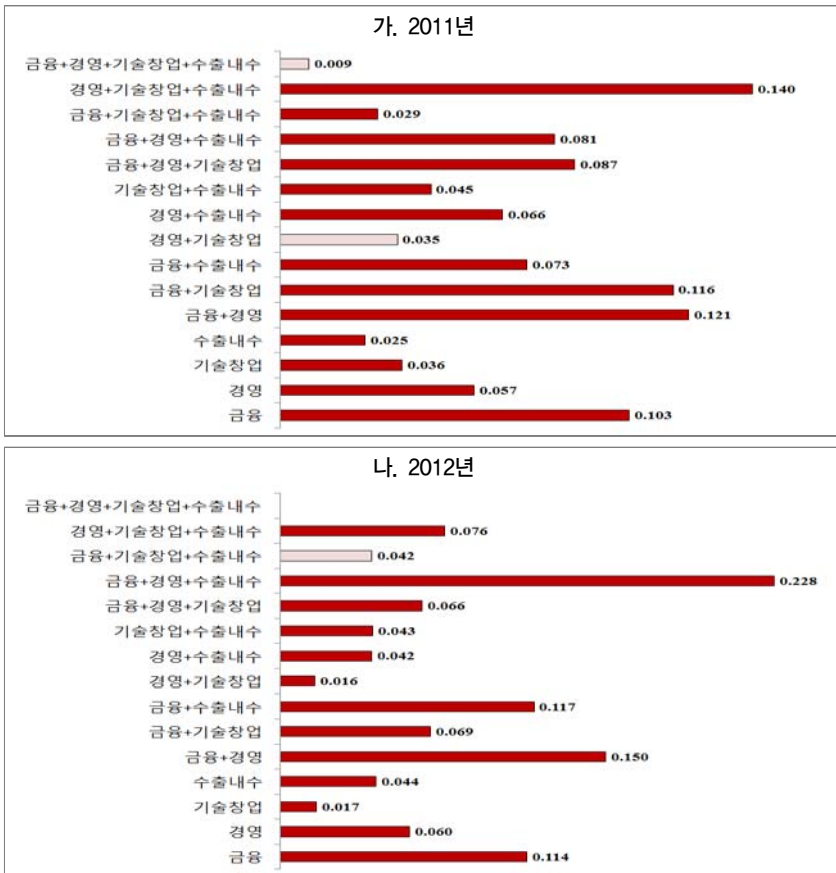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각 사업군들의 조합을 성장(혹은 창업) ⇨ 생산 ⇨ 판로 ⇨ 경영의 단계로 구분한다. 단, 사업의 조합이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분석에서는 단기분석만 실시한다.

분석절차는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로 성향점수의 질 평가에 의존하는데, 분석의 특성상 사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향점수 추정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RA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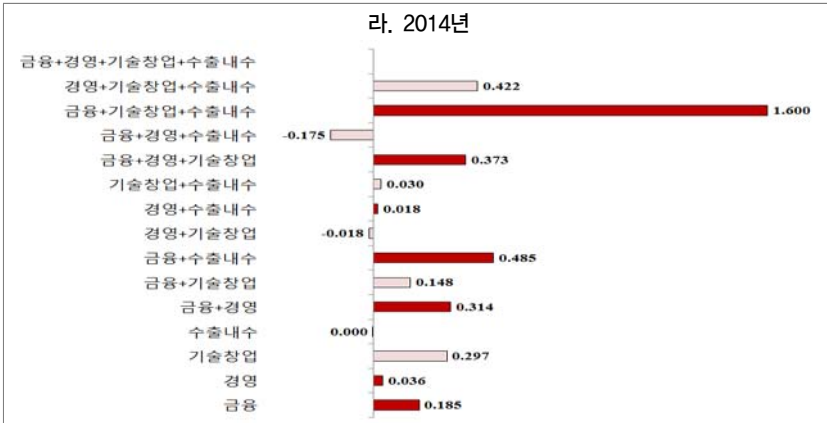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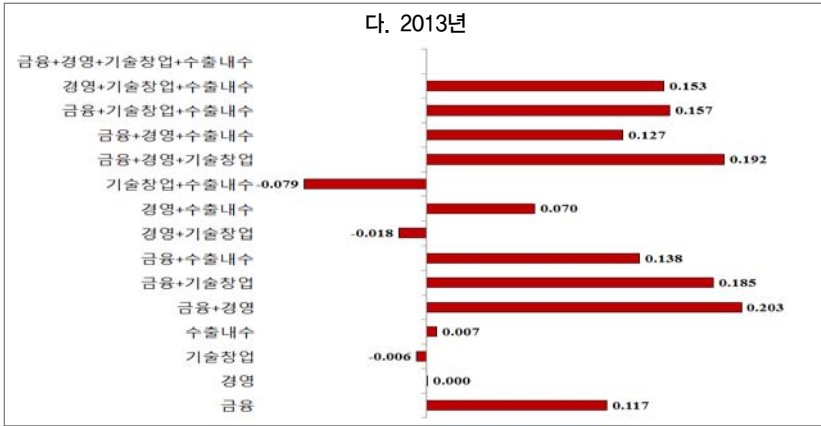
나. 분석결과

분석결과는 [그림 VI-8]~[그림 VI-11]에 보고되어 있다. 우선 매출액을 보면, 금융과의 조합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의 경우를 보면 금융만 단독으로 받은 기업들의 성과는 0.103인 반면, 금융+경영, 혹은 금융+기술·창업의 경우 0.116~0.121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다른 연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융만을 단독으로 지원받은 경우보다는 다른 사업과의 조합에서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I-8] 사업군 간 중복수혜에 따른 성과분석: 매출액



[그림 VI-8]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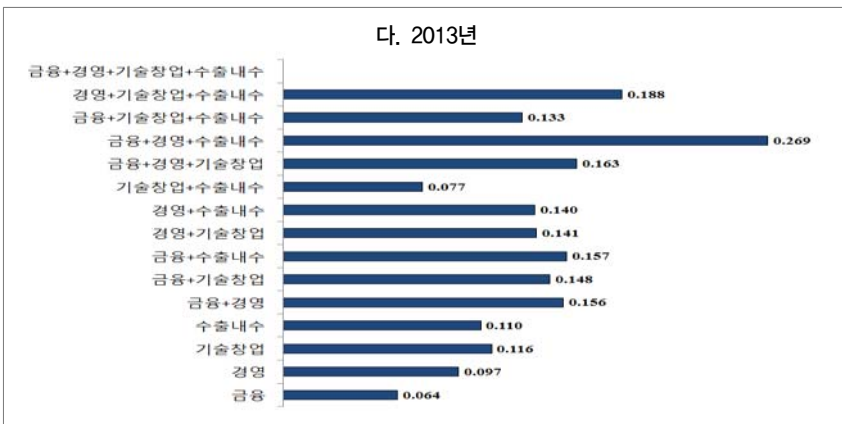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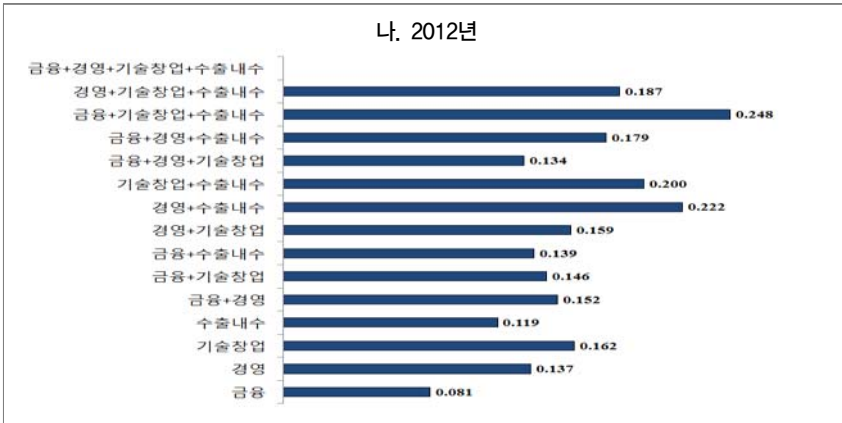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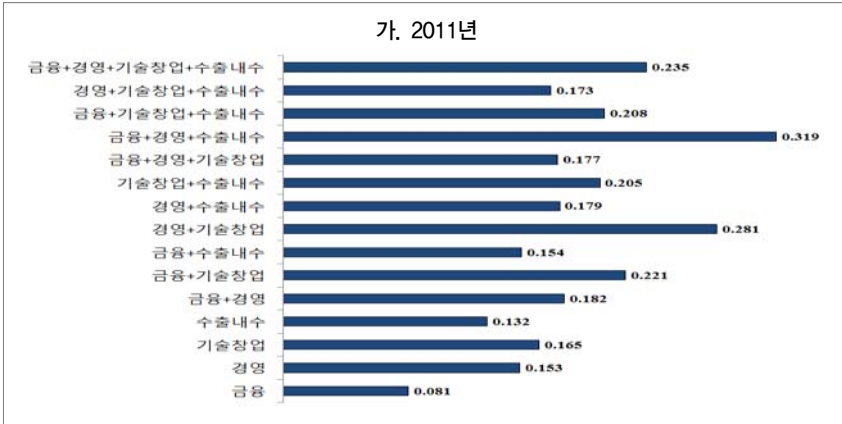


주: □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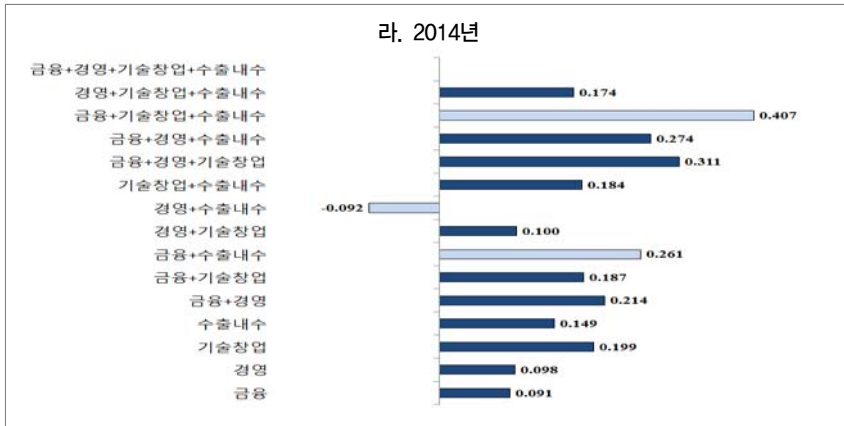
특히 3개 사업의 조합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가 당해 연도에 가장 좋은 매출액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경영+기술·창업+수출·내수’ 조합이 2012년의 경우 ‘금융+경영+수출·내수’ 조합이 2013년²⁴⁾의 경우 ‘금융+경영+기술·창업’이 2014년의 경우 ‘금융+기술·창업+수출·내수’ 조합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다.

24) 2013년의 경우에는 ‘금융+경영+수출·내수’ 조합보다는 ‘금융+경영’ 조합이 다소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9] 사업군 간 중복수혜에 따른 성과분석: 고용



[그림 VI-9]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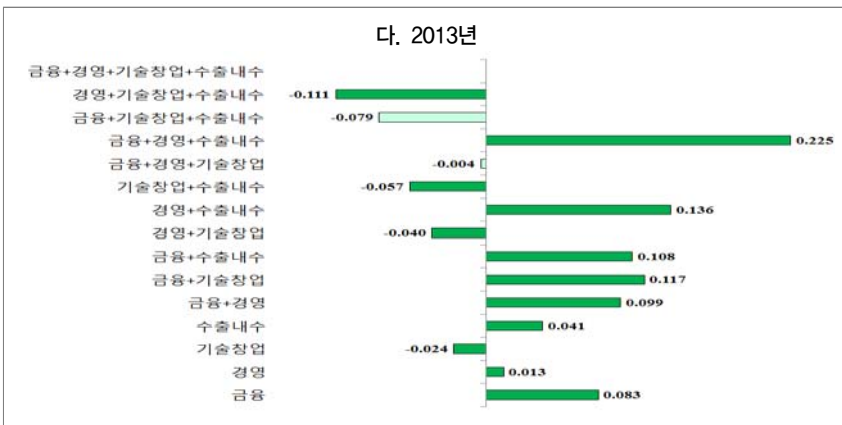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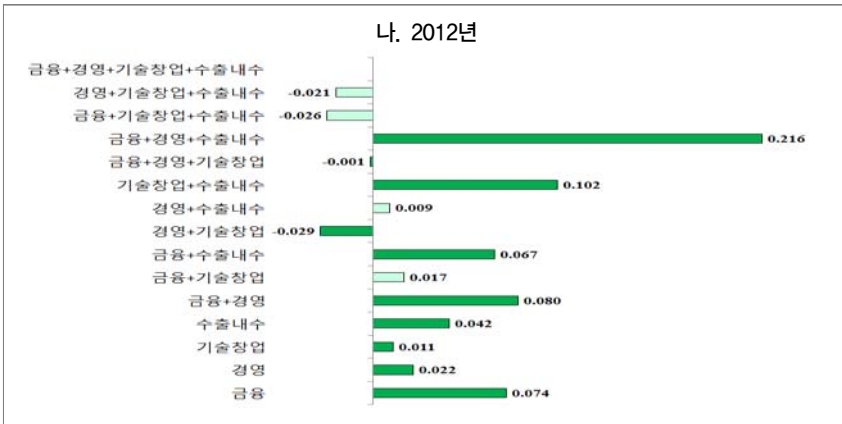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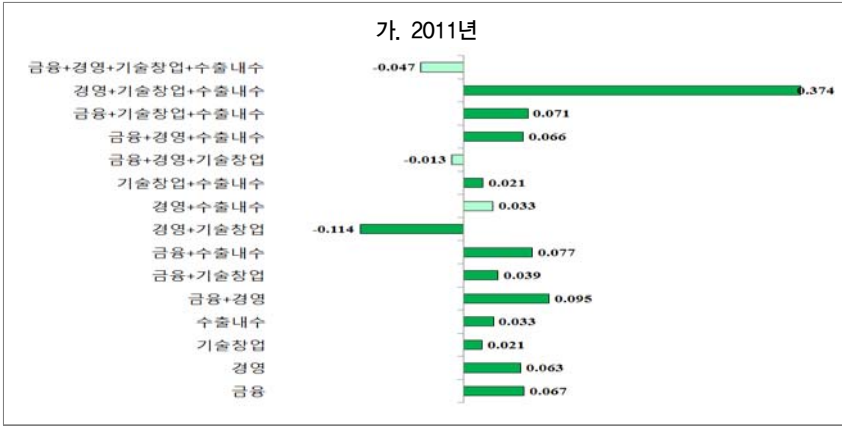
주: ■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고용의 경우 2014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 모두 단독사업 수혜보다는 중복수혜 기업들의 성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2011년에는 ‘경영+기술·창업+수출·내수’ 조합이, 2012년에는 ‘금융+경영+수출·내수’ 조합이, 2013년²⁵⁾에는 ‘금융+경영+기술·창업’ 조합이 고용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의 경우 ‘금융+기술·창업+수출·내수’, ‘경영+수출·내수’, ‘금융+수출·내수’ 조합 등은 통계적 유의성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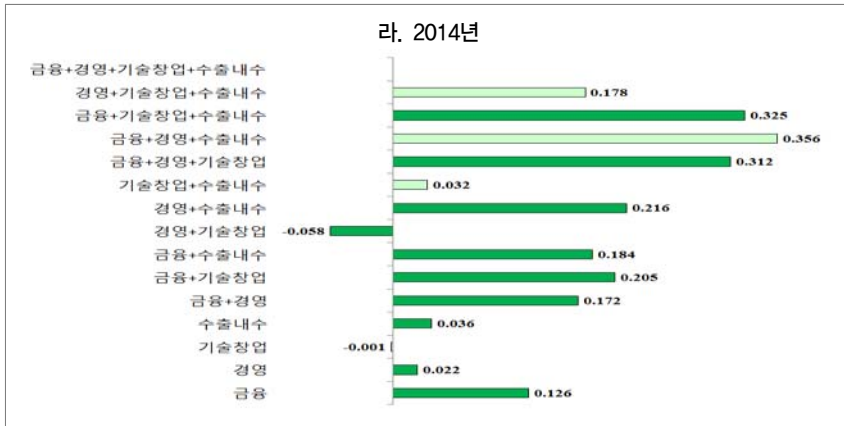
부가가치의 경우 매출액 및 고용과 달리 일부 조합에서 오히려 성과가 더 나빠지는 결과도 도출되었다. 2011년의 경우 경영+기술창업은 정책 효과감(-)의 값으로 추정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25) 2013년의 경우 ‘금융+경영+기술·창업’ 조합보다는 ‘금융+기술·창업’ 조합과 ‘금융+경영’ 조합이 다소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0] 사업군 간 중복수혜에 따른 성과분석: 부가가치



[그림 VI-10]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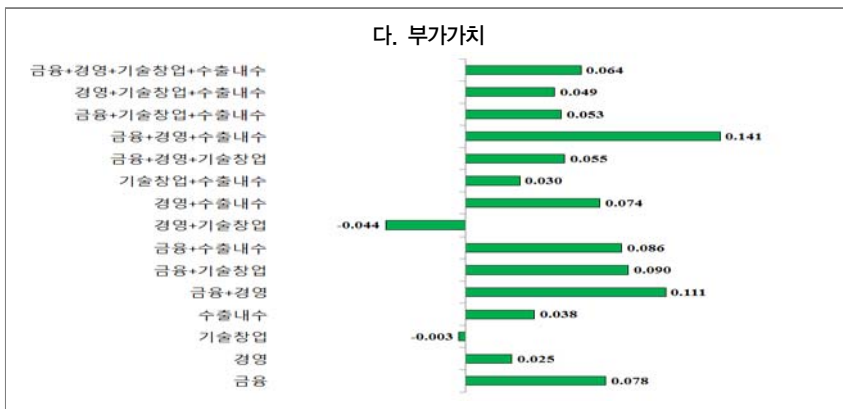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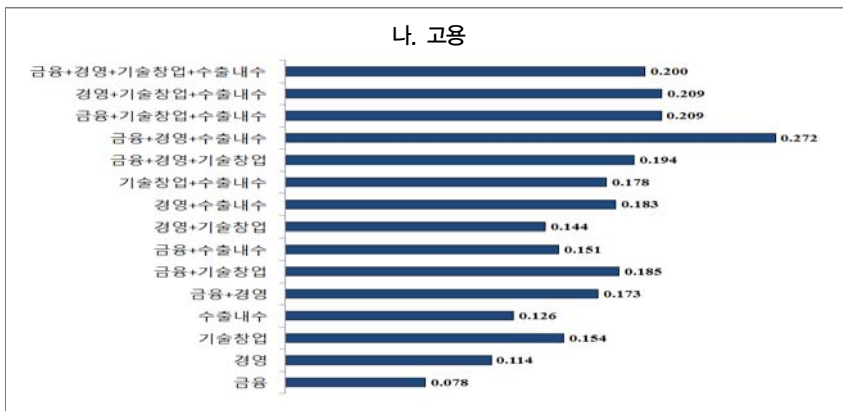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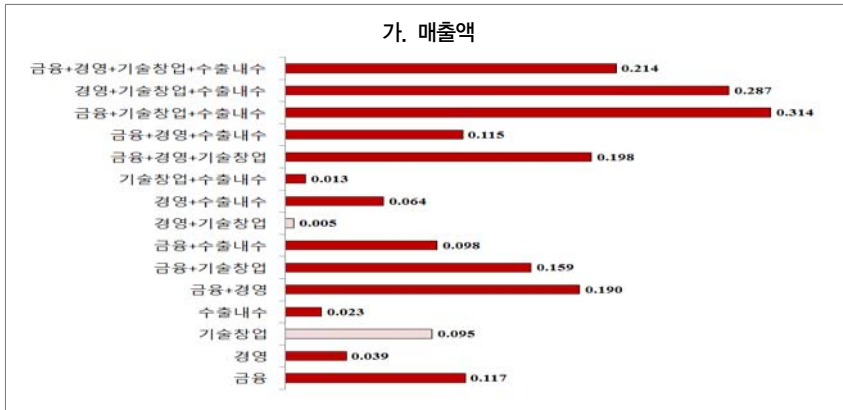
주: □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각 연도별로 추정된 결과들은 상이한 결과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성을 포착하기 어렵다. 때문에 이들을 모두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용은 단일사업수혜보다 중복수혜가 더 좋은 고용창출 효과를 보였고, 매출액의 경우 일부 조합(경영+기술·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수혜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⁶⁾ 부가가치 역시 ‘경영+기술·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중복수혜에서 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사업에 비해 성과가 개선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요약하면, 중복수혜가 기업의 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일반적 우려보다는 중복수혜가 기업의 성과를 돕는 방향으로 작동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성장단계에 맞추어 기업을 육성하는 로드맵 등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6) 경우에 따라서 정책 효과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창업+수출·내수’는 수출내수보다 정책 효과의 수치가 작다. 그러나 기준을 기술창업으로 둘 경우 기술창업 단독으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지만, ‘기술창업+수출·내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적절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군 조합별로 어떤 사업의 지원 규모가 더 많았는지를 포착하여 기준을 정하면 좋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림 VI-11] 사업군 간 중복수혜에 따른 성과분석: 통합분석(2011~2014)



주: □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8. 분석의 한계

먼저, 중소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지원이력과 기업데이터의 재무정보만을 이용하여, 국세청이 제공하고 있는 매출액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없었으므로, 중소기업 지원이력 전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동일 사업군 내에서 중복수혜 문제를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동일 연도에 동일 사업군에서 서로 다른 수행기관으로부터 정책수혜를 받은 기업의 경우 단일수혜로 간주하고 분석함으로써 중복수혜를 다루지 못했다. 다만, 중복과 관련하여 본 분석에서는 동일 연도에 서로 다른 사업군에서 수혜를 받은 경우 어떤 수혜조합을 받은 경우가 더 성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비용-편익의 분석의 경우 지원예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책 수혜에 대한 성과 분석에서는 강건성(robustness) 분석이 이루어진 반면,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강건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VII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및 한계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현황 및 기존 연구에서의 쟁점 정리를 출발점으로 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새로운 분류체계 개발과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거 연구에 비해 포괄적인 효과성 분석을 시도했다는 것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사업관리와 성과평가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새로운 분류체계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시도할 계획이다.

본 연구의 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는, 과거 연구에 비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업유형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매출액, 고용인원 수, 부가가치에 대해 지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유형별 지원금액에 비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더 커서, 비용 대비 효과성도 양호한 것으로 일차적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효과성도 지원시점에서 3년이 경과해도 대체로 사업의 효과성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 간 중복수혜도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 간 중복수혜가 긍정적이라는 것은,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필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경우, 사업의 효과가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다만 동일 사업유형 내의 중복수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동일 유형의 중복수혜 효과는 다음 연구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복수혜의 부정적인 측면은 기업의 실제 수요와 성과와 관계없이 동일 기업이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고 연명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은 동일 사업유형

내의 중복수혜의 효과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성 분석 결과, 다른 연구에 비해 양호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본 연구가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수혜기업을 보다 완벽히 선별할 수 있었다. 반면에 기존 연구들은, 특정 사업유형에만 집중하여 수혜·비수혜기업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비수혜기업 중에도 다른 유형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이 보다 완벽하게 식별되어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가 보다 극대화되어 식별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런 결과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수혜기업의 매출액 고용인원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보다 분명히 밝혀졌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시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매칭을 통해 유사한 속성을 가진 수혜 및 비수혜기업을 비교분석하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최대한 이러한 선택편의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통상적인 기업 특성 변수로 잡히지 않는 무형의 선택편의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다.

연구기간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체로도 과거 연구와 차별화되는 의미는 있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분류체계에 기반하여 사업유형별 지원 효과와 중복유형별 효과를 식별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존 분류체계에서는 금융지원 내에 다양한 성격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수단인 금융을 지원 영역으로 간주하여 분류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로 인해 실제 어떤 사업수단으로 어떤 영역에 대해 어떤 전달체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보다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활용한다면, 실증분석을

기반으로 보다 구체화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새로운 분류체계의 개발과 포괄적인 중소기업 수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각도의 효과성 분석이라는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일반적인 사업 정보와 더불어, 지원 목적(투입 요소지원, 시장매칭 지원, 컨설팅 및 정보 제공), 지원대상(규모, 업종, 기술 기준, 신용 기준 등), 지원수단(활동 및 수행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면, 지원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기반하여 자원배분과 신규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목적은 수혜기업에 대한 정보 생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어떤 관점에서 유형화해서 분석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류체계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사업 목적의 명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사업들 중에는 사업의 목적이 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던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본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사업의 목적과 초점을 명확히 하고 성과관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업 목적에 따라 어떠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중앙부처나 사업 수행기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분석이 가능하므로,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사업수단이 무엇인지도 평가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기존 사업을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게 되면, 기존 사업의 분절화, 중복 및 중첩문제 해소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 생산도 가능하다. 그리고 서비스 수행기관과 사업 정보의 연계를 통해, 실제 전달체계 분석을 위한 기본 정보 생산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의 실증 결과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필요에 따라 중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효과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자체의 효과성은 지원 이후 3년까지의

중단기적 시계에서는 존재한다고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조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보다 세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왜곡현상의 발생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한다. 수혜기업의 성과는 개선된다는 일차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자체를 제대로 논하기 위해서는,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차이만을 분석하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업의 사중손실, 대체효과 그리고 기타 시장 왜곡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차이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으나, 본 연구는 3년 시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성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지원사업의 종합적 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향후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와 결합하여 보다 완결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동수·송준혁, 「정책금융과 고용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Vol. 18, No.1, 한국금융연구원, 2012, pp. 133~194.
- 구정환·김영도·이시연, 『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와 효과 분석』, KIF 정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15.
- 권선주 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분석: 기업미시자료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19권 제6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6, pp. 2571~2590.
- 김락상 외,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정보화정책 성과평가 시점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집』, Vol. 10, No. 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 pp. 872~876.
- 김세중·김용성·백훈 외, 『2010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군 I, II』,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중소기업연구원·경제사회정책평가연구원, 2010.
- 김세중·홍성철,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경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0.
- 김은영 외,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활용성과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7권 제2호, 무역연구원, 2011, pp. 271~292.
- 김찬수·오윤섭, 『공공부문 유사중복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이슈』, 연구보고서, 감사원 감사연구실, 2013.
- 김현욱,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수익성 개선효과」, 『한국개발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2005, pp. 45~87.
- 기재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중소기업 해외수출지원사업군 심층평가』, 2014.
- 노용환·주무현, 「중소기업 정책자금 고용효과의 지속성 분석」, 『중소기업연구』, Vol. 34, No. 2, 한국중소기업학회, 2012, pp. 47~66.

- 노용환·홍성철, 「한국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연구: 사업체수준 통합자료 분석」, 『통계연구』, 제16권 제2호, 통계청, 2011, pp. 82~109.
- 박광서 외,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기업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제14권 제2호,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0, pp. 1~25.
- 박문수 외,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지원정책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pp. 197~218.
- 서울대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분석 및 차별화 방안 연구』, 2012.
- 위병량,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성과 분석과 그 시사점(2003-2012):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개혁리포트』, 2004-10호, 경제개혁연구소, 2014, pp. 20~31.
- 이민호,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의 유형별 효과 분석 : 중복시점과 기관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4)』, 2008, pp. 675~701.
- 이병헌 외,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고찰: 기술혁신 관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1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6, pp. 107~138.
- 이상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 분석」, 『GRI 연구논총』, 제16권 제2호, 2014, pp. 123~150.
- 이상엽 외,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이재현 외, 「중소기업 지원실태와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Vol. 9, No. 7, 한국콘텐츠학회, 2009, pp. 333~341.
- 이철승·이윤철,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협업동기·유형에 관한 사례연구」, 『창조와 혁신』, 제9권 제1호,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2016, p. 118.
- 장영순·김주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과 성장단계에 따른 애로요인의 실증적 연구』, 대한산업공학회, 2007.
- 장우현, 「중소기업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세미나 발표

- 자료, 2014.11.17.
- 장우현·양용현·우석진,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 한국개발연구원, 2013.
- _____,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I)』, 연구보고서 2014-10, 한국개발연구원, 2014.
- 정용우 외, 「국내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유통과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유통과학회, 2010, pp. 33~44.
- 조덕희, 『중소기업의 성장구조 및 혁신역량 분석』, 산업연구원, 2005.
- 조현영, 『중소기업 창업·성장단계 판별모형 및 창업 특성에 관한 연구』, 신용보증기금, 2008.
- 중소기업연구원, 『수출기업 실태조사 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2016.
- 중소기업청, 「제2차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2016. 3. 30.
- _____,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3차구축, 전자정부지원사업 제 안요청서」, 정책분석과, 2015.
- 최세경·오철호·이정희·장현주·신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정당성과 정부 역할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중소기업연구원, 2015.
- 표한형·오동윤·박태수, 『수출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출결정요인 및 애 로요인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1.
- 홍성철·백훈, 『중소기업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중소기업연 구원, 2012.
- 홍성철·표한형, 『중소·중견기업 성장경로 분석 : 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 도출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2013.
- 홍운선, 『중소기업 지원기관 성과평가체계 마련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4.
- 홍운선·이형철,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중소기업정책연구』, 제1권, 제1호, 2013, pp. 31~51.

- Cadot, O., Fernandes, A. M., Gourdon, J. and Mattoo, A., “Are the benefits of export support durable? Evidence from Tunisi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97, 2015, pp. 310~324.
- Carrie, A. S., “From integrated enterprises to regional clusters: the changing basis of competition,” *Computers in Industry*, Vol. 42, No. 2, 2000, pp. 289~298.
- Gu, Q., Karoly, L. A. and Zissimopoulos, J., “Small Business Assistance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Working Paper WR-603-EMKF, Santa Monica, CA: Kauffman-RAND Institute for Entrepreneurship Public Policy, 2008.
- Holland, P. W., “Statistics and Causal Inference,”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81, No. 396, 1986, pp. 945~960.
-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 OECD Publishing, Paris, 2016.
- UNESCAP, *Policy Guidebook for SME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2012.

〈웹사이트 및 기타자료〉

- 국가법령센터, 「중소기업기본법」, 검색일자: 2016. 5. 10.
- _____,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검색일자: 2016. 5. 10.
- _____,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검색일자: 2016. 5. 10.
- 기획재정부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업중심으로 바뀐다」, 보도자료, 2012. 7. 30.
- 미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담당자 면담 내용, 면담일자 : 2016. 10. 11.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범위개편」, 보도자료, 2013.
- _____,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5.
- _____, 「제2차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2016. 3. 30.

_____, 기업마당 홈페이지, <http://www.bizinfo.go.kr>, 검색일자: 2016. 4. 27.
~10.17.

중소기업청·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부자료.

_____,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책코드 매뉴얼(2015. 12.)』, 내부자료.

_____, 『중소기업 지원예산 기준 작성 매뉴얼』, 내부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검색일자: 2016. 7. 29.

한국기업데이터, 「KED」, 검색일자: 2016. 7. 16. ~ 9. 3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속성정보 분류체계(안)』, 내부
자료.

부 록

〈부록 1〉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류체계 및 정보 입력 방법

1. 입력대상 및 활용자료

- 입력대상 : 2016년 각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 활용자료 : 2016년 각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업 설명서」참고

2. 분류체계 설정 및 입력 방법

1) 분류체계 설정

-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류체계 카테고리리는 법령, 기존의 기준, 재정사업 속성정보 분류체계 등을 준용하여 대략적인 프레임을 설정한 후,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업설명서」등을 활용하여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하였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내용을 분류하기 위해 먼저 GOAL, TARGET, ACTIVITY라는 큰 카테고리를 설정함.
- (GOAL)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 분야를 카테고리화하여 지원 분야를 초기 투입요소와 내수 및 수출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 여부, 운영방법 3가지로 분류하였음.
 - (초기 투입요소)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어떤 분야를 지원하는지 분류한 것으로 이는 개별 지원사업의 목적(~을 위해 사업 수행)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음. 초기 투입요소의 하위 카테고리로 운영자금, 자재, 인력, 기술, 장비/시설, 공간/입지로 구분하였음.
 - (MATCHING) 내수와 수출로 구분하여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내수에 중점을 두는지 수출에 중점을 두는지 구분하여 입력함.

- (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무엇을 위해 수행되는지에 따라 하위 카테고리로 경영컨설팅, 상품화/사업화, 홍보 3가지로 설정함.
- (TARGET)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타깃당한 지원대상을 의미함. 타깃팅 내용으로 기업규모, 기업의 업력 및 성장단계, 산업 및 업종, 기업 특화 특성, 기술기준, 시용 및 사업자 기준으로 구분하였음.
- (ACTIVITY)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동 (ACTIVITY)과 사업 수행방식(Method of intervention)으로 구분하였음.

2) 사업의 기본 내용 입력

- 2016년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사업설명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도의 세부 정보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류체계 엑셀파일 양식에 입력
- 먼저 2016년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사업설명서」 내역사업명 번호와 엑셀파일의 내역사업 id를 연결시켜 사업의 기본 내용 입력 실시
- 「사업설명서」의 〈사업개요〉내용을 바탕으로 GOAL(지원분야) 카테고리 내용 입력
 - 해당 지원사업이 6가지 초기 투입요소 중에서 어떤 것을 위한 것인지 〈사업개요〉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함. 그 사업이 운영자금을 위한 사업인지 인력을 위한 사업인지 기술을 위한 사업인지를 구분해 해당 카테고리에 입력. 이때 하나의 사업이라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초기 투입요소에 중복 입력 가능
- 「사업설명서」의 〈지원대상〉 내용을 기반으로 TARGET 분야의 내용 입력
 - 해당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입력하게 됨.
- 「사업설명서」의 〈지원규모〉, 〈지원내용〉, 〈처리절차〉 내용을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활동 카테고리 입력함.
 - 해당사업 세부 활동을 파악하여 그 사업이 운영자금 및 시설/장비

등의 투입요소를 제공하는 것인지, 교육/훈련이나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실천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인지, 네트워크의 제공 및 홍보를 통해 기업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것인지, 기업의 인프라를 제공하려는 사업인지 파악하여 해당 카테고리에 입력함.

- 그리고 사업의 수행방식의 주체를 중앙정부와 수행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원사업방식이 투자, 용자, 보조금 지급 등의 자금지원방식을 사용하는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 세부 내용을 입력함.

3.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류체계 구성 항목

〈부록 표-1〉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류체계의 구성 항목

| 구분 | | | | |
|---------|-----------|-----------|-----------|------|
| GOAL | 초기 투입요소 | | 운영자금 | |
| | | | 자재 | |
| | | | 인력 | |
| | | | 기술 | |
| | | | 장비 / 시설 | |
| | | | 공간 / 입지 | |
| | matching | | 내수 | |
| | | | 수출 | |
| | 운영 | | 경영컨설팅 | |
| | | 상품화 / 사업화 | | |
| | | 홍보 | | |
| TARGET | 기업규모 | 일반규모 | 법적규모 | |
| | | | 매출액 | |
| | | | 상시 근로자 수 | |
| | | 수출규모 | 수출액 | |
| | | | 수출비중 | |
| | | | 수출기반 | |
| | 업력 및 성장단계 | | 업력기준 | |
| | | | 성장단계 | |
| | | | 고성장단계 | |
| | 산업 및 업종 | | 일반업종 | |
| | | | 산업기준 | |
| | 기업특화 특성 | 정부특정기업 | | 자격기준 |
| | | | | 분야기준 |
| 보호대상 기업 | | | 사회적 약자 관련 | |
| | | | 기업조건 | |

〈부록 표-1〉의 계속

| 구분 | | | | |
|--------|----------------|---------|------------|---------|
| | 기술기준 | 기술 및 설비 | 기술기준 | |
| | | | 설비 및 제품기준 | |
| | 신용 및 사업자 기준 | 신용 및 자격 | 신용 및 투자 기준 | |
| | | | 위기기준 | |
| | | 사업자 기준 | 등록 여부 | |
| | | | 사업자 기준1 | |
| | | | 사업자 기준2 | |
| | | | 투입요소 제공 | |
| | ACTIVITY | 활동 | | 실천역량 강화 |
| | | | | 영향력 제고 |
| 인프라 제공 | | | | |
| 자금 지원 | | | | |
| 수행방식 | | 중앙정부 | 직접 서비스 | |
| | | | 간접 서비스 | |
| | | 수행기관 | 자금 지원 | |
| | | | 직접 서비스 | |

자료: 저자 작성

〈부록 2〉 사업군 중복수혜의 조합

- 사업군 중복수혜의 타입(type)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혜 사업군 수별 조합을 분석함.
- 단일 사업군 수혜의 경우 금융부문이 65%로 가장 많음.

〈부록 표-2〉 중복수혜 부문별 조합 및 비중: 단일사업군 수혜

(단위: 개, %)

| 구분 | 부문 | 기업 수 | 기업 수 비중 (단일사업군 수혜) | 기업 수 비중 (전체사업중) |
|-----|----|---------|-----------------------|--------------------|
| 1순위 | 금융 | 279,902 | 65.51 | 55.2 |
| 2순위 | 인력 | 76,900 | 18.00 | 15.2 |
| 3순위 | 경영 | 41,641 | 9.75 | 8.2 |
| 4순위 | 기술 | 13,867 | 3.25 | 2.7 |
| 5순위 | 수출 | 9,141 | 2.14 | 1.8 |
| 6순위 | 창업 | 4,468 | 1.05 | 0.9 |
| 7순위 | 내수 | 1,379 | 0.32 | 0.3 |
| 계 | - | 427,298 | 100.00 | 84.3 |

주: 사업군 기준, 2014년 중앙정부 사업대상.

자료: 통합관리시스템

- 2사업군 수혜기업의 경우, 47.76%는 금융-인력, 37.31%는 금융-경영 사업군의 중복수혜를 받았으며, 금융사업군을 포함한 사업군 조합이 전체의 92.4%.

〈부록 표-3〉 중복수혜 부문별 조합 및 비중: 2사업군 수혜

(단위: 개, %)

| 구분 | 부문 1 | 부문 2 | 기업 수 | 기업 수 비중 (2사업군수혜) | 기업 수 비중 (전체사업중) |
|-----|------|------|--------|---------------------|--------------------|
| 1순위 | 금융 | 인력 | 25,886 | 47.76 | 5.1 |
| 2순위 | 금융 | 경영 | 20,218 | 37.31 | 4.0 |
| 3순위 | 금융 | 기술 | 1,752 | 3.23 | 0.3 |
| 4순위 | 인력 | 경영 | 1,449 | 2.67 | 0.3 |
| 5순위 | 금융 | 수출 | 1,275 | 2.35 | 0.3 |

〈부록 표-3〉의 계속

| 구분 | 부문 1 | 부문 2 | 기업 수 | 기업 수 비중 (2사업군수혜) | 기업 수 비중 (전체사업중) |
|-----|------|------|--------|---------------------|--------------------|
| 6순위 | 금융 | 창업 | 948 | 1.75 | 0.2 |
| 7순위 | 인력 | 수출 | 810 | 1.49 | 0.2 |
| 기타 | - | - | 1,857 | 3.43 | 0.4 |
| 계 | - | - | 54,195 | 100.00 | 10.7 |

주: 사업군 기준, 2014년 중앙정부 사업대상.

자료: 통합관리시스템

〈부록 표-4〉 중복수혜 부문별 조합 및 비중: 3사업군 수혜(2014년)

(단위: 개, %)

| 구분 | 부문 1 | 부문 2 | 부문 3 | 기업 수 | 기업 수 비중 (2사업군수혜) | 기업 수 비중 (전체사업중) |
|-----|------|------|------|--------|---------------------|--------------------|
| 1순위 | 금융 | 인력 | 경영 | 7,229 | 47.80 | 1.4 |
| 2순위 | 금융 | 기술 | 인력 | 2,211 | 14.62 | 0.4 |
| 3순위 | 금융 | 인력 | 수출 | 1,893 | 12.52 | 0.4 |
| 4순위 | 금융 | 기술 | 경영 | 635 | 4.20 | 0.1 |
| 5순위 | 금융 | 인력 | 창업 | 532 | 3.52 | 0.1 |
| 6순위 | 금융 | 수출 | 경영 | 346 | 2.29 | 0.1 |
| 7순위 | 기술 | 인력 | 수출 | 342 | 2.26 | 0.1 |
| 기타 | - | - | - | 1,935 | 12.80 | 0.4 |
| 계 | - | - | - | 15,123 | 100.00 | 3.0 |

주: 사업군 기준, 2014년 중앙정부 사업대상.

자료: 통합관리시스템

〈부록 표-5〉 중복수혜 부문별 조합 및 비중: 4사업군 수혜(2014년)

(단위: 개, %)

| 구분 | 부문 1 | 부문 2 | 부문 3 | 부문 4 | 기업 수 | 기업 수 비중 (2사업군수혜) | 기업 수 비중 (전체사업중) |
|-----|------|------|------|------|-------|---------------------|--------------------|
| 1순위 | 금융 | 기술 | 인력 | 경영 | 2,517 | 36.72 | 0.5 |
| 2순위 | 금융 | 인력 | 수출 | 경영 | 1,424 | 20.77 | 0.3 |
| 3순위 | 금융 | 기술 | 인력 | 수출 | 1,254 | 18.29 | 0.2 |
| 4순위 | 금융 | 기술 | 인력 | 창업 | 234 | 3.41 | 0.0 |
| 5순위 | 금융 | 인력 | 창업 | 경영 | 228 | 3.33 | 0.0 |
| 6순위 | 기술 | 인력 | 수출 | 경영 | 182 | 2.65 | 0.0 |

〈부록 표-5〉의 계속

| 구분 | 부문 1 | 부문 2 | 부문 3 | 부문 4 | 기업 수 | 기업 수 비중 (2사업군수혜) | 기업 수 비중 (전체사업중) |
|-----|------|------|------|------|-------|---------------------|--------------------|
| 7순위 | 금융 | 기술 | 창업 | 경영 | 174 | 2.54 | 0.0 |
| 기타 | - | - | - | - | 842 | 12.28 | 0.2 |
| 계 | - | - | - | - | 6,855 | 100.00 | 1.4 |

주: 사업군 기준, 2014년 중앙정부 사업대상.
 자료: 통합관리시스템

〈부록 표-6〉 중복수혜 부문별 조합 및 비중: 5사업군 수혜(2014년)

(단위: 개, %)

| 구분 | 부문1 | 부문2 | 부문3 | 부문4 | 부문5 | 기업 수 | 기업 수 비중 (2사업군수혜) | 기업 수 비중 (전체사업중) |
|-----|-----|-----|-----|-----|-----|-------|---------------------|--------------------|
| 1순위 | 금융 | 기술 | 인력 | 수출 | 경영 | 2,292 | 68.97 | 0.45 |
| 2순위 | 금융 | 기술 | 인력 | 창업 | 경영 | 271 | 8.16 | 0.05 |
| 3순위 | 금융 | 인력 | 수출 | 내수 | 경영 | 159 | 4.78 | 0.03 |
| 4순위 | 금융 | 기술 | 인력 | 수출 | 내수 | 149 | 4.48 | 0.03 |
| 5순위 | 금융 | 기술 | 인력 | 내수 | 경영 | 103 | 3.10 | 0.02 |
| 6순위 | 금융 | 기술 | 인력 | 수출 | 창업 | 69 | 2.08 | 0.01 |
| 7순위 | 금융 | 인력 | 수출 | 창업 | 경영 | 58 | 1.75 | 0.01 |
| 기타 | - | - | - | - | - | 222 | 6.68 | 0.04 |
| 계 | - | - | - | - | - | 3,323 | 100.00 | 0.66 |

주: 사업군 기준, 2014년 중앙정부 사업대상.
 자료: 통합관리시스템

〈부록 3〉 성장단계 객관적 기준 설정을 위한 문헌조사

1. 중소기업 성장단계에 관한 기존 연구

- 중소기업 성장단계를 구분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4단계 성장과정(창업 → 성장 → 성숙 → 전환)을 따른다고 동의하며, 각 단계별로 서로 다른 경영전략과 조직구조 등을 갖춘다고 간주함
-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있어선 연구자별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이는 기업을 정의하는 방법에 있어 서로 상이한 접근방법을 취하기 때문임²⁷⁾
- 각 성장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상황적 차원(contextual dimension)과 구조적 차원(structural dimension)으로 구분 가능(Carrie, 2000)²⁸⁾
 - 상황적 차원: 업력, 규모, 성장률, 주요전략, 당면문제, 경영문제 등
 - 구조적 차원: 경영형태, 조직구조, 통제시스템, 경영진 구성, 리더십 스타일, 문화 등

2. 중소기업 성장단계 식별에 관한 방법론

- 성장단계를 식별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취할 수 있음
 - ① 성장방정식 수립: 업력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여 산업별·기업규모별로 3, 4차 성장방정식을 수립해 성장단계 구분
〈대표사례〉 백훈·홍성철, 『중소기업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2

27) 노용환 외(2011), p. 83; 노용환·홍성철, 「한국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연구: 사업체 수준 통합자료 분석」, 『통계연구』, 제16권 제2호, 통계청, 2011, p. 83.

28) Carrie(2000), 이철승 외(2016), p. 118에서 재인용

$$Q_i = \beta_0 + \beta_1 t_i + \beta_2 t_i^2 + \beta_3 t_i^3 + \beta_4 t_i^4 + Z_i \gamma + \varepsilon_i$$

(Q_i 는 개별기업 i 의 성장지표[1인당 평균생산액(생산액/종업원 수)], t_i 는 개별기업 i 의 업력, Z_i 는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군(노동, 자본 등), ε_i 는 오차항, β 와 γ 는 추정해야할 파라미터 벡터)

- 창업 및 성장기: 창업 후 8~9년, 1인당 생산 및 1인당 부가가치 연 8%
- 성숙 및 정체기: 업력 10~19년, 1인당 생산 및 1인당 부가가치 연 0.5%
- 재도약기: 창업 후 20년 이후, 1인당 생산 및 1인당 부가가치 연 3%

사용 Data: 통계청_광업제조업 통계자료 2005~2007년

② 성장(생태)단계 판별식 수립: 재무변수 중심 기본로직으로 모형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판별

<대표사례> 조현영, 『중소기업 창업·성장단계판별모형 및 창업특성에 관한 연구』, 신용보증기금, 2008

- 창업 → 성장: 손익분기점을 100% 이하, 매출액성장률 15% 이상
- 성장 → 성숙: 손익분기점을 100% 이하 & 한계감소 경향, 매출액성장률 15% 이하 & 감소추세

사용 Data: 1990~2006년 코딩 보유 기업 데이터

③ 성장경로 matrix 수립: 종업원 수 및 창업 이후 업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네 가지 유형(창업초기 기업군, 고성장 기업군, 성숙단계 기업군, 성장정체 기업군)으로 구분하여 안정성장경로 도출

<대표사례> 조덕희, 『중소기업의 성장구조 및 혁신역량 분석』, 산업연구원, 2005

- 창업초기 기업군: 업력 10년 미만, 종업원 수 50인 미만
- 고성장 기업군: 업력 10년 미만, 종업원 수 50인 이상
- 성숙단계 기업군: 업력 10년 이상, 종업원 수 50인 이상
- 성장정체 기업군: 업력 10년 이상, 종업원 수 50인 미만

창업초기 기업군과 성숙단계 기업군에 속한 기업이 대체로 '안정성장경로' 상에 있다고 봄

사용 Data: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통계 D/B (1994~2003년)

- 각 방법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속한 산업과 기업규모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성장추이를 보인다는 것을 감안하고, 각각의 방법론이 기업 성장의 평균적인 흐름을 나타낼 뿐이므로 각 기업이 속한 집단의 상황적·구조적 특성을 구분하여 기업의 성장단계 수준을 유추해야 할 것임.

〈부록 표-7〉 성장단계 관련 연구 요약

| No. | 생산 년도 | 제목 | 발행처 | 저자 | 사용 Data | 자료 출처 | 방법론 | 구분법 | 시사점 |
|-----|----------|---|----------------------------------|------------|-------------------------|-----------------------------------|-----------|--|--|
| 1 | 2012 | 중소기업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중소기업 연구원 | 백훈 홍성철 | 업력 1인당 생산액 생산액 | 통계청 광업제 조인 2005~ 2007 | 성장 방정식 | $Q_t = \beta_0 + \beta_1 t + \beta_2 t^2 + \beta_3 t^3 + \beta_4 t^4 + Z_t \gamma + \varepsilon_t$ <p>(Q는 개별기업 i의 성장지표[1인당 평균생산성(생산액)/종업원 수], t는 개별기업 i의 연력, Z는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군, δ는 오차항, β와 γ는 추정해야 할 파라미터 벡터)</p> <p>창업 및 성장기: 창업 후 8~9년, 1인당 생산 및 1인당 부가가치 연 8%</p> <p>성숙 및 정체기: 연력 10~19년, 1인당 생산 및 1인당 부가가치 연 0.5%</p> <p>재도약기: 창업 후 20년 이후, 1인당 생산 및 1인당 부가가치 연 3%</p> | 각 단계별 소요시간은 산업별·기업규모별 등 기업 속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 |
| 2 | 2011 | 한국 중소제조 연구의 성장경로 연구: 사업체 수준 통합자료 분석 | 통계청 「통계 연구」 제16권 제2호 | 노용환 홍성철 | . | . | 실 문 | <p>대표사례 : 중소기업청 주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p> <p>창업기: 회사를 창업하고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 초기성장: 지사 최초의 대표제품·서비스를 출시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 고속성장: 후속 신규제품·서비스도 출하되어 매출이 증가하고 시장이 다각화되는 단계 성숙기: 중견기업으로 안정화되거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단계 쇠퇴기: 뚜렷한 매출상과 향상 없이 기업활동이 정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p> | 『2009년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근거한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업력 분포에 의하면, 전체 표본 3,630개 중 자사가 생 각하는 성장단계는 창업기 6.5%, 초기성장기 38.3%, 고속성장기 47.4%, 성숙기 6.1%, 쇠퇴기 1.7%로 답함. 조사대상 기업의 평균 업력은 7.9년으로, 창업기 2.05년, 초기성장기 4.94년, 고속성장기 9.91년, 성숙기 15.62년으로 조사됨 |

〈부록 표-7〉의 계속

| No. | 생산 년도 | 제목 | 발행처 | 저자 | 사용 Data | 자료 출처 | 방법론 | 구분법 | 시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력 기업 규모 1인당 생산성 1인당 부가 가치 | | 기술 통계 | 업력에 따른 구분: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에 수록된 제조업체 재무자료 활용 창업·성장기: 창업 후 약 8년, 1인당 생산 및 1인당 부가가치 연 8% 정체기: 창업·성장기 후 약 9년, 1인당 생산 및 1인당 부가가치 연 0.5% 재도약기: 창업 후 18년 이후, 1인당 생산 및 1인당 부가가치 연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2011 | 수출중소 기업의 성장 단계별 수출결정 요인 및 애로요인 연구 | 중소기업 연구원 | 표한행 오동훈 박태수 | | | 설 문 | 수출기업의 성장단계별 기본 통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성장단계</th> <th>창업기</th> <th>초기 성장기</th> <th>고도 성장기</th> <th>성숙기</th> <th>쇠퇴기</th> </tr> </thead> <tbody> <tr> <td>평균 근로자수 (명)</td> <td>3.9</td> <td>15.8</td> <td>41</td> <td>42.7</td> <td>19</td> </tr> <tr> <td>평균 매출액 (백만원)</td> <td>606.4</td> <td>4,202.7</td> <td>10,735.9</td> <td>14,942.7</td> <td>2,729.6</td> </tr> <tr> <td>평균 업력(년)</td> <td>2.9</td> <td>7.7</td> <td>13.3</td> <td>18.9</td> <td>14.4</td> </tr> </tbody> </table> | 성장단계 | 창업기 | 초기 성장기 | 고도 성장기 | 성숙기 | 쇠퇴기 | 평균 근로자수 (명) | 3.9 | 15.8 | 41 | 42.7 | 19 | 평균 매출액 (백만원) | 606.4 | 4,202.7 | 10,735.9 | 14,942.7 | 2,729.6 | 평균 업력(년) | 2.9 | 7.7 | 13.3 | 18.9 | 14.4 | 학과와 실무에서는 설문조사에 의한 응답자 답변을 통해 성장단계를 구분하는 방법론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 성장단계 | 창업기 | 초기 성장기 | 고도 성장기 | 성숙기 | 쇠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균 근로자수 (명) | 3.9 | 15.8 | 41 | 42.7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균 매출액 (백만원) | 606.4 | 4,202.7 | 10,735.9 | 14,942.7 | 2,729.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균 업력(년) | 2.9 | 7.7 | 13.3 | 18.9 |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 표-7〉의 계속

| No. | 생산 년도 | 제목 | 발행처 | 저자 | 사용 Data | 자료 출처 | 방법론 | 구분법 |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2010 |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경로 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 연구원 | 김세중 홍성철 | 업력 1인당 생산액 | | 성장 방정식 | $Q_i = \beta_0 + \beta_1 t_i + \beta_2 t_i^2 + \beta_3 t_i^3 + \varepsilon_i$ <p>(Q_i는 개별기업 i의 성장지표[1인당 평균생산액(생산액/종업원 수)], t_i는 개별기업 i의 업력, ε_i는 오차항)</p> <p>성장경로 분석결과</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창업기 (1~5년)</th> <th>성장기 (6~9년)</th> <th>장성기 (10~20년)</th> <th>제도약기 (20년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기본방향</td> <td>창업지원 을 통한 성공률 제고</td> <td>원활한 국내외 시장 진입 지원</td> <td>장성기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역량 확충</td> <td>자생적 성장환경 조성</td> </tr> <tr> <td>생산성 증가율</td> <td>10.90</td> <td>2.83</td> <td>0.41</td> <td>4.20</td> </tr> <tr> <td>중요소 생산성</td> <td>0.3734</td> <td>0.3505</td> <td>0.3263</td> <td>0.3243</td> </tr> <tr> <td>지분 장비율</td> <td>0.2660</td> <td>0.3039</td> <td>0.3512</td> <td>0.3243</td> </tr> <tr> <td>구간 생존율</td> <td>77</td> <td>47</td> <td>19</td> <td>5</td> </tr> <tr> <td rowspan="2">핵심정책</td> <td>창업지원</td> <td>인력지원</td> <td>R&D지원</td> <td>M&A</td> </tr> <tr> <td>세계지원</td> <td>판로지원</td> <td>사업지원 (M&A)</td> <td>글로벌화</td> </tr> <tr> <td rowspan="2">보조정책</td> <td>자금지원</td> <td>지급지원</td> <td>수출지원</td> <td>졸업기업 지원</td> </tr> <tr> <td>인력지원 (생산)</td> <td>경영컨설팅 팀</td> <td>경영컨설팅 인력지원 (R&D)</td> <td>R&D지원</td> </tr> </tbody> </table> | 구분 | 창업기 (1~5년) | 성장기 (6~9년) | 장성기 (10~20년) | 제도약기 (20년 이후) | 기본방향 | 창업지원 을 통한 성공률 제고 | 원활한 국내외 시장 진입 지원 | 장성기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역량 확충 | 자생적 성장환경 조성 | 생산성 증가율 | 10.90 | 2.83 | 0.41 | 4.20 | 중요소 생산성 | 0.3734 | 0.3505 | 0.3263 | 0.3243 | 지분 장비율 | 0.2660 | 0.3039 | 0.3512 | 0.3243 | 구간 생존율 | 77 | 47 | 19 | 5 | 핵심정책 | 창업지원 | 인력지원 | R&D지원 | M&A | 세계지원 | 판로지원 | 사업지원 (M&A) | 글로벌화 | 보조정책 | 자금지원 | 지급지원 | 수출지원 | 졸업기업 지원 | 인력지원 (생산) | 경영컨설팅 팀 | 경영컨설팅 인력지원 (R&D) | R&D지원 | |
| 구분 | 창업기 (1~5년) | 성장기 (6~9년) | 장성기 (10~20년) | 제도약기 (20년 이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방향 | 창업지원 을 통한 성공률 제고 | 원활한 국내외 시장 진입 지원 | 장성기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역량 확충 | 자생적 성장환경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성 증가율 | 10.90 | 2.83 | 0.41 | 4.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요소 생산성 | 0.3734 | 0.3505 | 0.3263 | 0.32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분 장비율 | 0.2660 | 0.3039 | 0.3512 | 0.32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간 생존율 | 77 | 47 | 19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핵심정책 | 창업지원 | 인력지원 | R&D지원 | M&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계지원 | 판로지원 | 사업지원 (M&A) | 글로벌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정책 | 자금지원 | 지급지원 | 수출지원 | 졸업기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력지원 (생산) | 경영컨설팅 팀 | 경영컨설팅 인력지원 (R&D) | R&D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소기업 지원 재정사업 성과평가

박노욱 · 강희우 · 이상헌 · 표한형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현황 및 기존 연구에서의 쟁점 정리를 출발점으로 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새로운 분류체계 개발과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거 연구에 비해 포괄적인 효과성 분석을 시도했다는 것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사업관리와 성과평가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일반적인 사업 정보와 더불어, 지원 목적(투입요소지원, 시장매칭 지원, 컨설팅 및 정보 제공), 지원대상(규모, 업종, 기술기준, 신용 기준 등), 지원수단(활동 및 수행방식)을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는, 과거 연구에 비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업유형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매출액, 고용인원수, 부가가치에 대해 지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valuation of the Small and Medium - Sized Enterprise Programs

Nowook Park · Heewoo Kang · Sangheon Lee · Han Hyung Pyo

This report develops a new program classification scheme and conducts program evaluation for the small & medium-sized enterprise assistance programs(SME programs). The new classification scheme is based on program goals, method of intervention, activities and target groups. It will be useful to manage and evaluate SME programs to cope with their duplication, overlap and fragmentation issues. The program evaluation results, based on 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 suggests that SME programs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sales, employment and added-values of firms. Although this study provides suggestive evidence on the positive impacts of SME programs based on the most comprehensive data, to gain better insights on the SME program's effectiveness, further studies on their side effects are required.

■ 저자약력

박노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

강희우

서강대학교 수학·경제학 복수 전공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_Madiso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헌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연구교수

표한형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Virginia 경제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중소기업연구원 성과확산센터 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사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장민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16-12

중소기업 지원 재정사업 성과평가

발행 2016년 12월 30일
저자 박노옥 · 강희우 · 이상현 · 표한형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414-2114(代)
홈페이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9,000원
조판 및 인쇄 일지사
I S B N 978-89-8191-849-1 9332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